

제4장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및 은퇴효과 분석

박시내·심규호

제1절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세대(Generation)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genos’에서 유래하는데, 이것의 주요 의미는 ‘새로운 존재의 출현(to come into existence)’이다. 세대에 대한 더 폭넓은 어원을 추적해 보면 출생(出生), 재생산(再生産)뿐만 아니라 역사상의 어떤 시대, 인생의 어떤 시절 혹은 생애주기(life course) 단계, 어떤 가족이나 인종, 종(種)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서구사회의 경우 세대문제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왔으나, 한국에서의 세대담론은 급격한 사회변동 시기의 정치적인 세대담론과 언론의 피상적인 보도가 주를 이뤄왔다. 여기서 ‘세대’라 함은 단순한 동일 cohort의 동년배집단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동일시기에 출생한 개인들은 동질적인 문화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게 되는데, 생물학적 동질성 외에 역사적 동질성이 확보되었을 때 비로소 한 세대로서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가령 미국사회의 베이비 부머들은 전체 인구의 1/4수준에 이르는 막강한 인구 코호트 집단으로 사회변동 요인으로서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후에 출생한 이들은 이전 세대의 권위에 저항하고, 반진문화와 히피문화 및 특유의 개인주의 성향을 발전시켰다. 또한 수적으로 막대한 다수를 점하는 이들은 거대한 소비시장을 구성하였고, 교육 및 노동시장, 소비패턴 등 미국 사회의 여러 측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Ryder, 1965).

그렇다면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어떠한가?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조망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단적으로 말해 이들이 전후 다산시기에 출생하여 근대화와 유신시대를 겪고, 과밀경쟁의 시대를 겪은 산업화 주역임과 동시에 이제는 노동시장에서 정년시기를 앞둔 대규모 인구집단이기 때문이라는 현실적



인 이유 때문이다. 다양한 사회현상의 저변에는 항상 인구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난 50여 년간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는 대규모 인구집단의 진입(進入)과 퇴출(退出) 시기에 발생해왔다. 특히 한국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사회문제는 인구고령화이다¹⁾.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1세기 전부터 고령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해왔으며, 후진국들도 대부분 1960년대 이후 사망률의 저하와 출생률의 감소로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왔다.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단지 인구학적인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다방면에 큰 파급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노동력의 고령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다시 경제발전의 저하, 복지부담의 가중, 고령 실업률 상승 등 잇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가장 우려되는 현실적인 문제는 현재 및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생산성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 연금제도에 큰 부담을 안길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자원분배에 관해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킬 잠재성 또한 내포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인구문제와 고용문제가 얽혀있는 것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2010년)로 본격적인 기업의 정년시기를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고령남성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또한 OECD 국가들의 평균 은퇴연령이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공식적인 은퇴연령보다 이른 시기에 은퇴하는 경향이 발견되는 반면, 한국 고령자들의 실질은퇴연령은 60대 중후반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공식적인 은퇴 이후 고령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늦은 나이까지 취업상태를 유지하며, 이러한 경향은 성별·부문별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고령자들의 직업이동 경로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고령자들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이후 이전 직장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 면에서 현격한 지위의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인구는 712만 명이며, 이 중 취업자 규모는 54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데(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년)」,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이들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면서 숙련노동자의 부족이나 노후대책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1979~1985년 출생자)는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하였거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세대로 부모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와 일부 일자리 경합 내지는 보완·완충적 관계에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인구고령화는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정의된다. UN은 인구구조에서 고령인구의 비중이 4% 미만인 경우 '유년인구국', 4~7%는 '성년인구국', 7% 이상인 경우 '노년인구국'으로 구분하고 있다. 노인인구는 통상적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를 뜻하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 14% 미만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를 '고령 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부른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어서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가 던지고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現況)은 어떠한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어떠한 사회·역사적 경험을 공유했으며, 이들의 고유한 특성들은 객관적인 수치(통계統計)로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노동력 구조에서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세대의 현황은 어떠하며, 이들 두 세대 간 일자리 관계 즉 부문별 노동력 유입(流入) 및 유출(流出) 양상은 어떠한가? 셋째, 베이비붐 세대는 어느 시점까지 노동시장에 잔존할 것이며, 향후 노동 공급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 현황은 어떠하며, 은퇴 이후 이들의 소득수준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통계청의 인구, 고용, 소득 관련 원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였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세대의 개념정의 및 세대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흔히 세대는 코호트(cohort) 개념과 혼재되어 사용되는데, 이에 대한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한국의 세대 지형을 짚어볼 것이다. 또한 세대와 연령계층(Age Class)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만하임(Mannheim, 1952)의 세대론, 릴리(Riley, 1974)의 연령계층이론, 다니페르(Dannefer, 1991)의 생애불평등이론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1.). 한편 해외사례로 미국과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에서의 베이비붐 세대관련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2.).

제3절은 통계청의 인구, 고용, 소득 원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인구추계자료와 인구총조사 10% 표본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등을 사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 및 지역별 분포와 개인특성을 제시하고(1.), 이들의 경제활동 현황 및 특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2.). 또한 가계동향자료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 및 소비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3.).

제4절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효과를 고용과 소득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고용 측면에서는 통계청의 인구추계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전체 및 부문별 노동력 구조를 파악하고 세대 간 일자리 유출 및 유입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1.). 또한 통계청의 노동생명표 작성방식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기대여명과 은퇴연령을 추정(2.)하는 한편 노동력 추계를 통해 향후 노동력 구조를 전망하고자 한다(3.). 마지막으로 가계동향자료를 통해 은퇴가구와 비은퇴가구의 소득대체율 및 소비함수를 추정할 것이다(4.).

제5절은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 이론적 배경

가. 개념정의

베이비붐 세대를 정의하기 전에 먼저 세대(Generation)에 대한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²⁾. 한국사회에서도 베이비붐 세대, N세대 등 세대에 관한 논의가 심심치 않게 개진되어 왔으나, 사실 ‘세대’를 학문적으로 정의내리는 것은 매우 모호한 작업이다. 또한 세대와 함께 코호트(cohort), 연령계층(age strata), 연령집단(age group) 등 유사한 개념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³⁾. 서구의 경우 세대문제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오랜 기간 축적되어왔으나, 사실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학문적이고 진지한 접근보다는 급격한 사회변동 시기의 세대담론 논쟁과 언론의 보도와 관련된 피상적인 논의들이 주를 이뤄왔다.

세대문제를 학문적으로 최초로 체계화시킨 학자는 만하임(Mannheim, 1952)이다 (Bengston, Furlong, Laufer, 1974; Pilcher, 1994). 그는 1928년 ‘세대의 문제’라는 논문에서 세대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과 여러 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세대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그가 논문에서 밝힌 세대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대에 관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던 것은 인간이 영속적인 존재가 아닌 탄생으로 존재하고, 사망을 통해 사멸하는 유한(有限)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동시대에 태어난 개인들을 동일한 세대로 명명할 수 있으나, 이 개념은 단지 개인들 간의 생물학적 기초한 ‘생물학적 세대’이다. 여기서 만하임이 중시한 것은 ‘생물학적 세대’가 아닌 ‘사회·역사적 세대’이다. 그는 동일 시기에 출생한 개인들이 동질적인 문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공동체로서의 강한 연대감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그는 세대를 구체적인 집단이 아닌 ‘사회적 위치’로 파악하였다. 세대가 동일한 사회적 위치는 공유한다는 것은 동일 세대가 동일한 생물학적 특성 외에 일정한 행위, 감정, 사고방식을 지향하는 준거틀을 공유하게 된다는 의미이다(Mannheim, 1952: 291). 즉 만하

2) 세대의 어원을 추적한 나쉬(Nash, 1978)에 따르면, 세대(generation)는 그리스어 'genos'에서 유래하는데, 주요 의미는 ‘새로운 존재의 출현(to come into existence)’이다. 그러나 세대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어원을 추적해보면 그 뜻은 출생, 재생산뿐만 아니라 역사상의 어떤 시대, 인생의 어떤 시절 혹은 생애주기 단계, 어떤 가족이나 인종, 종(種) 등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세대라는 용어는 어떤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와 다른 새로운 존재의 출현이라는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됐는데, 그 용어에는 자신이 속한 집단과의 공통점과 그 밖에 다른 집단과의 차이점이라는 함의가 내재되어 있다(Nash, 1978: 2).

3) 코호트(cohort) 혹은 동년배집단은 동일한 기간 내에 출생한 개인들의 총합으로 정의되며(Bengston et al., 1985), 이 같은 개인 집단은 동일한 역사적 사건과 유사한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사회화된다(Torres-Gill, 1992).



임에 따르면 출생시점의 차이는 사회·역사적 구조에서의 위치의 차이로 귀결되며(Pilcher, 1994: 482), 이러한 위치의 차이가 잠재적 경험의 폭을 결정하고, 경험의 차이가 사고와 감정 및 행위양식의 차이로 귀결된다는 논리이다(출생시점의 차이→ 차등적 경험→ 세대차이). 만하임은 출생시점의 유사성에 기초한 사회적 위치를 ‘세대위치(generational location)’로 개념화하였다.

그러나 만하임의 중요한 관심은 세대의 두 번째 수준인 ‘실제세대(actual generation)’와 ‘세대단위(generation unit)’이다⁴⁾. 만하임은 세대위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사회·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간 구체적 연대감을 형성하였을 때 비로소 실제세대로 발전된다고 보았다. 즉 생물학적 공통성에 기반한 ‘세대위치’는 ‘실제세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만 갖고 있으며, ‘세대위치’ 공유자가 상호 간 연대감을 형성했을 때 ‘실질세대’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본다. 가령 도시청년과 농촌청년은 동시대 출생자로 동일한 세대위치를 점유하나, 동일한 사회·역사적 경험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세대’로서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만하임의 연구 이후 세대연구가 유럽과 미국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재조명받게 된 시기는 1960년대 후반부터이다. 이 시기에 세대 개념이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1960년대 청년학생들의 체제저항운동과 이를 이해하기 위한 실천적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세대연구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세대 개념에 관한 모호성이다. 세대개념을 명료화하기 위한 일련의 논쟁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세대개념의 명료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라이더(Ryder, 1965)가 제시한 것은 세대개념을 친족구조에 국한시켜 사용하고, 만하임류의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강조하는 세대개념은 코호트로 개념화하자는 방안이다. 켈처(Kertzer, 1983) 역시 라이더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코호트나 연령집단을 세대개념과 명료하게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켈처는 라이더와 마찬가지로 ‘세대’는 부모-자녀 세대와 같이 친족계보적인 의미로 엄격히 제한하여 사용하는 한편 ‘연령집단’은 특정 생애 주기 단계(연령)에 있는 사람들로, ‘코호트’는 동년배집단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른 하나의 입장은 만하임부터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코호트적인 세대개념을 인정하자는 입장으로 만하임류의 세대론의 핵심인 역사적 역동성을 담아내자는 입장이다(Spitzer, 1973; Schuman · Scott, 1989; Pilcher, 1994).

특히 켈처(Kertzer, 1983)는 세대의 개념을 네 개의 범주로 개념화하였다. 첫째, 조부모-부모-자녀관계와 같이 ‘친족계보(kinship descent)’ 상 같은 항렬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용법으로 인류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둘째, 세대를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코호트(cohort)’ 즉 동일시기 출생 집단으로 보는 입장으로 인구학 분야

4) 실질세대의 상이한 반응양식에 따라 세대단위로 분화된다.



에서 많이 사용된다. 셋째, 세대를 동일한 생애주기(life stage) 단계에 있는 사람들로 보는 용법으로 이러한 시각에서는 동일한 생애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발달과정에서 동일한 과제에 직면한 집단이라는 데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세대를 특정한 ‘역사적 시기(historical period)’에 생존한 사람들로 보는 용법으로 이러한 용법은 역사학계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대’와 가장 혼용되어 사용되는 개념은 ‘코호트’이다. 벵슨(Bengson et al., 1985)은 두 가지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다. ‘코호트’는 “동일한 시간 내에 출생한 개인들의 총합”으로 정의되며, ‘세대’는 코호트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른 집단과 차이 : 한 집단의 동질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코호트와 세대개념은 중복된 의미로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만하임류의 세대개념이 독자성을 갖기 위해서는 동일시기 출생자라는 조건 외에 한 세대가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사실 경험적 수준에서 이러한 점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실증주의적 전통이 강한 미국 사회학계에서는 세대개념의 애매성을 지적하며, 경험적 조작화가 용이한 코호트 개념을 취하고, 코호트 분석법을 발달시켰다. 이 같은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세대의 학문적 원류는 만하임에서 비롯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만하임의 세대개념이 탁월한 통찰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적 도구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이후 큰 학문적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만하임의 세대개념과 기존의 논의를 토대한다면 한국에서의 ‘세대(Generation)’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 ‘396세대’, ‘N세대’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박길성, 2005). 베이비붐(Baby Boom)은 특정 시기에 출산이 집중적으로 일어나 출생아 수가 폭증하는 상황으로 정의되며, 출생아 수와 출산율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⁵⁾.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후 출생한 집단으로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으나, 여기서는 1955년~1963년 출생

〈표 4-1〉 한국의 세대

세대	출생시기	핵심적인 역사적 경험	사회적 공간	정치·사회의식
베이비붐 세대	1955~1963년	근대화, 유신시대	과밀, 경쟁의 장	현실주의
386세대	1960년대	민주화 운동	대학생활	관념적 민주주의
N세대	1970년 중반 ~1980년 중반	인터넷 혁명	사이버 공간	탈정치적 문화주의

출처: 현대 한국인의 세대경험과 문화(2005년) 박길성 외, p.34

5) 베이비붐 세대의 출생년도를 정의하는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은 출생아 수와 출산율을 고려하는데, 우리는 출산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출생통계는 공식적으로는 1970년부터 존재하며, 이전 시기의 출생아 수는 학계의 추정자료로만 존재한다.

자로 정의내리기로 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전후 시기에 태어나 5.16 군사 구테타를 겪고, 경제개발계획의 근대화과정을 겪은 세대이다. 이들은 반공 이데올로기와 유신시대의 경험을 내재화했으며, 수적 다수로 입시와 취업에 있어서 과밀 경쟁을 겪어 왔고, 산업화의 주역으로 활동하다가 이제는 은퇴에 임박한 세대이다⁶⁾.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그림의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는 약 7,12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며, 성별로는 남성이 3,581천 명(50.3%), 여성이 3,538천 명(49.7%)으로 남성의 비중이 약간 높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년)」). 장래인구추계의 각 세별 인구규모로 산출된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보다 구체적인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의 인구피라미드에서 50세 이후 인구구조는 고출산과 고사망의 피라미드형이나, 이 시기 이후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정책의 시행으로 출산수준은 점차 감소하지만, 가임연

〈표 4-2〉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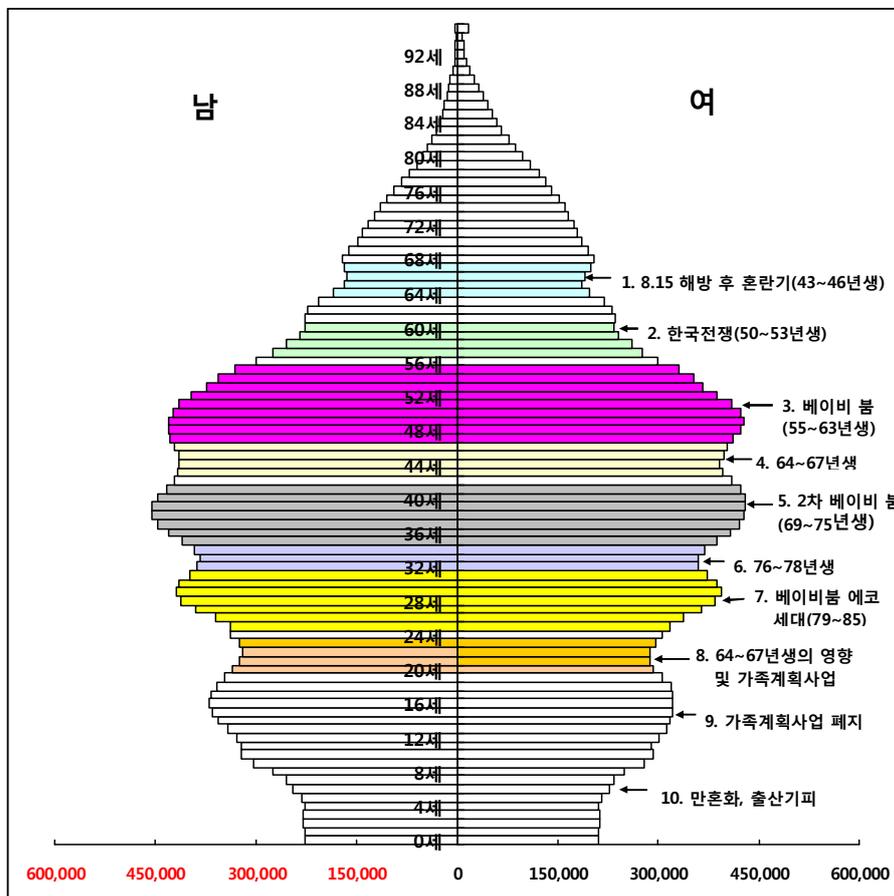
(단위 : 명)

	전체	남성	여성
47세(1963년 생)	841,625	428,648	412,977
48세(1962년 생)	854,550	431,465	423,085
49세(1961년 생)	858,141	429,629	428,512
50세(1960년 생)	848,690	424,525	424,165
51세(1959년 생)	823,550	414,400	409,150
52세(1958년 생)	784,111	396,251	387,860
53세(1957년 생)	742,633	374,712	367,921
54세(1956년 생)	708,728	355,781	352,947
55세(1955년 생)	663,319	331,806	331,513
계	7,125,347	3,581,217	3,538,130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

- 6) 1. 전후의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인한 베이비붐 세대 논의는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다. 미국에서 베이비붐 세대 연구는 이들을 인구학적 다수 집단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변동의 동인으로서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였다(Klein, 1969; Landon, 1980; Russell, 1982; Jamison et al., 1994; Macmanus, 1996). 이에 반해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에 관한 논의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크게 조망받지 못하였던 것은 한국에서의 세대담론이 민주화 세대인 386세대에게 집중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전후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비교집단으로서 논의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2. 386세대는 민주화 과정 및 6월 항쟁을 통해 한국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세대이다. 386세대는 세대실천으로 이어지는 세대단위로서의 역할을 했으며, 이들 세대의 독특한 사회·역사적 경험은 이들 세대가 다른 세대를 주도할만한 동인이 되었다. N세대는 한국사회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하고, 경제적 풍요를 누린 시대에 성장한 세대이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소비패턴의 변화를 주도하고, 다원주의적 가치를 내면화해 가는 시기에 성장했다. N세대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정보화에 친숙하며, 소비문화를 선도한 최초의 세대로 평가받는다.

령인구의 변화에 따라 출생아 수가 변하면서 인구구조가 불안정해진다. 인구 피라미드에서 전후시기인 1950년대 중반 이후 출생아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구규모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지점이 바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이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 인구가 감소하는 지점은 베이비붐 이전 세대의 영향 때문이며, 70년대 전후의 출생아 수의 증가는 2차 베이비붐 세대를 형성하였다. 이후 베이비붐 에코세대(1979~1985년생)에 다시 한번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데,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결혼 및 출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세대’란 동일한 사회역사적 경험이 담보된 개념이다. 이러한 세대개념에 부합한 세대란 ‘4.19세대’, ‘386세대’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심 갖는 것은 ‘인구학적 세대’로 한국의 세 개의 베이비붐 세대(베이비붐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 에코세대)에 주목하였다.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

[그림 4-1] 한국의 인구피라미드(2010년)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해외 여러 국가에도 발생하는 인구현상이다⁷⁾. 다음의 <표 4-3>은 한국과 미국, 일본 세 국가의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이다. 한국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1955~1963년 출생자를 베이비붐 세대로 정의한다. 이들의 현재 연령은 47~55세이며, 총 인구수는 7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한다(2010년 기준).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1947~1949년 출생자로 총인구수 69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며(2000년 기준)⁸⁾, 미국은 1946~1964년 출생자로 총인구수는 77,980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26.0%를 차지한다(2006년 기준). 세 국가 중 미국의 베이비붐 출생 시기 범위가 가장 넓으며, 인구규모와 비중 역시 가장 크다.

<표 4-3> 한국과 미국,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2010)

	한국	일본	미국
출생시기	1955~1963년	1947~1949년	1946~1964년
연령(2010년)	47~55세	61~63세	46~64세
인구규모	712만명 (전체 인구 중 14.6%) 2010년 인구추계	678만명 (전체 인구 중 5.3%) 2005년 인구추계	77,980만명 (전체 인구 중 26.0%) 2006년 인구추계
합계출산율(TFR)	-	4.0 이상	2.94~3.76 ⁹⁾

나. 이론적 논의

1) 세대론

사회 분화의 형태 중 연령에 의한 분화(age differentiation)는 성분화(sex differentiation)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지닌 것이지만 학문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연령에 따른 역할구분과 성숙도의 차이, 출생시점에 따른 역사적·문화적 경험의 차이는 세대 간의 사고방식과 행위양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사회학에서 최초로 연령과 세대에 주목하고, 세대에 관한 체계적인 사회학적 연구를 개진한 것이 칼 만하임(Mannheim, 1952)이라는 데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7) 영국은 1946~1948년 출생자, 이탈리아는 1946~1948년 출생자를 베이비붐으로 정의한다.

8)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출생 년도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다음과 같다. 1947년의 출생아 수는 2,679만 명(합계출산율 4.54), 1948년의 출생아 수는 2,682만 명(합계출산율 4.4), 1949년 출생아 수는 2,697만 명(합계출산율 4.32)이다.

9) 베이비붐 주요 시기의 합계출생률 및 출생아 수는 다음과 같다. 베이비붐 시작 년도인 1946년의 TFR은 2.94 출생아 수 3,411천 명이며, 베이비붐의 정점인 1957년의 TFR은 3.76이며 출생아 수 4,300천 명, 베이비붐 종료 년도인 1964년의 TFR은 3.19 출생아 수는 4,027천 명이다.

(Bengtson, Furlong & Laufer, 1974; Pilcher, 1994.)¹⁰⁾. 인간은 출생과 사망을 통해 세대교체를 겪는 ‘생물학적 세대’임과 동시에 이미 축적된 역사와 문화의 바탕과 사회적 힘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역사적 세대’로 발전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만하임은 세대를 구체적 집단이 아닌 ‘사회적 위치’(social location)로 파악하였다. 즉 ‘계급’이 경제 권력구조에 기반을 둔 사회적 위치인 것처럼, ‘세대’ 역시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에 기반을 두었지만 생물학적인 특성 이상의 사회적 위치를 점유한다. 즉 생물학적 요인은 세대현상을 결정하는 기층(基層)이 되지만 세대현상은 생물학적으로는 환원할 수 없는 사회·문화·역사적 범주라는 것이다.

만하임은 세대개념을 두 개의 수준으로 구성하였는데, 첫째 수준은 출생시점의 유사성에 기초한 사회적 위치를 ‘세대위치’(generational location)로 개념화하고, 세대위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역사적 문화적 토양 위에서 출생 성장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세대개념의 두 번째 수준은 그가 실질적 의미의 세대라고 간주한 ‘실제세대’(actual generation/generation as an actuality)와 ‘세대단위’(generation unit)이다. 세대위치(세대구조)는 실제세대(세대형성)나 세대단위(세대실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만 갖고 있는 개념이며, 세대위치 공유자가 연대감을 형성할 때 비로소 ‘실제세대’로 발전되고 ‘실제세대’가 몇 개의 ‘세대단위’로 분화될 수 있다¹¹⁾. 여기서 만하임의 주요 관심사는 세대의 형성(실제세대), 즉 생물학적 세대가 어떻게 사회적·역사적 세대로 발전하는가의 문제이다. 만하임은 지식사회학적 입장을 견지하여 (1) 출생시점의 차이는 사회·역사적 구조에서 위치의 차이를 가져오며, (2) 그러한 사회적 위치의 차이는 세대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가져와, (3) 사고, 감정, 행위양식의 차이를 낳는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만하임이 설파하는 세대가 궁극적으로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세대의 형성에 관한 만하임의 개념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경험의 성층화(stratification of experience)’ 개념이다. 개인의 생애사는 출생 이후 축적된 경험들이 쌓여 이뤄지며,

10) 만하임은 1928년 “세대의 문제”라는 논문을 통해 세대에 관련된 다양한 시각과 여러 주제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세대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박재홍, 2005).

11) 세대에 관한 논의는 이론적 수준에서 ‘세대구조(structure)’, ‘세대형성(formation)’, ‘세대실천(practice)’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세대구조’란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갖으면서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공유하는 객관적 위치이다. 세대구조는 세대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세대차이, 세대격차를 말할 수 있다. 세대구조 안에서 만하임이 설정한 세대위치가 설정된다. ‘세대형성’은 세대위치를 공유한 사람들이 특정한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공유하고 연대의식을 갖게 되어 새로운 사회변동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것으로 만하임은 이것을 실제세대로 명명했다. 세대형성은 즉자적 세대(generation in itself)가 대자적 세대(generation for itself)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세대형성의 요인과 과정은 사회역사적 상황에 따라 매우 상이하지만, 공통의 역사·사회적 경험을 통한 정체성과 자의식 및 연대감의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대실천’은 세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보다 강한 결속력을 가지면서 세대가 사회변동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말한다. 만하임은 이를 세대단위로 명명하기도 하며 이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수준의 운동세대라고 할 수 있다(박길성, 2005; 29-30).



이러한 경험들의 배열은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세대는 경험의 성층화에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단순히 누적되는 것은 아니며, 만하임은 특히 소년기의 ‘기층경험(primary stratum of experience)’이 그 이후 경험에 의미와 성격을 부여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소년기는 생애주기 단계로 보아 대략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로 이 시기의 역사적·문화적 경험이 의식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시기에 형성된 의식을 이후 쉽게 변하지 않는다¹²⁾. 만하임은 이를 ‘결정적 집단 경험’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이것을 세대구분의 기준으로 보았다.

그러나 만하임의 세대에 관한 통찰력이 시대를 앞서간 것은 분명하였으나, 개념의 추상성과 분석적 도구 정립의 실패로 이후 큰 진전을 보지 못한다. 그 후 만하임의 세대론이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1960년대 후반 미국과 유럽의 사회과학자들이 1960년대 구미사회의 청년학생들의 체제저항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실천적 관심에서 세대연구 및 논의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였기 때문이다¹³⁾. 라이더(Ryder, 1965)는 세대개념을 친족구조에서의 시간단위로 국한하여 사용하고, 만하임이 말한 역사적 경험의 공유를 강조하는 시간적 분석단위는 ‘코호트’로 개념화하였다.

컬처(Kertzer, 1983) 역시 라이더의 입장에 동의하여 코호트나 연령집단(age group)을 세대개념과 명확하게 구분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컬처는 세대개념에 관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세대를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첫째, 세대개념을 조부모-부모-자녀와 같이 ‘친족계보’에서 같은 항렬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용법이다. 둘째, 세대를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코호트’(cohort), 즉 ‘동일시기 출생 집단’으로 보는 입장이다. 동일 코호트로서의 세대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동일한 생애주기단계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기 때문에 의식과 행위 양식 면에서 동질적일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시각은 칼 만하임의 시각과 유사하다. 셋째, 세대를 동일한 ‘생애주기’(life stage) 단계에 있는 사람들로 보는 입장이 있다¹⁴⁾. 마지막으로 세대를 특정한

12) 슈만과 스콧트(Schuman, Scott, 1989)는 17~25세를 세대 형성기로 규정하고 18세 이상의 조사대상자들에게 지난 50년간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게 하였는데, 코호트별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집합적 기억들(collective memories)’의 대부분이 10대와 20대 초반에 일어난 사건들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기의 경험이 의식형성의 기반이 되며 이 시기에 형성된 의식이 지속적인 속성을 갖는다는 만하임의 가설을 지지한다(박재홍, 2005).

13) 세대구분에 관한 논란은 세대를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세대구분에 대한 관점은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세대를 연대기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마리아스(Marias, 1970)의 이론이다. 그는 생애 75세까지의 연령을 15세 간격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세대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의 관점은 연대기적인 시간보다는 주관적·내면적 시간 개념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델타이, 핀더, 만하임 등이 이러한 관점을 취한다. 특히 만하임은 세대를 연대기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역사과정을 사회문화적 힘의 역동성의 매개없이 생물학적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생물학적 결정론이라고 논박하면서 세대구분보다는 세대형성 문제에 초점을 둔다(박재홍, 2005; 55).

14) 예컨대 청소년세대, 대학생세대에 관한 연구들이 이 입장에 속한다.

‘역사적 시기’에 생존한 사람들로 보는 입장으로 넓은 범위의 코호트를 포함한다¹⁵⁾.

그러나 세대에 관한 이러한 실증적 접근에 대해 마샬(Marshall, 1983)은 반기를 든다. 그는 만하임의 세대개념으로의 복귀를 주장하며, ‘코호트’는 자료를 조작하는 방법론적 개념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는 세대를 ‘사회적으로 실재하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세대는 질적 차이를 갖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설파한다. 즉 코호트는 양적 차이를 갖는 명목적(名目的) 범주로, 세대는 질적 차이를 갖는 실재적(實在的) 범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세대론은 사회변동에 수반된 상이한 연령집단 사이의 물질적·비물질적 기회나 자원의 격차에 관심을 갖는다. 세대현상은 동일한 형태가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 경제, 가족 상황 등에서 다양하게 전개된다. 어떤 사회에서는 주로 경제·인구변동 차원에서나 복지정책의 개혁을 둘러싸고 세대갈등이 제기되는가 하면, 어떤 사회에서는 문화적·정치적 이념지향에서 세대갈등이 격렬하게 표출되는데, 이는 각 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만하임은 세대갈등이 사회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한국사회와 같이 급격한 변동을 겪는 사회일수록 역사적·사회적·문화적 경험의 차이가 클 것이기 때문에 세대격차도 심화되고 갈등의 소지도 커질 것이다. 서구에서 1960년대 체제저항운동이 세대문제에 관해 높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 청년층과 기성층 간의 세대갈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최근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의 급격한 발달 등은 세대갈등과 연령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다¹⁶⁾.

나. 연령계층화이론(age stratification theory)

연령계층화이론은 1970년대 초반 릴리(Riley)와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연령에 관한 거시이론이다. 연령계층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연령’을 사회구조에서 개인을 할당하는 주요변인으로 파악한다(Riley, Foner & Waring, 1988). 릴리 등은 ‘연령의 사회학(Sociology of Age)’이라는 논문을 통해 연령이 사회조직과 사회계층의 핵심원리임을 주장하였다. 기존의 계층 이론이 성, 인종, 학력 등의 변수를 계층 형성에 중요하게 고려한

15) 이 용법은 역사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전쟁 체험세대, 새마을운동 세대와 같이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세대를 말한다.

16) 만하임의 세대사회학이 여러모로 뛰어난 이론임에는 분명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비판받아 왔다. 첫째, 만하임의 세대개념은 사회운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세대현상을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가령 사회변동의 동인이 되는 사회운동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는 일상적인 세대 문제는 만하임적 시각에서는 실질적인 세대로 각인(刻印)되지 않는다. 둘째, 만하임의 세대개념이 지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실증적 연구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대해 필처(Pilcher, 1994: 492)는 만하임의 연구가 세대의 사회·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뛰어난 이론이긴 하지만, 이 이론을 경험적 연구에 적용하기엔 매우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한다.



반면, 연령에 의한 계층화 가능성을 다루지 않았던 것을 반추해볼 때 이 이론이 갖는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틸리 등에 따르면 사회는 연령에 따라 구조화되고, 사회구성원은 연령에 따라 층화되며, 자원과 기회의 분배방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연령이 매우 중요한 구분 기준이 된다. 연령계층(age strata)은 연령이나 비슷한 생애주기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상이한 보상을 구조화한다. 연령계층화이론에서 말하는 사회는 사람과 역할이 연령에 따라 등급지어진 계층화체계이며, 여기서 연령은 성이나 인종처럼 구조화된 사회적 불평등의 기반 중 하나가 된다¹⁷⁾. 특히 톨리는 ‘연령’이 사회적 보상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 특정한 연령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보다 자원과 보상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 간의 불평등이 야기된다. 예컨대 중장년층이 사회적 보상을 가장 많이 받으며, 청년이 그 다음으로 사회적 보상을 차지하고, 노령층은 사회적 보상을 가장 적게 받는다. 낸시(Nancy Foner, 1988)는 연령에 기반한 사회적 불평등이 항상 연령계층 간의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개연성과 잠재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연령계층화론에서는 연령계층 간 갈등을 ‘관념적(ideational) 갈등’, ‘권력 갈등’, ‘배분적 갈등’으로 구분한다. ‘관념적 갈등’은 기본가치와 목표의 충돌에 기인하는 갈등으로 연령계층 간의 이데올로기, 태도 등에서의 차이가 갈등으로 표출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질서, 기성세대에 대항했던 대학생들의 저항운동이 대체로 이러한 유형의 갈등에 속한다. 두 번째로 ‘권력 갈등’은 어떤 연령계층이 특정 연령계층에 대해 정당치 못한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한다고 여길 때 발생된다. 청년단축에 대한 집단적 반발과 이에 따른 연령계층 간 갈등이 적절한 예이다. 마지막으로 ‘배분적 갈등’은 각 연령층이 부담하는 상대적 기여와 보상의 상대적 몫을 둘러싼 갈등이다. 인간은 이기적이며,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여는 줄이고 보상의 몫은 늘리고자 하며, 기여의 몫에 비해 보상이 불확실할 경우에 연령계층 간, 세대 간 배분적 갈등은 촉발하게 된다.

연령계층화이론의 ‘배분적 갈등’은 최근 미국사회에서의 일련의 ‘세대 간 형평성(generational equity)’ 논쟁과 맥이 닿아있다¹⁸⁾. 미국의 대표적인 세대연구자 벵슨(Bengson, 1993)은 ‘세대 간 형평성’ 논쟁을 통해 인구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추세가 새로운 유형의 세대갈등

17) 연령계층화이론은 이전의 만하임류의 세대갈등의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평가되고 있다(박재홍, 2005).

18) 이 논쟁에서는 연령집단 간의 불평등(inequality)이 연령집단 간 비형평(inequity)논쟁으로 바뀌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이란 각 집단에게 가용한 자원의 집단 간 차이를 뜻하나, 비형평은 한 집단이 실제 받는 것과 받아야 할 것의 격차를 뜻한다(Pampel, 1998). 한편 세대 간 비형평을 문제 삼는 일련의 논의들 한편에는 세대 간 비형평이 과장되어 있다는 반론이 있다. 이들은 고령층과 아동, 청년층을 서로 경쟁적인 세대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동맹자 관계로 파악하며, 노인인구의 성장에 관한 우려와 노인의 정치적 세력화는 과장된 것이며, 연령집단 간의 정치적 긴장이나 갈등에 관한 주장들은 확증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을 출현시켰다고 말한다. 요컨대 정부의 복지예산이 노년층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가 심각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이에 대한 세대 간 시각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대 간·연령집단 간 갈등은 첨예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톰슨(Thomson, 1993)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사회에서 고령자들을 위한 혜택의 증가되었고, 젊은층은 자신들의 경제력을 희생하면서까지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세금을 내는 세대 간 편애(favoritism) 현상은 과거의 세대 간 교환의 유형을 역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비단 서구사회에서만 적실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한국사회도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인구학적 추세로 인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¹⁹⁾.

연령불평등은 크게 두 개의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박경숙, 2004). 우선 권력과 제도적으로 구조화된 연령계층화의 결과로서 연령불평등의 차원이 존재한다. 연령계층화과정은 정치적·권력적으로 만들어진다. 연령불평등은 연령동학의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제도와 사회적 관계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령불평등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연령계층화의 사회맥락과의 유관성을 밝히는 데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애나 세대에 따른 기회나 불리의 불평등한 경험이 어떻게 사회·구조적으로 형성되는가를 조명하는 관점의 이론화가 연령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연령불평등을 규명하는 이론은 어떻게 연령계층화 방식이 권력·정치·사회적으로 서로 연결되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세대 결정론적 사회변동론이나 맥락을 간과한 생애분석은 불평등과 연령계층화의 역동적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다. 연령계층화나 생애 및 세대현상에 대한 이해는 그 안에 함축된 다른 실질적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전제해야 한다.

연령불평등의 두 번째 차원은 연령자체가 자원획득의 기준이 되어 연령집단 간 불평등 관계를 구조화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렇게 연령이 일종의 사회적 배제와 권력의 점유 기준으로 작동하는 구조나 관계를 연령주의(Ageism)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연령주의는 구조화된 관계(structured relation)로서, 특정 연령층에 대한 구조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 배척현상을 가리킨다.

맥밀린과 마샬(McMullin & Marshall, 2001)은 연령주의를 연령차별구조와 이데올로기로 구분하고 있다. 연령차별 구조는 특정 연령집단의 사회적 기회나 자원을 박탈하는 구조와 제도, 이에 기초한 행위를 의미한다²⁰⁾. 반면 이데올로기로서의 연령차별주의란 연령에 따른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신념, 가치, 태도를 의미한다. 흔히 제도나 구조 수준에

19) 국민연금수급에 있어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20) 예를 들어 정년제는 노년기의 노동기회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전형적 연령차별제도로써 간주되고 있다. 여러 사회에서 공식적인 정년규정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노동, 고용, 훈련 기회에서 연령차별 현상은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한다(Palmore, 1990).

서 실행되는 연령차별행위는 연령차별 이데올로기를 통해 정당화된다. 흔한 예로 고령 노동력을 적당한 시기에 퇴출시키는 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없이는 이 제도가 장기간 유지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반면 장유유서, 연공서열, 종신제 등 젊은 연령층의 지위에 불리한 사회적 관계와 이념도 존재한다. 최근 사회보험제도를 둘러싸고 서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형평성 논의에서도 노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젊은 세대의 불평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처음 연령계층화론이 제기되었을 때, 이 이론이 기존에 설명하지 못했던 사회동학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노년학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생애불평등 연구나 고령자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등의 연구가 많은 성과를 보였던 반면 연령계층화이론은 그다지 학문적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연령계층화이론이 불평등관계를 설명하는데 취약하다는 점이다(Streib, 1984; 박경숙, 2004). 불평등한 관계란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자원, 권력 등이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속성을 지녀야 하는데, 초기 연령계층화 이론가들은 연령에 따른 계층을 이미 주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연령불평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는다. 둘째, 연령계층화 모델 자체에 한계이다. 이 이론은 사회적 보상의 분배를 설명하는데 연령의 영향력을 과다하게 강조한다고 비판받았다. 또한 연령계층 모델은 동일한 출생 코호트에 속한 사람들 간에 변이가 거의 없다고 가정하지만, 동일 코호트 내에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노령화를 경험한다. 즉 연령계층 모델은 동일 코호트 내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를 갖는다.

다. 생애불평등이론

연령 차이를 낳는 중요한 한 축은 생애(life course)이다. 세대론과 연령계층이론이 사회적 구조 내에서 집단적인 경험과 불평등을 다루는 거시이론이라고 한다면, 생애론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생애에 따른 기회의 지속과 변화과정을 다룬다. 중요한 생애효과로 지적할 수 있는 시간의 속성은 시간, 순서, 배열, 경로의존성 등이다(은기수, 1999 ; 박경숙, 2004).

현재 어느 정도의 기회와 자원을 획득하고 있는가는 이전 생애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생애과정이 경로의존성을 띠게 되는 것은 생애의 제도화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개인의 생애는 결혼시기, 입직시기, 출산과 양육시기, 은퇴기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과정들로 구성되며, 새로운 역할관계로의 진입이나 주된 역할관계에서의 이탈은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주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제도와 규범 안에 구속되기 마련이다.

오란드(O'Rand, 1996)는 생애과정에서 지위와 명망이 소수에 의해 독점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누적된 불리와 혜택'의 생애특성을 강조한다. 그녀는 특히 노년층에 주목하

여, 노년층의 불평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심각하고, 국가의 많은 복지적 노력이 있었음에도 이들의 불평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그녀는 이것(노년층의 불평등의 심화)이 생애를 통한 제도적·구조적 기회의 불리나 이익이 누적된 효과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제학적 접근은 이러한 사회적 제도와 개인의 지위획득 과정 사이의 장기적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으며, 은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안정적 노동경력자’나 ‘단일연금체계’를 가정함으로써 생애과정의 누적된 불리와 차이를 과소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오란드와 같이 생애불평등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기회구조와 생애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기회구조 속에서 누리게 된 개인의 유리한 위치는 보상을 제공받고, 보상의 누적은 보다 쉬운 기회를 가능케 하여 소수에 의한 권력자원 독점이 가능케 되는 것이다. 제도나 계층구조에 의해 할당된 기회나 자원이 생애를 통해 누적적으로 불리하게 혹은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계층구조는 생산, 재생산된다. 개인은 기회구조와의 끊임없는 상호과정 속에서 성향체계를 발달시키게 되는데, 다네퍼(Dannefer, 1991)는 생애불평등을 ‘지속형’(constancy), ‘분리형’(divergency), ‘U자형’(U-shaped), ‘촉발형’(trigger event), ‘수렴형’(convergence)으로 구분하였다.

‘지속형’은 생애과정 초기에 경험한 불리와 혜택의 차이가 이후 생애과정에서도 지속되는 경향을 가리킨다. 이 경우 시간의 효과는 음도 양도 아닌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분리형’과 ‘수렴형’에서는 시간의 부정적, 긍정적 효과가 확인된다. ‘분리형’은 불평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화되는 경우이며, ‘수렴형’은 초기 불평등이 시간에 따라 완화되어 나타난다. ‘촉발형’은 불평등이 일정기간 항상성을 띠다가 어느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심화되는 경우이며, ‘U자형’은 초기 심한 불평등 수준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완화되었다가 다시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우이다.

다네퍼의 생애불평등 유형 분류를 살펴보면 세대와 생애는 어느 시점이든지 항상 결합되어 서로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사회적인 사건들은 생애과정의 규범적 구속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약화를 조성하여 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경기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이 개인의 생애에 미치는 영향은 계층에 따라 상이하다. 일례로 경제위기가 모든 계층에 동일하게 위협적인 것은 아니며, 위기에 노출되고 영향받기 쉬운 계층은 일반적으로 생애과정 속에서 만성적으로 위기를 경험하는 집단일 것이다.

생애불평등론이나 세대론 모두 연령집단 간의 기회나 자원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세대론이 연령집단들 사이에 제도나 사회변동에 따른 기회와 자원의 분배 효과를 강조하는 반면 생애불평등은 제도와 삶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 불평등의 지속과 변화를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세대론과 생애불평등이론이 ‘연령’을 사회계층화의 중요한 축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2. 해외사례 검토

가. 미국

1) 현황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2차 세계대전 후 1946~1964년의 18년간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다. <표 4-4>의 미국 센서스국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인구규모(2006년 기준)는 총 77,980천 명으로 전체 인구(299,924천 명)의 26.1%를 차지한다. 성별로는 남성은 38,275천 명(49.1%), 여성은 39,705천 명(50.9%)로 여성의 비중이 1.8%p 높다.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규모를 각 시기별로 살펴보면 1970년 인구 총수는 2000년 78,310천 명, 2006년 77,980천 명이며, 2030년에는 57,793천 명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로 인하여 2010년 이후 이들의 총 인구수 및 비중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²¹⁾.

<표 4-5>는 미국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를 다른 연령계층과 비교한 것이다. 전체 인구를 유년층(0~17세), 청장년층(18~41세), 베이비붐 세대(42~60), 고령층(61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각각 연령계층별 인구수와 비중을 살펴보면, 유년층은 73,736천 명(24.6%), 청장년층은 99,808천 명(33.3%), 베이비붐 세대 77,980천 명(26.1%), 61세 이상은 47,875천 명(16.0%)이다. 2006년 인구 중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6.1%로 미국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베이비붐 세대에 속함을 알 수 있다²²⁾.

<표 4-4> 미국 베이비붐 세대의 성별 인구규모(1970~2030년)

(단위 : 명, %)

년도(연령)	전체	남성	여성
1970년(6세~24세)	72,386,007(100.0)	36,369,345(50.3)	36,006,662(49.7)
1996년(32세~50세)	76,968,012(100.0)	-	-
2000년(36세~54세)	78,310,361(100.0)	38,679,407(49.4)	39,630,954(50.6)
2006년(42세~60세)	77,980,296(100.0)	38,275,051(49.1)	39,705,245(50.9)
2030년(66세~84세)	57,793,135(100.0)	26,054,999(45.1)	31,738,136(54.9)

출처: U.S. Census Bureau, Decennial Census 1970~2000

U.S.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 as of July 1, 2006

U.S. Census Bureau, Population Projections as of July 1, 2008

2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aging)를 감안하면 총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다. 그러나 표의 1970년과 1996년의 베이비붐 세대의 총인구수는 2000년에 비하여 더 적게 나타난다.

22) 2006년도 인구추계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2010년의 추계자료의 수치와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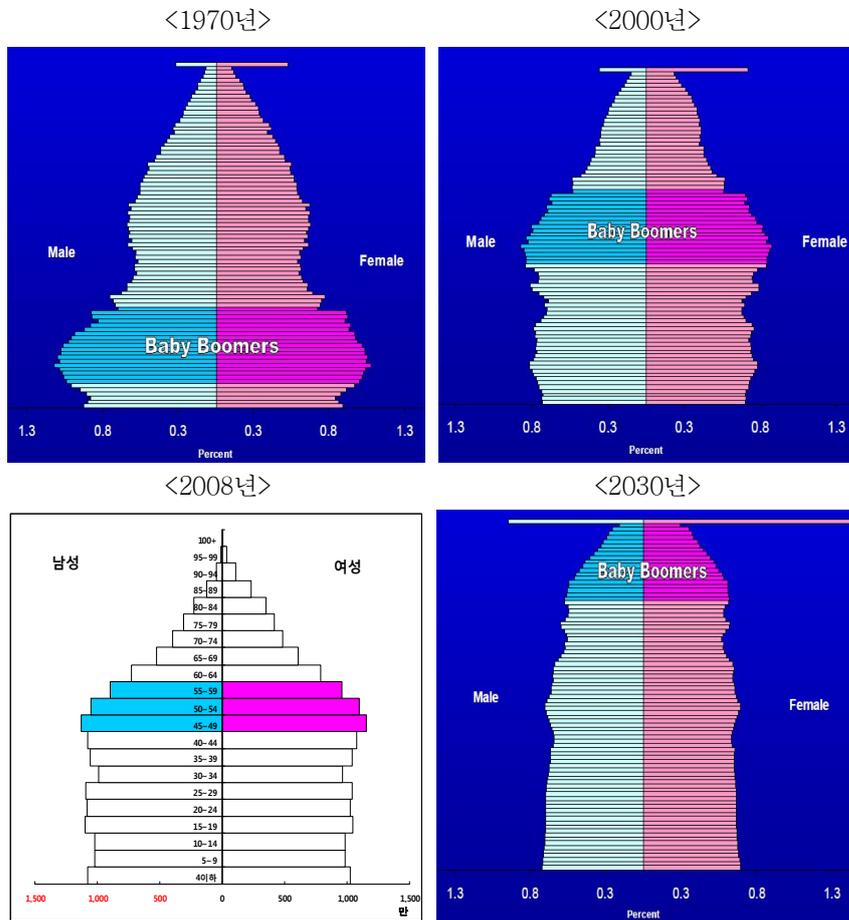
<표 4-5> 미국의 연령계층별 인구규모(2006년)

(단위 : 명, %)

연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299,398,484(100.0)	147,512,152(100.0)	151,886,332(100.0)
0~17세	73,735,562(24.6)	37,734,707(25.6)	36,000,855(23.7)
18~41세	99,807,722(33.3)	50,787,951(34.4)	49,019,771(32.3)
42~60세	77,980,296(26.1)	38,275,051(26.0)	39,705,245(26.1)
61세이상	47,874,904(16.0)	20,714,443(14.0)	27,160,461(17.9)

출처: U.S.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 as of July 1, 2006

제4장



출처 : U.S. Census Bureau, Decennial Census 1970, 2000 U.S.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 as of July 1,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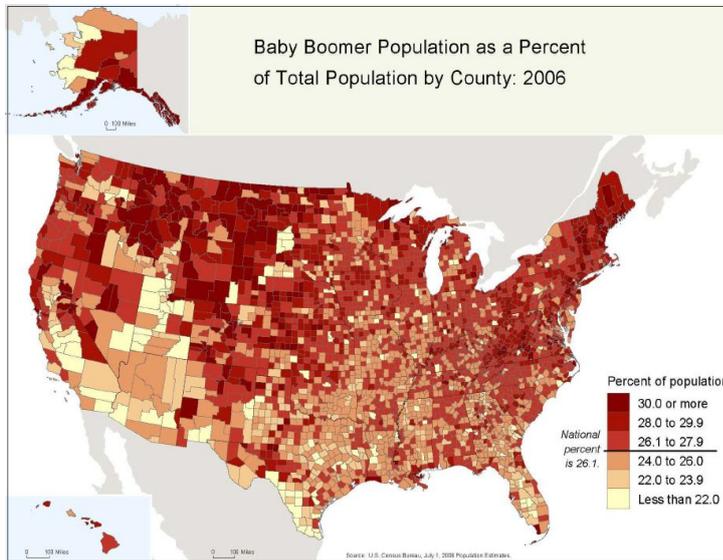
[그림 4-2] 미국의 인구피라미드(1970~2030년)

[그림 4-2]는 미국의 인구 피라미드이다. 2000년 전체 인구 282,172천 명 중 베이비붐 세대는 78,310천 명(27.8%)이며, 2006년 전체 인구 299,398천 명 중 베이비붐 세대는 77,980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6.0%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시기가 지날수록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다.

[그림 4-3]과 <표 4-6>은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지역별 분포이다. 지역별로는 남부 지역이 28,060천 명으로 전체 베이비붐 인구의 36.0%를 차지하며, 중서부와 서부, 북동부는 각각 17,569천 명(22.5%), 17,422천 명(22.3%), 14,929천 명(19.1%)을 차지한다. 주별 베이비붐 인구수 상위지역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순이며, 주별 베이비붐 인구 비중 상위지역은 버몬트(30.1%), Maine(29.8%), New Hampshire(29.7%), Montana(28.7%), Connecticut(28.1%) 순으로 나타난다(<표 4-6>).

<표 4-7>은 미국 베이비붐 세대의 주요 특성이다. 인종 분포는 백인이 82.2%, 흑인 11.6%, 아시아계 4.3% 순이며, 전체의 65.6%가 기혼자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12.5%, 고졸 29.8%인 반면 대졸 28.9%, 대졸 이상 28.8%로 이전 세대에 비해 고학력자(대졸 이상)의 비중(57.7%)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74.1%가 고용되어 있으며, 실업률은 3.3%이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22.4%를 차지한다. 이들의 소득구성을 원천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91.8%로 가장 높으며, 연금소득 11.3%, 사회보장소득은 10.4% 순이다.

(단위 : %)



출처: U.S.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 as of July 1, 2006

[그림 4-3] 미국 베이비붐 세대 지역별 분포(2006년)

〈표 4-6〉 지역별 베이비붐 인구 상위지역

(단위 : 명, %)

순위	Region	인구 수(비중)
1	남부	28,060,126(36.0%)
2	중서부	17,569,066(22.5%)
3	서부	17,421,670(22.3%)
4	북동부	14,929,434(19.1%)
순위	State	인구 수
1	캘리포니아	8,992,331
2	텍사스	5,665,790
3	뉴욕	5,110,668
4	플로리다	4,652,377
5	펜실베이니아	3,421,875
순위	State	비중
1	Vermont	30.1
2	Maine	29.8
3	New Hampshire	29.7
4	Montana	28.7
5	Connecticut	28.1

출처 : U.S.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 as of July 1, 2006

〈표 4-7〉 미국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

인종	백인	82.2%
	흑인	11.6%
	아시안	4.3%
	기타	1.9%
혼인상태	기혼	65.6%
	사별	2.7%
	이혼 및 별거	20.0%
	미혼	11.7%
교육수준	고졸이하	12.5%
	고졸	29.8%
	대졸	28.9%
	대졸이상	28.8%
취업상태	취업	74.1%
	실업	3.3%
	군인	0.1%
	비경제활동	22.4%
소득구성	근로소득	91.8%
	사회보장소득	10.4%
	연금소득	11.3%
	Food Stamps	6.9%

출처 : U.S.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 as of July 1, 2006

U.S. Census Bureau, 2006 American Community Survey(ACS)



2) 관련논의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 전체 인구의 1/4 수준에 이르는 막강한 인구 코호트 집단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왔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미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에 관련된 학문적 연구들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미국에서의 논의는 다음의 두 가지 기류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코호트의 크기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점이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고령화로 인한 연금 등 세대 간 불평등에 관한 일련의 논쟁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시기의 인구 코호트의 크기가 클 경우 과열 경쟁에 따른(가령 입시, 취업 등) 부정적 효과가 야기된다. 반면 세대 간 단결을 성취하였을 경우, 수적 과위를 활용하여 막강한 정치·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특히 1970년대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코호트의 크기가 취업 및 상대적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Freeman, 1979; Welch, 1980). 이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코호트의 크기가 노동시장의 첫 단계에서 불리한 위치를 점하게 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리의 정도가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으로는 베이비붐 세대의 상대적 임금수준 등 노동시장 성과는 교육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견해도 있다²³⁾.

한편으로 미국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사회 변동요인으로서 미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후 세대인 이들은 이전 세대의 권위에 저항하고, 반전문화와 히피문화 및 특유의 개인주의 성향을 발전시켰다. 또한 수적으로 막대한 다수를 점하는 이들은 거대한 소비시장을 구성하였고, 소비를 통해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추구해 나갔다(Dychtwald, 1999).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특유의 개인주의를 공고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부모세대의 독립적인 양육방식에 기인한 것이다(Weiss, 2000). 이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권위에 저항하고, 교육 및 노동시장, 소비패턴 등 미국사회의 여러 측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Ryder, 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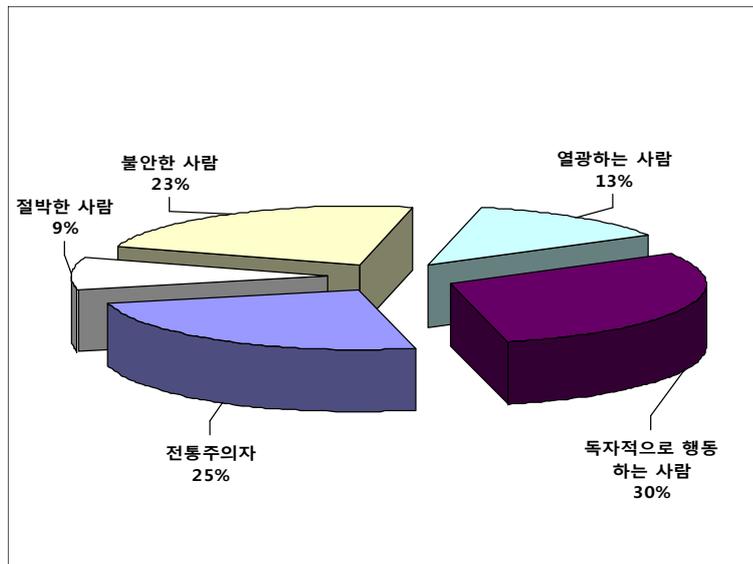
1990년에 들어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60대와 70대로 넘어가는 ‘고령 붐 세대(Boomerizing of old age)’가 되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고령자 이익단체인 ‘전미은퇴자협회(AARP)’는 베이비붐 집단을 다섯 개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절박한 사람들이다(9%). 이들은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저축할 자금이 없고, 여성의 비중이 높다. 둘째, 불안한 사람들이다(23%). 이들은 은퇴 자금을 대해 만족하지 않으며, 계속

23) 베이비붐 세대의 상대임금효과를 분석한 Welch(1979년)에 의하면 고졸 이하의 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의 초기의 불리성을 점차 극복해 나가는 반면, 대졸의 근로자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불리성을 더해간다고 주장한다.



일하기를 원하며 은퇴에 대해 비관적이다. 셋째, 전통주의자이다(25%). 이들은 정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강력히 믿고 신뢰하는 집단으로 이들은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넷째,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30%). 이들은 고학력·고소득자이며, 투자에 적극적인 집단으로 은퇴자금에 만족하는 사람들이다. 마지막 유형은 은퇴에 열광하는 사람들이다(13%). 이들은 은퇴에 대해 낙관적이며, 은퇴 후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집단이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면서 야기된 문제는 연금 등 재정 분배와 관련된 세대 간 비형평성(Generation inequity) 논쟁이다. Kotlikoff(1992)은 고령자들은 자신이 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반면 젊은층은 정부로부터 받을 혜택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세대정책은 균형이 흐트러진 것이다. 그는 아동에 비해 고령자의 유리한 위치를 지적한다. 반면 이러한 주장이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사회보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만 유독 세대 간 비형평 문제가 강하게 제기된 것은 연령차별주의(Ageism) 등 미국사회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논쟁은 일견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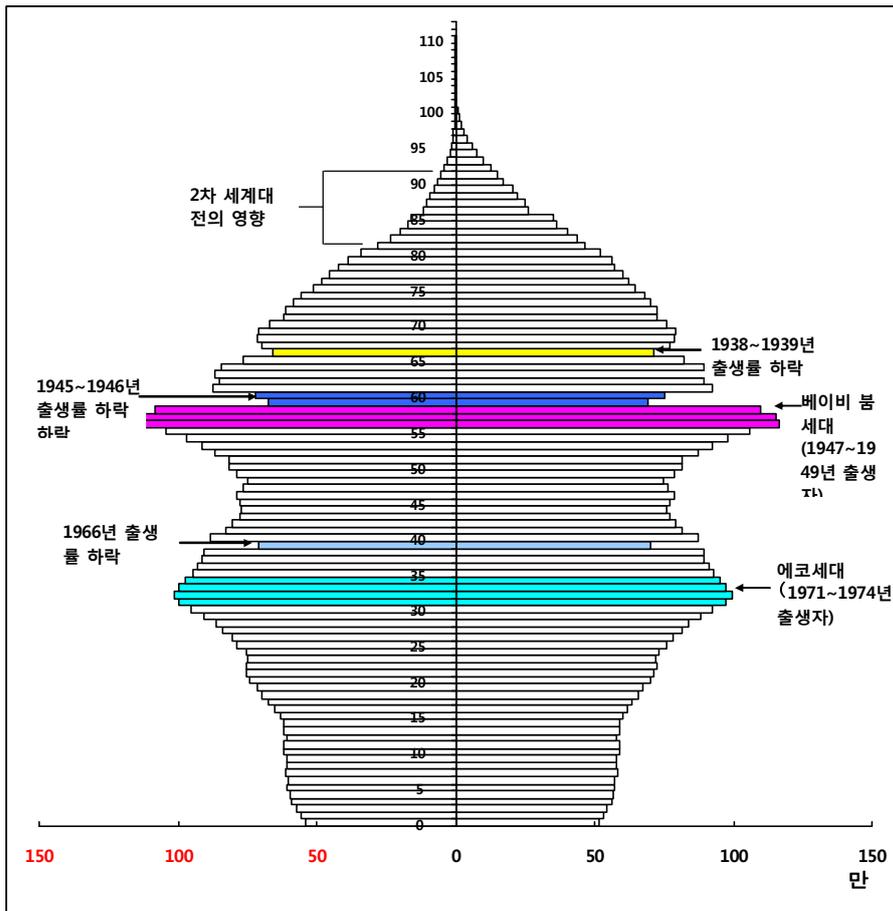
출처: AARP/Roper Baby Boomer Study(1998년)

[그림 4-4] 미국 베이비붐 세대의 하위 집단

나. 일본

1)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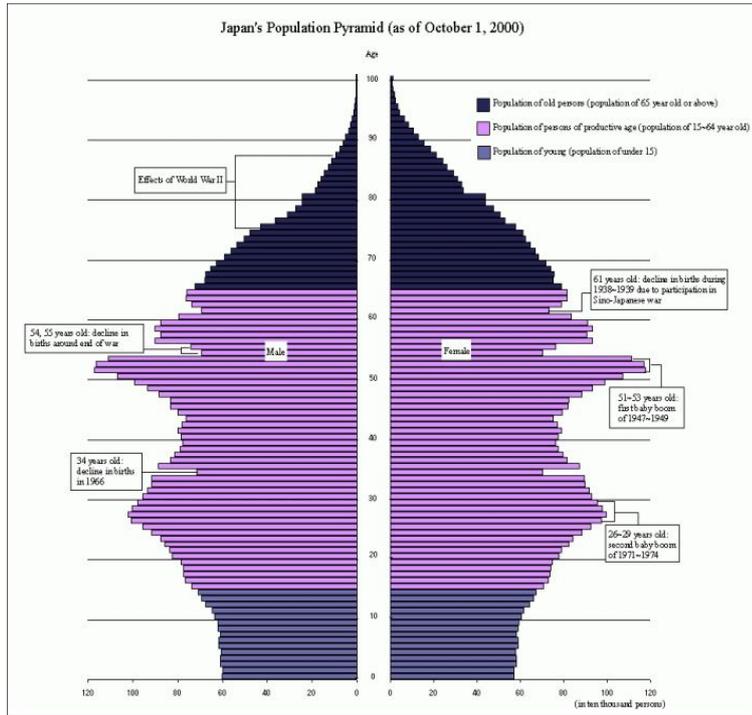
[그림 4-5]는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이다(2005년).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1947~1949년 출생자로 정의되며, 단카이 세대라고 표현되기도 한다²⁴⁾. 일본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직후인 1940년대 후반에 출생아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



출처: 일본 통계청 「인구센서스 2005년」
<http://www.stat.go.jp/english/data/kokusei/2000/kihon1/00/00.htm>

[그림 4-5] 일본의 인구피라미드 : 2005년

24) 단카이 세대라는 용어는 사카이야 다이치의 소설 『단카이 세대』에서 비롯되었다. 1966년의 출생률 하락에는 화재가 많고, 이 해에 태어난 여성은 남편을 죽인다는 속설 때문에 출산 기피



출처 : <http://www.stat.go.jp/english/data/kokusei/2000/kihon1/00/00.htm>

[그림 4-6] 일본의 인구피라미드 : 2000년

(1947~1949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1947년 268만 명(TFR:4.54) 1948년 268만 명(TFR:4.4) 2,70만 명(TFR:4.32)으로 이 시기 합계 출산율은 4.0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일본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형성된 원인은 2차 대전 이후 1945년에 시행된 해외 거주 일본인의 귀환(歸還) 정책에 의한 인구증가(사회적 요인)와 이들의 출산에 의한 자연증가(자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해외거주 일본인의 귀환정책을 실시한 1945년 10월부터 1948년까지 해외에서 일본으로 전입한 전입자수는 총 614만 명으로 전출자(118만 명)를 뺀 순전입자수는 495만 명에 이른다. 인구의 급격한 유입에 의해 베이비붐 시기인 1947년에서 1949년의 합계출산율은 무려 4.0 이상의 수준을 기록하였고, 이 시기 출생아 수는 806만 명에 이른다. 일본의 경우 한국이나 미국에 비해 베이비붐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²⁵⁾(1947~1949년의 3개년도), 이는 1948년에 실시된 우생보호법(優生保護法)에 의해 중절수술이 합법화되

25) 각 국가별 베이비붐 기간을 다음과 같다. 영국 1946~1948년, 이탈리아 1946~1948년, 미국 1946~1964년, 일본 1947~1949년, 한국 1955~1963년

고, 가족계획이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되어 1950년대에 들어 출생아 수가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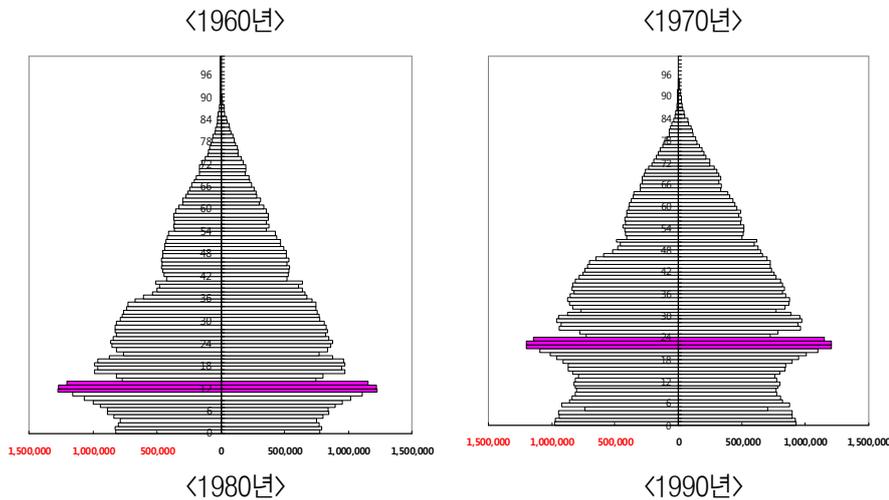
<표 4-8>은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각 세별 인구규모이다. 2005년 일본의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1947년생은 2,181천 명, 1948년생은 2,293천 명, 1949년생은 2,309천 명으로 1949년생의 인구규모가 가장 크다. 각 세별 베이비붐 인구의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1949년생의 여성비중은 50.42%, 1948년생은 50.48%, 1947년생은 50.5%로 남성 사망률에 의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비중이 약간씩 높아짐을 알 수 있다. 2005년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의 총 인구수는 6,783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5.31%를 차지하며, 성별 인구 대비 남성은 5.39%, 여성은 5.23%로 남성의 비중이 약간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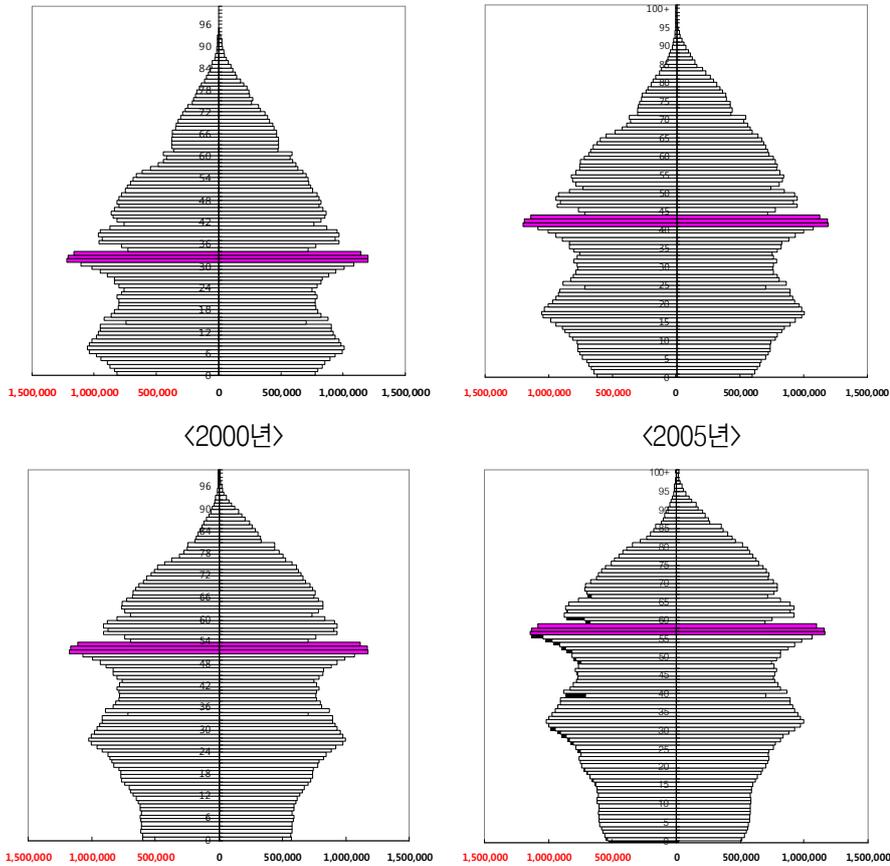
<표 4-8>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각 세별 인구규모(2005년)

(단위 : 명, %)

	전체	남성	여성
61세(1949년 생)	2,309,454	1,145,025(49.58)	1,164,429(50.42)
62세(1948년 생)	2,293,251	1,135,716(49.52)	1,157,535(50.48)
63세(1947년 생)	2,180,630	1,079,446(49.5)	1,101,184(50.5)
계	6,783,335	3,360,187(49.5)	3,423,148(50.5)
전체인구수	127,767,994	62,348,977	65,419,017

출처 : 일본 통계청, 「인구센서스(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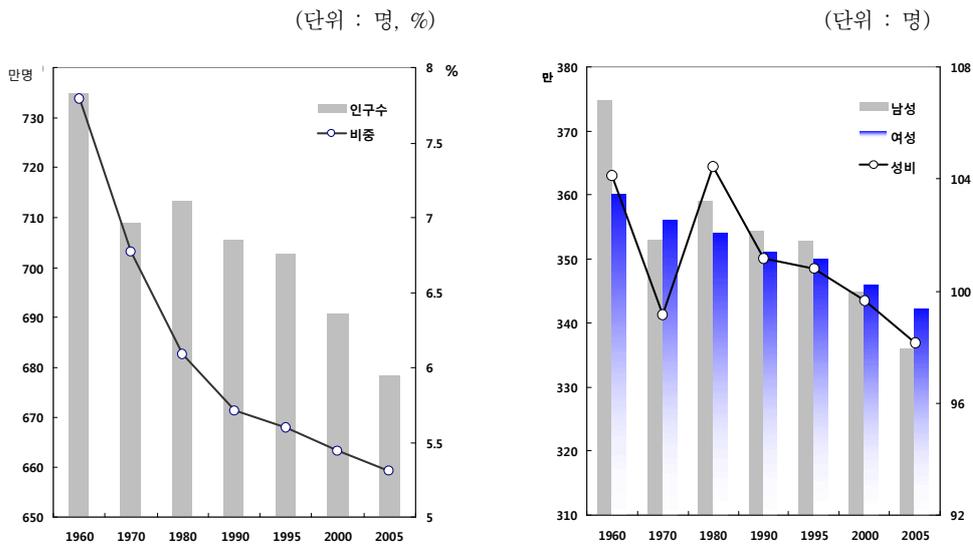


출처: 일본 통계청 인구센서스(1960~2005년)/ 각 시기별 베이비붐 세대는 음영 처리함
 [그림 4-7] 일본의 인구피라미드 : 1960~2005년

[그림 4-7]은 1960~2005년 기간 중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이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1947~1949년 출생자로 해당 시기는 짧은 반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절대적 인구수가 커 해당 부분이 매우 도드라진다.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의 전반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 이후 인구규모가 급감하다가 베이비붐 에코세대의 출생으로 다시 인구규모가 증가하는 쌍봉(two-humped) 형태가 관찰된다. 또한 최근 세대로 올수록 출생률 감소로 유소년 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8]은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수 및 비중 추이이다(1960~2005년). 각 시기별 베이비붐 인구수는 1960년 7,348천 명, 1970년 7,090천 명, 1980년 7,131천 명, 1990년 7,056천 명, 1995년 7,028천 명, 2000년 6,907천 명, 2005년 6,783천 명으로 나타난다. 각 시기별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60년 7.79%, 1970년 6.77%, 1980년

6.09%, 1990년 5.71%, 1995년 5.6%, 2000년 5.44%, 2005년 5.31%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인하여 최근으로 올수록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해왔다. [그림 4-9]는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성별 인구수 추이 및 성비이다. 1995년까지 남성의 인구수가 여성보다 많았으나, 베이비붐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남성 사망률에 의하여 2000년부터는 여성의 인구수가 남성보다 많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각 시기별 성비는 1960년 104.1, 1980년 104.43, 1990년 101.17, 2000년 99.66, 2005년 98.16이다.



출처: 일본 통계청 인구센서스(1960~2005년)/ 1970년 자료는 해석 상 주의 요망

[그림 4-8] 베이비붐 세대 인구수 및 비중 추이 [그림 4-9] 베이비붐 세대 성별 인구수 추이

<표 4-9>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지역별 분포(2005년)

(단위 : 명, %)

		전체	남성	여성
도쿄도		621,457(4.94)	313,538	307,919
홋카이도		300,675(5.34)	142,392	158,283
오사카부		488,321(5.53)	237,797	250,524
교토부		148,819(5.62)	71,663	77,156
도호쿠지방 6개 현	후쿠시마현	103,579(4.95)	53,406	50,173
	야마가타현	60,238(4.95)	31,234	29,004
	미야기현	116,469(4.93)	58,331	58,138
	아오모리현	75,487(5.25)	36,744	38,743
	이와테현	68,874(4.97)	34,365	34,509
	아키타현	61,736(5.39)	30,536	31,200

간토지방 6개 현	이바라키현	159,026(5.35)	80,287	78,739
	도치기현	108,236(5.37)	55,647	52,589
	군마현	109,360(5.4)	55,138	54,222
	사이타마현	391,254(5.55)	194,317	196,937
	지바현	336,536(5.56)	166,705	169,831
	가나가와현	451,869(5.14)	224,583	227,286
추부지방 9개 현	니가타현	129,258(5.32)	65,858	63,400
	도야마현	67,373(6.06)	33,496	33,877
	이시카와현	69,194(5.9)	34,199	34,995
	후쿠이현	44,264(5.39)	22,379	21,885
	야마나시현	44,205(5.0)	22,269	21,936
	나가노현	111,907(5.1)	55,935	55,972
	기후현	115,484(5.48)	57,528	57,956
	시즈오카현	203,959(5.38)	102,108	101,851
간키지방 5개 현	아이치현	376,895(5.2)	188,127	188,768
	미에현	99,683(5.34)	49,263	50,420
	시가현	70,912(5.14)	35,478	35,434
	효고현	307,214(5.5)	150,123	157,091
	나라현	81,346(5.72)	38,581	42,765
추고쿠지방 5개 현	와카야마현	57,764(5.58)	27,957	29,807
	돗토리현	32,233(5.31)	5,051	4,941
	시마네현	41,256(5.56)	6,871	6,630
	오카야마현	106,225(5.43)	16,724	17,492
	히로시마현	158,712(5.52)	26,572	26,658
시고쿠지방 4개 현	야마구치현	86,156(5.77)	13,625	14,680
	도쿠시마현	46,419(5.73)	7,309	7,107
	가가와현	60,188(5.95)	9,900	9,807
	에히메현	81,514(5.55)	12,744	13,164
규슈지방 8개 현	고치현	45,369(5.7)	7,446	7,637
	후쿠오카현	266,425(5.3)	128,406	138,019
	사가현	43,493(5.02)	21,610	21,883
	나가사키현	76,448(5.17)	37,279	39,169
	구마모토현	92,046(5.0)	45,155	46,891
	오이타현	66,047(5.46)	32,053	33,994
	미야자키현	61,617(5.34)	30,163	31,454
	가고시마현	84,293(4.81)	42,182	42,111
오кина와현	53,500(3.99)	27,415	26,085	
계	6,783,335(5.3)	3,360,187	3,423,148	

출처 : 일본 통계청, 「인구센서스(2005년)」



<표 4-9>는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지역별 분포이다. 일본의 행정구역은 1도(都), 1도(道), 2부(府), 43개 현(縣)으로 이뤄져있다. 각 지역별 베이비붐 세대 인구 비중 상위지역(5.5% 이상)은 교토부(5.62%), 사이타마현(5.55%), 지바현(5.56%), 도야마현(6.06%), 이시카와현(5.9%), 나라현(5.72%), 와카야마현(5.58%), 시마네현(5.56%), 야마구치현(5.77%), 도쿠시마현(5.73%), 가가와현(5.95%), 에히메현(5.55%), 고치현(5.7%)이며, 추부지방의 도야마현(6.06%)의 베이비붐 인구 비중이 가장 높다. 한편 베이비붐 인구 하위지역(5.0% 이하)은 도쿄도(4.94%)와 도호쿠 지방의 후쿠시마현(4.95%), 야마가타현(4.95%), 미야기현(4.93%), 이와테현(4.97%), 규슈지방의 가고시마현(4.81%), 오키나와현(3.99%)이며, 이 중 베이비붐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오키나와현(3.99%)으로 나타난다.

일본 대도시권의 베이비붐 인구규모 및 비중을 살펴보면 도쿄도는 621만 명(4.94%), 오사카부는 488만 명(5.53%), 사이타마현은 391만 명(5.55%), 지바현은 337만 명(5.56%), 가나가와현은 452만 명(5.14%), 아이치현은 377만 명(5.2%), 효고현은 307만 명(5.5%), 후쿠오카현은 266만 명(5.3%)으로 대도시권의 베이비붐 인구는 총 3,240만 명으로 전체 베이비붐 인구 중 47.8%가 대도시권에, 52.2%는 지방권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관련연구

일본의 인구구조의 변화의 특징은 인구의 절대수의 감소,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비중의 증가 및 14세 이하의 유년인구 비중의 감소의 저출산·고령화로 요약되며(고미네 다카오, 2008), 이러한 상황은 우리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전후 1947년~1949년 기간 중 출생하여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기(1950년~1960년대)를 겪었으며, 1960년대 후반부터 노동시장에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무렵 노동시장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던 시기로 이들이 대량의 노동력을 제공함에 따라 노동력 유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²⁶⁾.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이 막을 내림에 따라 기업의 신규채용의 인원은 크게 감소하거나 중지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노동력 구조 내에서 하급자로서의 숙련기간이 길었던 반면 조직 내 신규 유입이 지연되면서 신규 세대로의 기술전수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어 정년퇴직 시점을 맞이하면서 노동수요 측면에서는(숙련)노동력 부족현상과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이들의 노후의 경제적 측면이 사회 문제 시되었다. 일본에서 베이비붐 인력의 대거 은퇴가 가시화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을 숙련노동력의 부족이다. 일본의 산업별 취업자 비율²⁷⁾을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26) 1970년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80.7%, 여성 70.6%로 이들을 노동시장 진입 시기에 매우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였다.

27) <http://www.stat.go.jp/data/roudou> 를 참조함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제조업이며, 이중에서도 식료품, 금속제품, 기계생산 제조업 부분의 비중이 높다. 또한 건설업, 도매업, 서비스업, 운송업에도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특히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이끄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산업은 제조업이며, 특히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일본의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에 일본정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기 이전 2004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는 등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 및 기술을 차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²⁸⁾. 이 같은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3절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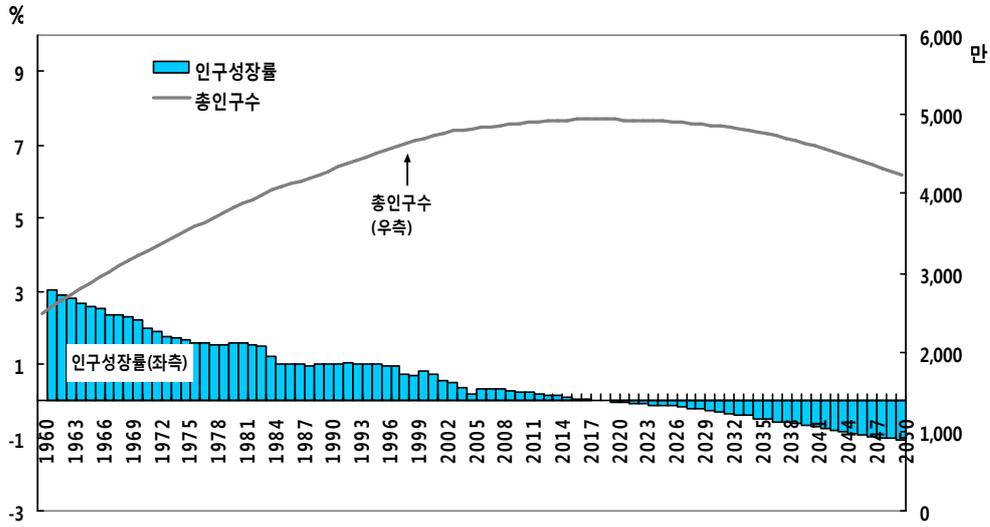
1. 인구분포 및 개인특성

가. 인구규모 및 성비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를 살펴보기 이전에 「장래인구추계」에서 나타나는 인구구조 추이 및 베이비붐 세대가 인구고령화에 미친 영향을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4-10]은 1960~2050년까지의 총인구수의 변화와 인구성장률이다. 한국의 총인구는 1960년 약 2천5백만 명이었으나, 1970년 3천만 명을 넘어서 1985년에는 약 4천만 명, 1995년에는 4천5백만 명에 이른다. 총인구는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천만 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이나, 이후 총인구는 점진적인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총인구가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구성장률은 196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960년대 인구성장률은 2%대에서 점차 감소하며, 1970년대에 들어서는 1%대 수준이다. 이후 년도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인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0%, 2020년에는 -0.02%, 2030년에는 -0.25%, 2050년에는 -1.07%로 2019년 이후 인구성장률은 마이너스 추세가 된다.

28) 이와 관련하여 2005년 7월 오사카 시내의 71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에 중심 기술과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고 대답한 기업이 81.7%로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부문과 소규모 기업일수록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중 73%의 기업이 기능 및 기술 전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 인력을 대체할만한 청년층 인력을 확보하기 못하는데 기인한다.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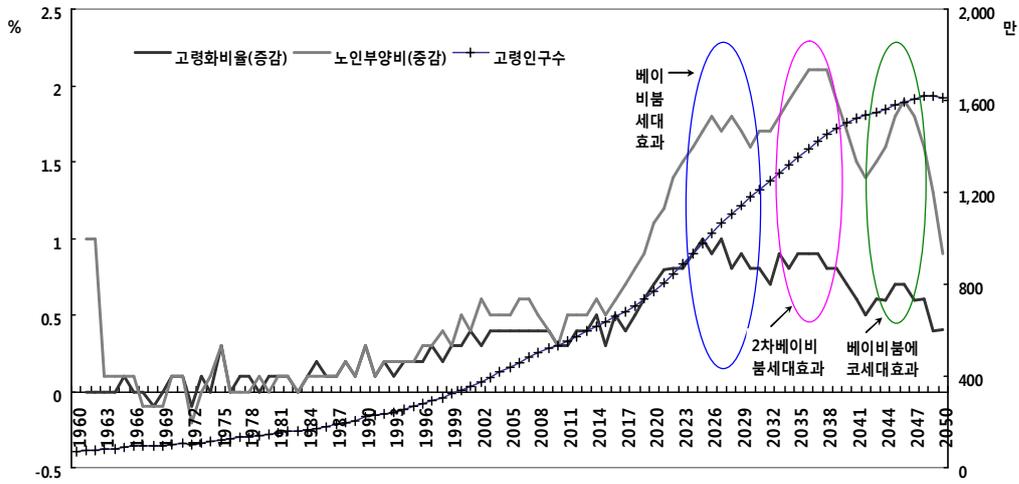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년

[그림 4-10] 한국의 인구구조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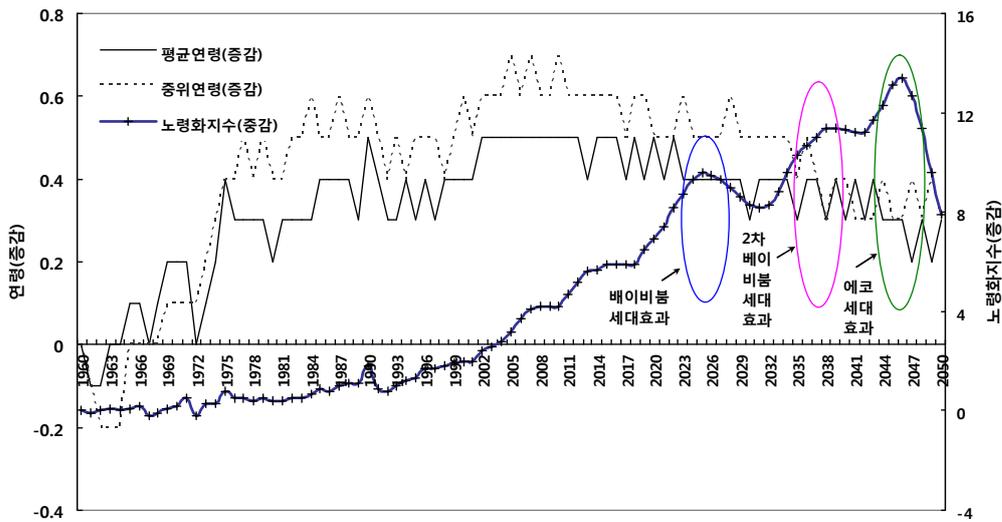
[그림 4-11]은 각 시기별 고령화비율 및 노인부양비(Old Age Dependency Ratio)의 증감률을 도시한 것이다. 고령화비율과 노인부양비는 2000년까지 0.5% 미만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2017년 이후 상승률이 급격히 증가된다. 특히 2020년 이후 고령화비율 상승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점과 2030년, 2044년경 또 다시 상승하는 지점은 베이비붐 세대 및 2차 베이비붐 세대, 에코세대의 고령화에 기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시기별 고령화비율 및 노인부양비의 증가폭을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1947년~1955년생)가 65세 이후로 진입하는 시기인 2020년의 고령화비율 상승률은 0.7%p로 이전 시기의 평균 상승률을 크게 상회한다. 한편 2차 베이비붐 세대(1965년~1975년생)가 65세에 이르는 2030년의 고령화비율 상승률은 0.8%p, 베이비붐 에코세대(1979년~1985년생)가 65세에 도달하는 2044년의 고령화비율 상승률은 0.6%p로 전후시기에 비해 상승률의 폭이 큰 것이 확인된다. 또한 이들 세 지점의 노인부양비 또한 뚜렷이 증가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65세에 진입하는 시점인 2020년의 노인부양비 상승률은 1.1%p, 2차 베이비붐 세대가 65세에 진입하는 2030년에는 1.6%p, 베이비붐 에코세대가 65세에 진입하는 2044년에는 1.6%p로 이전 시기에 비해 노인부양비가 뚜렷이 상승함을 알 수 있다²⁹⁾.

29) 베이비붐 세대는 1947년~1955년 출생자(47~55세), 2차 베이비붐 세대는 1965년~1975년 출생자(35~45세), 베이비붐 에코세대는 1979~1985년 출생자(25~35세)임



주 : 고령자비율=65세 이상 인구/총인구수, 노인부양비율=6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 인구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년

[그림 4-11] 고령화 속도 추이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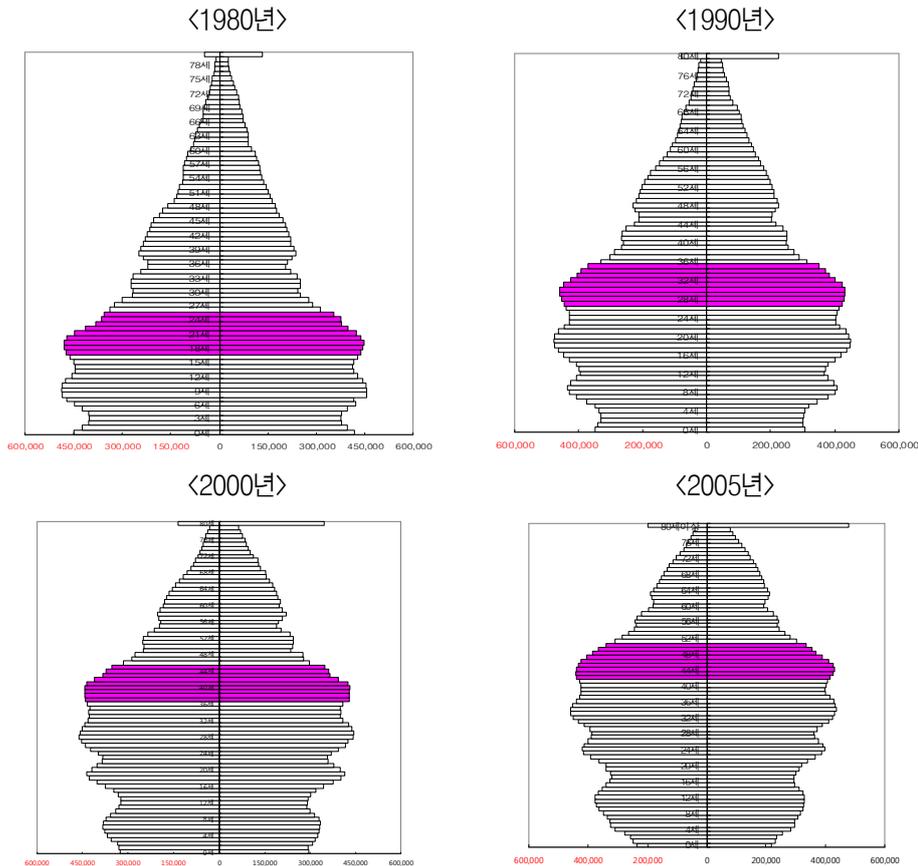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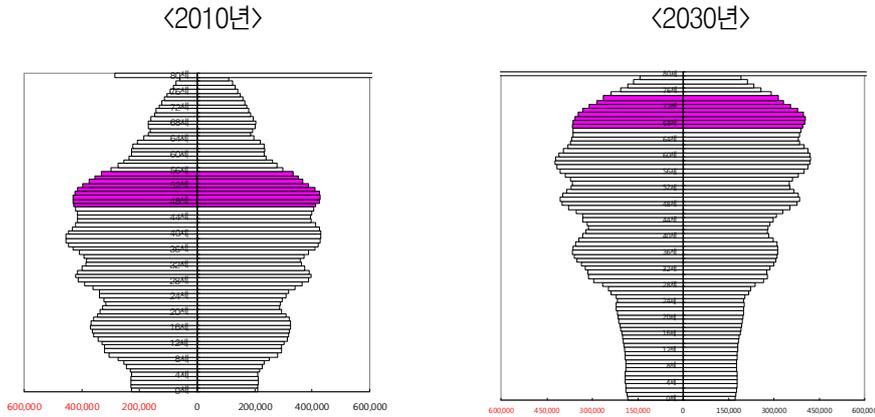
주 :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15세 미만 유년인구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년

[그림 4-12] 고령화 속도 추이 II

[그림 4-12]는 각 시기별 평균연령과 중위연령의 증감률 및 노령화 지수(Ageing index) 증감률이다.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평균연령과 중위연령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하였다. 1960년 총인구의 평균연령과 중위연령은 각각 23.1세, 19세였던 것이 1980년에는 25.9세, 21.8세, 2000년에는 33.1세, 31.8세, 2010년에는 각각 38세, 2030년에는 46.7세, 49세에 도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1960년~2050년에 이르는 기간 중 평균연령과 중위연령의 증감률은 거의 전 구간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상승률은 2010년경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후 구간에서는 상승폭이 작아진다. [그림 4-12]에서 주목할 것은 노령화 지수의 증감률이다. 노령화 지수는 15세 미만 유년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할수록 이 지수는 상승하게 된다. [그림 4-12]의 노령화 지수 증감 곡선에서 상승률이 증가하는 구간은 세 구간이며, 이 지점은 각각 베이비붐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예코세대가 65세에 진입한 후 약 3~4년이 경과한 시기이다. 첫 번째 봉우리의 노령화 지수 상승률은 8.3%p~9.6%p 수준이며, 두 번째 봉우리의 노령화 지수 상승률은 8.8%p~11.7%p, 세 번째 봉우리의 노령화 지수 상승률은 7.9%p~13.4%p 사이에 분포한다. [그림 4-11]과 [그림 4-12]를 통해 고령화비율, 노인부양비, 노령화 지수의 급격한 상승은 베이비붐 세대의 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 : 진한부분은 각 년도 인구규모에서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도 출생자)

[그림 4-13]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 : 1980~2030년

[그림 4-13]은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1980~2030년)이다. 각 시기별 베이비붐 세대가 위치하는 지점은 고령화로 인하여 조금씩 상향 이동하며, 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비중은 조금씩 감소한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1947년~1955년 출생자)의 인구규모 및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1980년 베이비붐 세대의 총인구수는 7,567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85%를 차지한다. 1990년 베이비붐 세대 총인구수는 7,49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48%, 2000년에는 총 7,33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6%, 2010년에는 총 7,12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58%를 차지한다. 한편 2030년 베이비붐 세대는 총 6,13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6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성별 인구규모와 전체 인구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1980년 남성인구는 3,865천 명으로 전체 남성 중 20.09%를 차지하며, 여성은 3,702천 명으로 전체 여성 중 19.6%를 차지한다. 2000년에는 남성은 3,722천 명, 여성은 3,612천 명으로 각각 15.73%, 15.47%를 차지하며, 2010년에는 남성은 3,587천 명, 여성은 3,538천 명으로 각각 14.62%, 14.54%를 차지한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며, 남성의 감소폭이 여성보다 크다. 베이비붐 세대의 시기별 여성의 비중은 1980년 48.92%, 1990년 49.69%, 2000년 49.25%, 2010년 49.66%, 2030년 53.46%로 인구고령화와 남성사망률에 의해 시간이 경과할수록 여성의 비중이 증가한다. 각 시기별 베이비붐 인구의 성비는 1980년 104.4, 1990년 101.25, 2000년 103.06, 2010년 101.39, 2030년 87.06으로 남성사망률에 의해 성비는 크게 감소한다³⁰⁾.

30) 다음의 표는 베이비붐 세대의 각 세별 인구규모이다. 49세가 858천 명(12.04%), 48세 855천 명(11.99%),

<표 4-10>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1980~2030년)

(단위 : 명, %)

년도	총	남성	여성
인구수(비중*)			
1980	7,566,653 (19.85)	3,864,720 (20.09)	3,701,933 (19.6)
1990	7,494,885 (17.48)	3,850,203 (17.85)	3,644,682 (17.11)
2000	7,333,814 (15.6)	3,722,144 (15.73)	3,611,670 (15.47)
2010	7,125,347 (14.58)	3,587,217 (14.62)	3,538,130 (14.54)
2030	6,133,525 (12.61)	2,854,700 (11.8)	3,278,825 (13.41)
성별 비중			
1980	100.0	51.08	48.92
1990	100.0	50.31	49.69
2000	100.0	50.75	49.25
2010	100.0	50.34	49.66
2030	100.0	46.54	53.46
성비			
1980		104.4	
1990		101.25	
2000		103.06	
2010		101.39	
2030		87.06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1980~2030)」

* 각 년도 전체 인구대비 비중임

<표 4-11>은 「인구총조사」 자료로 집계된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이다. 1995년 베이비붐 세대 인구는 총 7,514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6.86%를 차지하며, 남성은 3,822천 명, 여성은 3,692천 명으로 나타난다. 2005년 베이비붐 세대 인구는 총 7,139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5.18%를 차지하며, 남성은 3,592천 명, 여성은 3,546천 명으로 나타난다.

50세 849천 명(11.91%), 47세 842천 명(11.81%), 51세 824천 명(11.56%)이며, 52세 이후로는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55세는 663천 명(9.31%)으로 규모가 가장 작다.

연령	전체	남성	여성
47세('63년생)	841,625(11.81)	428,648(11.95)	412,977(11.67)
48세('62년생)	854,550(11.99)	431,465(12.03)	423,085(11.96)
49세('61년생)	858,141(12.04)	429,629(11.98)	428,512(12.11)
50세('60년생)	848,690(11.91)	424,525(11.83)	424,165(11.99)
51세('59년생)	823,550(11.56)	414,400(11.55)	409,150(11.56)
52세('58년생)	784,111(11.0)	396,251(11.05)	387,860(10.96)
53세('57년생)	742,633(10.42)	374,712(10.45)	367,921(10.4)
54세('56년생)	708,728(9.95)	355,781(9.92)	352,947(9.98)
55세('55년생)	663,319(9.31)	331,806(9.25)	331,513(9.37)
계	7,125,347(100)	3,587,217(100)	3,538,130(10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

〈표 4-11〉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1995년~2005년 인구총조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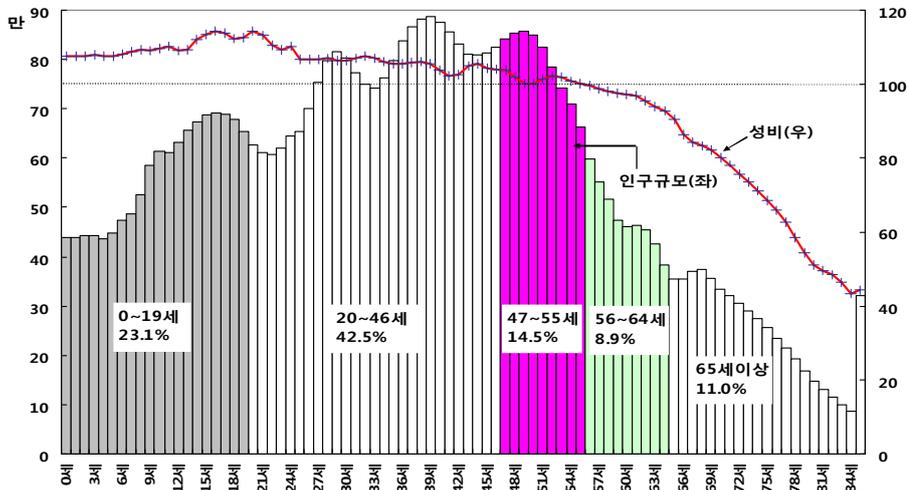
년도	총	남성	여성
인구수(비중*)			
1995	7,513,566 (16.86)	3,821,825 (17.09)	3,691,741 (16.63)
2005	7,138,551 (15.18)	3,592,191 (15.31)	3,546,360 (15.04)
성비			
1995	100.0	50.87	49.13
2005	100.0	50.32	49.68

자료 : 통계청 「인구센서스(1995, 2005)」

* 각 년도 전체 인구대비 비중임

[그림 4-14]는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분포 및 성비이다. 전체 인구를 0~19세의 유년 세대, 20~46세의 청·장년 세대, 47~55세의 베이비붐 세대, 56~64세의 고령 세대, 65세의 노령 세대로 구분하고, 각각의 인구규모와 비중을 살펴보았다. 각 연령계층이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유년층은 23.1%, 청·장년층은 42.5%, 베이비붐 세대는 14.5%, 고령층은 8.9%, 노령층은 11.0%를 차지하여 전체 인구 10명 중 1.5명가량이 베이비붐 세대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여성 ‘100’인당 남성의 비를 뜻하는 ‘성비(sex ratio)’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 추세를 보이며, 55세 이후에는 ‘100’ 이하로 크게 감소한다. 구체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속하는 연령대의 성비는 47세 103.79, 48세 101.98, 49세 100.26, 50세 100.08, 51세 101.28, 52세 102.16, 53세 101.85, 54세 100.8, 55세 100.09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비는 감소하며, 56세 이후에는 100 이하로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단위 : 명, 성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

[그림 4-14] 인구분포 및 성비(2010년)

나. 지역별 분포

베이비붐 세대의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총조사(2005년)」 자료와 「지역별 고용조사(2008년)」 자료를 검토하였다. 먼저 「인구총조사(2005년)」 자료에 의하면, 전체 베이비붐 세대 인구수는 7,139천 명으로, 경기도가 1,589천 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481천 명, 부산 583천 명, 경남 462천 명, 인천 415천 명 순으로 나타난다. 전체 베이비붐 인구수 대비 시도별 비중은 경기도 22.3%, 서울시 20.8, 부산 8.2%, 경남 6.5%, 인천 5.8% 순이다. 한편 각 시도별 15세 이상 인구 대비 베이비붐 인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울산시가 21.5%로 가장 높고, 인천이 20.7%, 부산 19.9%, 경기도 19.6%, 대구 19.5%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역별 고용조사(2008년)」에 따르면 베이비붐 인구수는 7,231천 명으로

〈표 4-12〉 베이비붐 세대의 지역별 분포

(단위 : 명, %)

지역	인구수		비중*		비중**	
	'05인총	'08지역별	'05인총	'08지역별	'05인총	'08지역별
서울	1,481,341	1,483,337	20.8	20.5	18.2	17.9
부산	583,175	561,835	8.2	7.8	19.9	19.4
대구	387,503	382,786	5.4	5.3	19.5	18.9
인천	414,970	406,585	5.8	5.6	20.7	18.8
광주	199,770	194,135	2.8	2.7	18.0	17.1
대전	219,211	216,250	3.1	3.0	19.1	17.9
울산	175,229	174,963	2.5	2.4	21.5	19.7
경기도	1,589,183	1,668,068	22.3	23.1	19.6	18.1
강원도	224,442	219,677	3.1	3.0	18.8	18.8
충북	212,513	216,792	3.0	3.0	18.1	18.0
충남	256,425	269,574	3.6	3.7	16.8	17.2
전북	245,712	251,359	3.4	3.5	17.1	17.8
전남	245,279	255,101	3.4	3.5	16.6	17.9
경북	368,617	387,519	5.2	5.4	17.3	17.9
경남	461,887	467,560	6.5	6.5	19.0	18.5
제주	73,294	75,504	1.0	1.0	17.7	17.6
전체	7,138,551	7,231,044	100.0	100.0	전국평균 18.8	전국평균 18.2

자료 : 「인구총조사(2005년)」, 「지역별 고용조사(2008년)」

주 : *베이비붐 세대 인구 대비, ** 해당지역 인구수(15세 이상) 대비

음영 처리된 부분은 각년도 평균 이상 지역임

〈표 4-13〉 베이비붐 세대 비중의 지역별 순위

(단위 : %)

순위	'05 인구총조사		'08 지역별 고용조사	
	지역	비중	지역	비중
1	울산	21.5	울산	19.7
2	인천	20.7	부산	19.4
3	부산	19.9	대구	18.9
4	경기도	19.6	인천, 강원도	18.8
5	대구	19.5	경남	18.5
6	대전	19.1	경기도	18.1
7	경남	19.0	충북	18.0
8	강원도	18.8	서울, 전남	17.9
9	서울	18.2		
10	충북	18.1		

자료 : 「인구총조사(2005년)」, 「지역별 고용조사(2008년)」

주 : 지역별 15세 이상 인구 대비 비중임

경기도 1,668천 명, 서울 1,483천 명, 부산 562천 명, 경남 468천 명, 인천 407천 명 순으로 나타난다. 전체 베이비붐 인구수 대비 시도별 비중은 경기도 23.1%, 서울시 20.5%, 부산시 7.8%, 경남 6.5%, 인천 5.6% 순이다. 각 시도별 15세 이상 인구 대비 베이비붐 인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인구총조사 자료에서와 동일하게 울산시가 19.7%로 가장 높고, 부산시 19.4%, 대구시 18.9%, 인천과 강원도 18.8%, 경남 18.5%, 경기도 18.1% 순으로 나타난다³¹⁾.

다음으로 「지역별 고용조사(2008년)」 자료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베이비붐 인구수는 경기도가 1,668천 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483천 명, 부산 562천 명, 경남 468천 명, 인천 407천 명 순으로 인구총조사의 인구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음 각 시도별 15세 이상 인구 대비 베이비붐 인구의 비중은 울산이 19.7%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부산 19.4%, 대구 18.9%, 인천 및 강원도 18.8% 순이다. 지역별 인구 대비 베이비붐 인구 비중 상위지역을 검토한 결과, 「인구총조사(2005년)」와 「지역별 고용조사(2008년)」 자료에서 모두 동일하게 울산시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울산시를 포함한 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의 베이비붐 인구 분포가 높은 편이다. 또한 부산지역의 베이비붐 인구 비중 역시 각각 2, 3순위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1) 1995년 인구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15세 이상 인구 대비 베이비붐 인구수 최고 지역은 울산시이며, 비중은 27.3%로 나타난다.

<표 4-14>과 [그림 4-15]는 베이비붐 세대의 시군구별 분포이다. 15세 이상 인구 대비 베이비붐 인구 비중은 「인구총조사(2005년)」 자료에서는 전국 평균 18.8%, 「지역별 고용조사(2008년)」 자료에서는 전국 평균 18.2%로 나타난다. 「인구총조사(2005년)」 자료를 통해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특.광역시의 경우 서울시의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이 평균 이상이며, 부산시는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등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난다. 대구시는 서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시는 연구수,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시의 서구, 대덕구, 울산시는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등이 평균 이상 지역이다. 도 지역의 베이비붐 인구비중 상위지역은 경기도의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등이 평균 이상 지역이다. 강원도는 원주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평창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등이 평균 이상이며, 충청북도는 청주시, 제천시, 충청남도는 계룡시, 전라남도는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경상북도는 포항시, 울릉군, 경상남도는 창원시, 마산시, 통영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등이 베이비붐 인구 비중이 평균 이상 분포된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총조사(2005년) 자료에서 나타나는 베이비붐 인구 상위 시군구는 충청남도 계룡시(25.3%), 울산시 동구(24.29%), 인천시 연구수(24.04%), 과천시(23.61%), 인천시 계양구(22.81%) 등이며, 하위 시군구는 전라남도 곡성군(12.41%), 전라남도 함평군(12.68%), 전라북도 순창군(13.01%), 전라북도 진안군(13.14%), 전라북도 임실군(13.17%) 등이다.

한편 「지역별 고용조사(2008년)」의 베이비붐 인구 비중 평균(18.2%) 이상 지역은 특.광역시의 경우 서울시의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송파구, 강동구 등이며, 부산시는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등이며, 대구시는 동구, 수성구, 달서구 등이다. 인천시는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용진군이며, 대전시는 서구, 울산시는 중구, 남구, 동구 등으로 나타난다. 도 지역의 경우 경기도는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등이며, 강원도는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으로 나타난다.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충청남도는 논산시, 전라북도는 군산시, 익산시, 전라남도는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가 평균 이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포항시, 영주시, 문경시, 울릉군, 경남은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통영시 등이 평균 이상 지역이다. 「지역별 고용조사(2008년)」 자료에서 나타나는 베이비붐 인구 상위 시군구는 울산시 동구(21.85%), 부산시 사상구(21.26%), 포항시(21.23%), 인천시 연수구(21.11%), 과천시(20.94%) 등이며 하위 시군구는 경상남도 의령군(14.39%), 오산시(14.51%), 경상남도 남해군(15.0%), 전라남도 함평군(15.07%), 서울 관악구(15.08%) 등으로 나타난다.

<표 4-14> 베이비붐 세대의 시군구별 분포

(단위 : %)

지역	시군구	'05 인종	'08 지역별	지역	시군구	'05 인종	'08 지역별	지역	시군구	'05 인종	'08 지역별	지역	시군구	'05 인종	'08 지역별
서울시	종로구	17.1	16.72	광주시	동구	14.82	16.33	화천군	16.61	17.71	강진군	14.84	16.78		
	중구	16.54	17.12		서구	18.7	17.27		양구군	18.85		19.64	해남군	16.25	18.02
	용산구	16.35	17.19	남구	18.74	18.04	인제군	18.91	19.88	영암군	14.17	16.54			
	성동구	16.8	17.28	북구	18.84	17.38	고성군	17.33	18.6	무안군	14.6	16.8			
	광진구	17.81	17.38	광산구	17.06	16.06	양양군	17.18	17.76	함평군	12.68	15.07			
	동대문구	16.56	17.26	대전시	동구	17.01	17.86	충북	청주시	18.87	18.06	영광군	15.1	16.88	
	중랑구	19.17	19.2		중구	17.97	17.18		충주시	18.39	18.91	장성군	13.38	16.1	
	성북구	16.83	16.77	서구	20.83	18.54	제천시	19.49	19.25	완도군	16.7	17.93			
	강북구	17.24	17.69	유성구	18.63	17.15	청원군	15.51	16.47	진도군	15.32	16.75			
	도봉구	20.26	19.72	대덕구	19.31	18.08	보은군	16.32	17.93	신안군	14.91	16.81			
	노원구	20.48	18.82	울산시	중구	21.54	19.65	옥천군	16.33	16.99	경북	포항시	21.54	21.23	
	은평구	17.95	17.93		남구	22.5	20.9	영동군	16.0	16.75		경주시	17.1	17.88	
	서대문구	16.5	16.64	동구	24.29	21.85	충평군	17.05	17.09	김천시	17.06	17.64			
	마포구	15.66	15.83	북구	19.93	17.0	진천군	16.69	17.02	안동시	16.85	17.98			
	양천구	21.92	20.15	울주군	17.73	17.83	괴산군	16.02	17.74	구미시	17.03	16.57			
	강서구	19.35	18.82	수원시	19.64	17.72	음성군	17.96	18.11	영주시	17.71	18.58			
	구로구	17.88	17.76	성남시	19.84	18.34	단양군	18.59	19.09	영천시	16.09	17.2			
	금천구	18.91	19.09	의정부시	19.91	17.92	충남	천안시	17.84	17.12	상주시	16.41	17.44		
	영등포구	17.31	17.46	안양시	21.07	19.42		공주시	16.49	18.19	문경시	17.06	19.36		
	동작구	15.51	16.43	부천시	21.38	19.96	보령시	17.84	18.13	경산시	15.14	16.44			
	관악구	14.44	15.08	광명시	19.29	18.15	아산시	14.54	15.22	군위군	13.9	16.2			
	서초구	18.57	18.3	판곡시	18.19	17.42	사산시	17.61	17.04	의성군	15.03	16.42			
	강남구	19.58	18.13	동두천시	18.6	17.5	논산시	16.36	18.33	청송군	15.5	16.97			
	송파구	19.98	18.76	안산시	19.91	18.01	계룡시	25.3	17.56	영양군	14.95	17.02			
	강동구	21.14	20.24	고양시	21.37	18.94	금산군	14.44	16.76	영덕군	14.66	16.99			
	중구	17.82	18.03	과천시	23.61	20.94	연기군	14.44	16.49	청도군	14.67	16.29			
	서구	17.99	18.53	구리시	20.9	18.6	부여군	16.43	17.02	고령군	15.59	17.21			
	동구	17.22	17.82	남양주시	19.48	17.71	사천군	15.63	17.52	상주군	16.17	17.49			
영도구	18.11	18.88	오산시	16.66	14.51	청양군	14.98	16.47	칠곡군	14.08	15.32				
부산진구	18.61	18.35	시흥시	19.33	17.53	홍성군	16.1	17.45	예천군	14.83	16.09				
동래구	20.91	20.09	군포시	20.61	19.12	예산군	16.7	17.85	봉화군	15.3	17.71				
남구	18.59	18.69	의왕시	20.97	19.5	태안군	17.08	18.11	울진군	17.23	16.92				
북구	21.89	20.88	하남시	20.78	20.16	당진군	17.08	17.6	울릉군	19.72	20.35				
해운대구	21.26	19.01	울진시	17.05	15.38	전북	전주시	18.6	17.38	경남	창원시	22.16	20.58		
사하구	21.06	19.75	파주시	18.02	16.71		군산시	17.71	18.49		마산시	19.6	19.97		
금정구	20.22	19.96	이천시	17.95	17.35	익산시	17.7	19.59	진주시	18.67	18.76				
강서구	18.32	19.5	안성시	16.47	16.91	정읍시	15.85	17.22	진해시	18.06	17.57				
연제구	19.88	19.48	김포시	19.66	18.3	남원시	16.21	17.67	통영시	19.99	19.44				
수영구	18.96	19.1	화성시	16.27	15.63	김제시	15.06	17.13	사천시	16.67	17.02				
시상구	21.2	21.26	광주시	18.42	18.51	완주군	13.79	17.51	김해시	19.37	18.0				
가창군	17.84	17.69	양주시	19.43	18.04	진안군	13.14	15.85	밀양시	17.63	18.15				
중구	15.58	17.38	포천시	19.86	19.15	무주군	15.12	17.2	거제시	19.98	18.13				
동구	17.76	18.24	여주군	18.27	18.31	장수군	14.44	16.5	양산시	19.67	18.15				
서구	18.84	19.2	연천군	18.4	18.97	임실군	13.17	15.2	의령군	13.34	14.39				
남구	16.35	17.4	가평군	18.71	19.07	순창군	13.01	15.47	함안군	17.09	17.87				
북구	18.69	18.04	양평군	18.66	19.81	고창군	15.12	16.89	창녕군	16.38	18.12				
수성구	21.94	19.75	강원도	춘천시	18.3	18.05	전남	부안군	15.54	17.07	고성군	15.99	17.37		
달서구	21.3	20.17		원주시	19.51	18.85		목포시	18.39	19.41	남해군	14.74	15.0		
달성군	18.84	17.95	강릉시	18.42	18.73	여수시	19.07	19.61	하동군	15.58	16.88				
중구	17.23	17.36	동해시	19.41	19.39	순천시	18.92	19.1	산청군	13.29	15.59				
동구	17.74	18.01	태백시	18.98	19.58	나주시	14.46	16.77	함양군	14.99	15.92				
남구	18.32	17.5	속초시	20.85	19.59	광양시	19.0	19.37	거창군	16.52	16.13				
연수구	24.04	21.11	삼척시	18.05	18.0	담양군	13.57	16.69	합천군	14.49	15.95				
남동구	20.92	18.89	홍천군	18.69	19.68	곡성군	12.41	15.1	제주도	제주시	18.5	17.55			
부평구	20.54	18.79	횡성군	18.04	18.77	구례군	14.72	16.92		서귀포	17.96	17.58			
계양구	22.81	19.85	영월군	17.87	18.79	고흥군	14.42	15.85	북제주	15.32	-				
서구	21.22	18.65	평창군	19.73	19.61	보성군	13.72	15.64	남제주	16.54	-				
강화군	17.63	17.24	정선군	18.78	18.94	화순군	13.48	15.64	전국 평균		18.8	18.2			
홍천군	18.34	19.32	철원군	19.01	18.56	장흥군	15.03	1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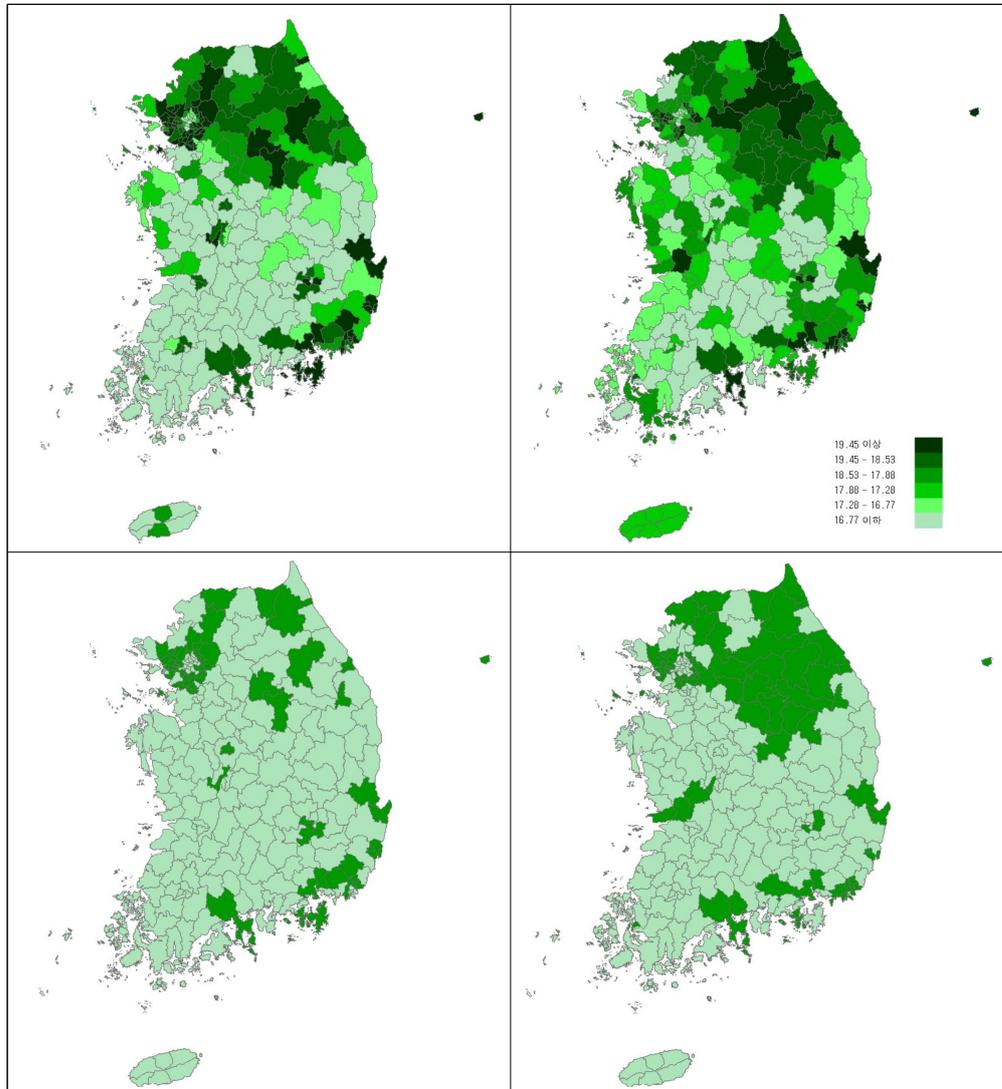
주 : 15세 이상 인구 대비 비중으로 전체대비와 차이 있음. 음영 부분은 각 년도 평균 이상 지역임.
 자료 : 인구총조사(2005), 지역별 고용조사(2008)



(단위 : %)

<'05 인구총조사>

<'08 지역별 고용조사>



주 : 진한 부분은 전국 평균(18.8%) 이상 지역임
 자료 : 인구총조사(2005), 지역별 고용조사(2008)

주 : 진한 부분은 전국 평균(18.2%) 이상 지역임

[그림 4-15] 베이비붐 세대의 시군구별 분포

<표 4-15>와 [그림 4-16]은 1995년 대비 2005년의 베이비붐 세대의 시군구별 증감 인구수 및 증감률이다. 1995년 대비 2005년에 베이비붐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특.광역시는 서울시의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부산의 북구, 해운대구, 대구시의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시의 중구, 옹진군, 광주시의 서구, 광산구, 대전시의 서구, 유성구이며, 울산시는 해당지역이 없다. 경기도는 수원시,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군, 양평군이며, 강원도는 춘천시, 원주시, 양양군으로 나타난다. 충청북도는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충청남도는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태안군, 당진군이다. 전라북도는 전주시가 유일하며, 전라남도는 여주시, 광양시, 화순군, 영암군, 경상북도는 경산시, 경상남도는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제주도는 제주시가 각각 베이비붐 인구수가 증가한 지역으로 나타난다. 시군구별 증가 인구수 상위지역은 용인시(45천 명), 고양시(28천 명), 시흥시(25천 명), 남양주시(18천 명) 등이다.

지역별 베이비붐 인구 증감률을 살펴보면 특.광역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1995년 대비 2005년의 베이비붐 세대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부 증가한 지역은 특.광역시의 경우 서울시의 서초구, 강남구, 부산시의 동래구, 대구시의 수성구, 인천시의 강화군, 옹진군 등이다. 도 지역은 경기도의 여주군, 양평군, 강원도의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양양군이며, 충청북도의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충청남도의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전라북도는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이다. 전라남도는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등이며, 경상북도는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등이다. 경상남도는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등에서, 제주도는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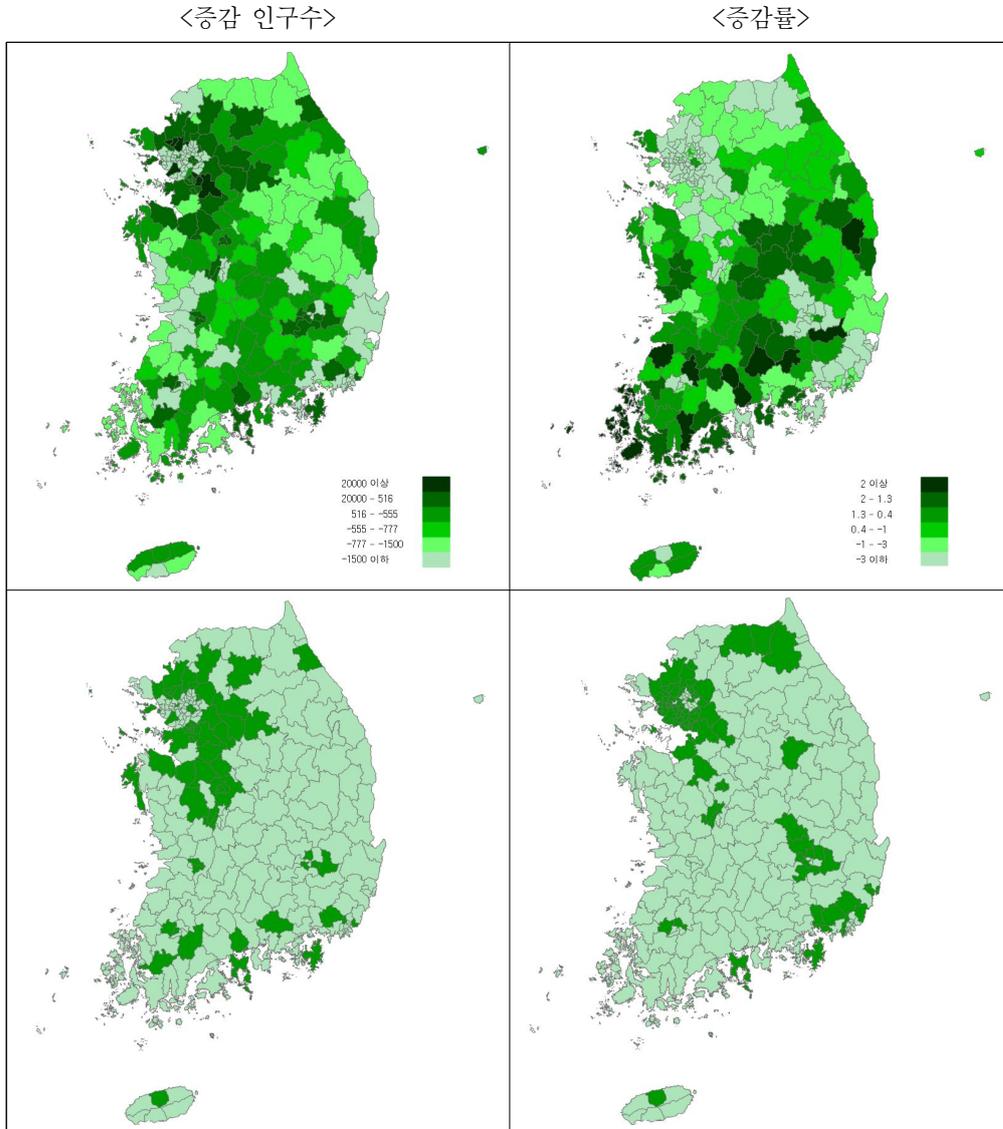
<표 4-15> 베이비붐 세대의 시군구별 증감인구수 및 증감률(2005년~1995년)

(단위 :천 명, %)

지역	시군구	증감인구수 (증감률)	지역	시군구	증감인구수 (증감률)	지역	시군구	증감인구수 (증감률)	지역	시군구	증감인구수 (증감률)	
서울시	종로구	-5 (-0.88)	광주시	동구	-3 (-0.78)	충북	화천군	-1 (-4.83)	경북	강진군	-0.7 (1.2)	
	중구	-2 (-2.09)		서구	8 (-3.05)		양구군	-0.9 (-3.28)		예남군	-1 (1.48)	
	용산구	-8 (-1.67)		남구	-5 (-1.05)		인제군	-0.9 (-3.22)		영암군	0.9 (0.6)	
	성동구	-9 (-3.84)		북구	-6 (-3.3)		고성군	-1 (-0.96)		무안군	-0.8 (0.65)	
	광진구	-11 (-4.12)		광산구	8 (-7.17)		양양군	0.5 (0.55)		함평군	-0.3 (1.87)	
	동대문구	-11 (-2.46)	대전시	동구	-8 (-2.28)	청주시	4 (-3.96)	영광군	-0.6 (-0.22)			
	종로구	-12 (-3.71)		중구	-2 (-1.18)	충주시	-1 (-1.74)	장성군	-0.8 (0.38)			
	성북구	-12 (-2.03)		서구	5 (-5.76)	제천시	-1 (-1.69)	원도군	-0.3 (1.9)			
	강북구	-11 (-2.18)		유성구	8 (-6.89)	청원군	0.3 (-0.1)	진도군	-0.3 (2.03)			
	도봉구	-8 (-5.66)		대덕구	-3 (-5.49)	보은군	-0.7 (1.22)	신안군	-1 (2.9)			
	노원구	-12 (-5.88)	울산시	중구	-16 (-4.91)	옥천군	-0.3 (1.43)	포항시	-0.8 (-2.94)			
	은평구	-14 (-3.24)		남구	-1 (-4.93)	영동군	-0.5 (1.65)	경주시	-2 (-1.38)			
	서대문구	-7 (-2.5)		동구	-8 (-7.74)	증평군	0.1 (-1.93)	김천시	-0.5 (0.25)			
	마포구	-10 (-3.41)		북구	-	진천군	-0.6 (1.41)	안동시	-1 (0.26)			
	양천구	0.2 (-1.83)		울주군	-10 (-5.93)	괴산군	-0.01 (-1.59)	구미시	-5 (-7.25)			
	부산시	강서구	-9 (-5.58)	경기도	수원시	14 (-6.13)	충남	천안시	14 (-5.17)	경남	거창군	-0.6 (1.01)
		구로구	-3 (-4.27)		성남시	-20 (-6.29)		공주시	0.4 (0.13)		문경시	-1 (1.67)
		금천구	-10 (-3.52)		의정부시	6 (-7.32)		보령시	-2 (0.76)		경산시	3 (-4.09)
		영등포구	-10 (-3.24)		안양시	-19 (-6.77)		아산시	3 (-2.82)		군위군	-0.3 (0.4)
		동작구	-12 (-3.85)		부천시	-23 (-7.93)		서산시	-0.4 (-2.22)		의성군	-1 (1.61)
관악구		-18 (-4.6)	광명시	-22 (-8.4)	논산시	-1 (0.37)	청송군	-0.8 (-0.25)				
서초구		2 (0.78)	판택시	-1 (-4.82)	동두천시	-0.7 (-4.04)	계룡시	2 (-6.29)	영양군	-0.3 (1.6)		
강남구		5 (0.95)	안산시	-7 (-10.6)	고양시	28 (-9.0)	금산군	-0.6 (0.43)	영덕군	-0.3 (1.6)		
송파구		-16 (-2.87)	과천시	-4 (-5.18)	과천시	-4 (-5.18)	연기군	-0.6 (-1.44)	청도군	-0.1 (2.02)		
강동구		-13 (-3.46)	구리시	0.6 (-7.62)	남양주시	18 (-7.11)	부여군	-1 (1.43)	구령군	-		
대구시		중구	-1 (-0.47)	남양주시	18 (-7.11)	오산시	3 (-8.51)	서천군	-1 (1.53)	성주군	-0.7 (0.2)	
		서구	-5 (-0.07)	시흥시	25 (-12.2)	안산시	-7 (-10.6)	정양군	-0.3 (1.77)	철곡군	-0.4 (-5.31)	
		동구	-6 (-0.72)	군포시	-8 (-10.1)	의왕시	-0.4 (-9.95)	홍성군	-1 (0.13)	애천군	-0.7 (1.75)	
		영도구	-8 (-1.88)	의왕시	-0.4 (-9.95)	하남시	-2 (-6.4)	예산군	-1 (0.81)	봉화군	-0.4 (1.43)	
		부산진구	-11 (-2.1)	용인시	45 (-7.42)	용인시	45 (-7.42)	태안군	0.4 (0.93)	울진군	-1 (0.07)	
		동래구	-5 (0.05)	파주시	7 (-3.3)	파주시	7 (-3.3)	당진군	1 (0.44)	울릉군	-0.3 (0.37)	
		남구	-4 (-1.58)	이천시	0.3 (-4.09)	이천시	0.3 (-4.09)	진주시	4 (-1.82)	경남	창원시	-17 (-8.28)
		북구	1 (-5.89)	안성시	3 (-2.14)	안성시	3 (-2.14)	군산시	-4 (-1.83)	마산시	-3 (-1.33)	
		애운대구	13 (-2.2)	김포시	9 (-4.13)	김포시	9 (-4.13)	익산시	-5 (-1.98)	진주시	0.1 (-1.19)	
		사하구	-9 (-3.54)	화성시	12 (-1.97)	화성시	12 (-1.97)	정읍시	-1 (0.94)	진해시	-0.9 (-5.04)	
대전시	강서구	-3 (-1.69)	광주시	14 (-5.32)	광주시	14 (-5.32)	남원시	-1 (0.18)	통영시	-1 (-1.33)		
	연제구	-6 (-1.65)	양주시	5 (-5.13)	양주시	5 (-5.13)	김제시	-1 (1.03)	사천시	-1 (-1.47)		
	수영구	-3 (-1.32)	포천시	1 (-2.81)	포천시	1 (-2.81)	완주군	-0.03 (0.16)	김해시	12 (-7.19)		
	사상구	-8 (-4.25)	여주군	1 (0.48)	여주군	1 (0.48)	진안군	-0.5 (0.59)	밀양시	-0.9 (0.47)		
	기장군	-0.9 (-3.73)	강원도	춘천시	1 (-1.6)	춘천시	1 (-1.6)	무주군	-0.5 (0.74)	거제시	2 (-5.47)	
	대구시	중구	-5 (-0.77)	원주시	3 (-2.73)	원주시	3 (-2.73)	장수군	-0.3 (1.16)	양산시	-0.03 (-7.93)	
		동구	-9 (-3.23)	강릉시	-0.2 (-0.95)	강릉시	-0.2 (-0.95)	임실군	-0.8 (0.68)	의령군	-0.3 (2.21)	
		서구	-17 (-2.29)	동해시	-1 (-2.24)	동해시	-1 (-2.24)	순창군	-0.4 (1.43)	함안군	-0.3 (0.66)	
		남구	-7 (-1.43)	태백시	-0.7 (-1.82)	태백시	-0.7 (-1.82)	고창군	-0.8 (2.07)	창녕군	-0.7 (1.27)	
		북구	0.5 (-5.06)	속초시	-1 (0.61)	속초시	-1 (0.61)	부안군	-1 (1.07)	고성군	-0.4 (1.49)	
수성구		2 (0.47)	삼척시	-1 (0.61)	삼척시	-1 (0.61)	목포시	-2 (-2.23)	남해군	-0.4 (1.74)		
달서구		9 (-4.28)	홍천군	-0.2 (-1.25)	홍천군	-0.2 (-1.25)	여주시	11 (-3.12)	하동군	-0.4 (1.22)		
달성군		0.9 (-4.84)	횡성군	-0.3 (-0.21)	횡성군	-0.3 (-0.21)	순천시	-0.5 (-1.72)	산청군	-0.3 (2.05)		
인천시		중구	1 (-2.47)	영월군	-1 (0.13)	영월군	-1 (0.13)	나주시	-1 (0.73)	함양군	-0.1 (1.68)	
		동구	-4 (-1.59)	평창군	-0.6 (0.26)	평창군	-0.6 (0.26)	광양시	5 (2.58)	거창군	-0.02 (1.81)	
	서구	-9 (-3.38)	정선군	-1 (-0.56)	정선군	-1 (-0.56)	담양군	-0.7 (2.01)	함천군	-0.6 (1.54)		
	연수구	-1 (-10.7)	철원군	-1 (-1.65)	철원군	-1 (-1.65)	곡성군	-0.6 (1.53)	제주도	제주시	0.3 (-4.11)	
	남동구	-15 (-6.32)				구례군	-0.4 (2.25)	서귀포	-1 (-2.27)			
	부평구	-6 (-5.93)				고흥군	-1 (1.81)	북제주군	-0.3 (0.7)			
	계양구	-3 (-10.9)				보성군	-1 (1.79)	남제주군	-1 (0.76)			
	서구	-2 (-8.67)				화순군	0.4 (0.36)	전국	인구수	-343,256		
	강화군	-0.2 (0.64)				장흥군	-0.3 (2.01)	평균	증감률	-3.06		
	옹진군	0.05 (0.7)										

주 : 음영 처리된 부분은 베이비붐 인구수 증가 지역임
 자료 : 인구총조사 1995, 2005

(단위 : 명, %)



제4장

주 : 진한 부분은 베이비붐 인구수 증가 지역임 주 : 진한 부분은 증감률 평균(-3.06%p) 이하 지역임
 자료 : 인구총조사 1995, 2005

[그림 4-16] 베이비붐 세대의 시군구별 증감증감률(2005년~1995년)

다. 개인 특성

1) 혼인상태 및 교육수준

「인구총조사」 10% 표본 자료(2005년)에 나타난 베이비붐 세대의 주요 특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표 4-16>은 혼인상태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86.4%는 기혼유배우인 것으로 나타나며, 미혼은 4.1%, 사별 2.9%, 이혼 6.6%로 기혼유배우의 비중이 높다. 베이비붐 이전.이후 세대의 유배우율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은 62.5%, 51~59세는 84.3%, 30~41세는 76.9%, 19~29세는 16.4%로 전(全) 세대 중 베이비붐 세대의 유배우율이 가장 높다. 다음 <표 4-17>은 초혼 연령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초혼 연령의 연령대별 비중은 25~59세가 41.2%로 가장 높으며, 20~24세는 34.0%, 30~34세는 11.0% 순이며, 19세 이전에 결혼한 비중 또한 10.1%에 이른다. 한편 베이비붐 이전.이후 세대의 초혼연령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은 20~24세 36.1%, 19세 이전 28.2%, 25~29세 24.7%로 60세 이상의

<표 4-16> 혼인상태

(단위 : 천 명, %)

구분	이전세대		베이비붐 세대 (42~50세)	이후세대	
	60+	51~59세		30~41세	19~29세
미혼	43 (0.7)	77 (1.7)	295 (4.1)	1,864 (19.1)	6,107 (83.3)
유배우	3,908 (62.5)	3,737 (84.3)	6,156 (86.4)	7,516 (76.9)	1,198 (16.4)
사별	2,192 (35.0)	384 (8.7)	206 (2.9)	52 (0.5)	2 (0.03)
이혼	114 (1.8)	238 (5.4)	472 (6.6)	341 (3.5)	22 (0.3)

자료 : 인구센서스(2005년) 10% 표본자료

<표 4-17> 초혼연령

(단위 : 천 명, %, 세)

구분	이전세대		베이비붐 세대 (42~50세)	이후세대	
	60+	51~59세		30~41세	19~29세
~19세	1,764 (28.2)	467 (10.5)	718 (10.1)	2,094 (21.4)	-
20~24세	2,257 (36.1)	1,677 (37.8)	2,421 (34.0)	2,150 (22.0)	6,180 (84.3)
25~29세	1,545 (24.7)	1,758 (39.6)	2,939 (41.2)	4,121 (42.2)	528 (7.2)
30~34세	469 (7.5)	404 (9.1)	784 (11.0)	1,257 (12.9)	621 (8.5)
35+	224 (3.6)	130 (2.9)	268 (3.8)	151 (1.5)	-
평균초혼연령	23.3세	25.0세	25.7세	26.3세	24.2세

자료 : 인구센서스(2005년) 10% 표본자료



64.3%가 24세 이전에 혼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51~59세 연령대는 베이비붐 세대와 마찬가지로 25~59세에 결혼한 비중이 39.6%로 가장 높다.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초혼 연령을 살펴보면 30~41세 연령집단 역시 25~29세에 혼인한 비중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각 연령대별 평균 초혼연령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은 23.3세, 51~59세는 25세인 한편 베이비붐 세대는 25.7세로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 20대 중반에 결혼(초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18>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수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강력한 정부 주도의 가족계획사업의 출생률 억제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선진국형의 인구구조로 전환을 이루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47~1955년에 출생하여 평균 25.7세에 결혼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출산을 한 시기는 대략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로 추산된다. 이 시기는 정부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에 의한 계획출산을 하던 시기로, 특히 1970년대는 성별 구분 없이 2자녀 낳기가 장려되었다. <표 4-18>의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수별 비중을 살펴보면 2명의 비중이 64.2%로 가장 높으며, 3명 이상은 17.3%, 1명은 15.4%, 무자녀는 3.1%로 나타난다. 자녀수는 최근세대로 올수록 적어지는데, 베이비붐 이후 세대인 30~41세는 자녀수 2명이 60.2%, 1명 22.3%, 3명 이상은 10.4%인 반면 베이비붐 이전 세대인 51~59세는 3명 이상 46.5% 2명은 42.0%, 60세 이상은 3명 이상 78.8%로 나타난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자녀수는 2.0명이며, 60세 이상은 4.0명, 51~59세는 2.5명, 30~41세는 1.8명으로 나타난다.

<표 4-19>는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수준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등학교는 46.1%, 대학교 24.6%, 중학교 16.7%, 초등 이하는 8.7%로 나타난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학 이상 고등교육자의 비중은 28.5%로 이전 세대의 대학 이상자의 비중인 8.6%(60세 이상), 16.6%(51~59세)에 비하면 각각 19.9%p, 11.9%p 높은 수준이다.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대졸 이상 비중은 각각 48.4%(30~41세), 71.5%(19~29세)로 최

<표 4-18> 자녀수

(단위 : 천 명, %, 명)

구분	이전세대		베이비붐 세대 (42~50세)	이후세대	
	60+	51~59세		30~41세	19~29세
0명	142 (4.0)	54 (2.5)	106 (3.1)	303 (7.1)	314 (36.5)
1명	219 (6.1)	197 (9.0)	529 (15.4)	959 (22.3)	350 (40.7)
2명	401 (11.2)	923 (42.0)	2,215 (64.2)	2,593 (60.2)	180 (20.9)
3이상	2,830 (78.8)	1,022 (46.5)	598 (17.3)	44 (10.4)	16 (1.8)
평균자녀수	4.0명	2.5명	2.0명	1.8명	0.9명
	4.1명	2.6명	2.1명	1.9명	1.4명

자료 : 인구센서스(2005년) 10% 표본자료

근 세대로 올수록 대졸 이상자의 비중이 현격히 높아짐을 알 수 있다³²⁾.

그렇다면 베이비붐 세대(1947~1955년 출생자)와 2차 베이비붐 세대(1969~1975년 출생자),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1979~1985년)의 교육수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에코세대는 한국의 인구피라미드에서 세 개의 봉우리를 이루는 지점으로, 각각의 시기 사이에 10여 년의 간극이 존재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인의 대학 진학률은 최근 80%에 이른다. 베이비붐 세대의 28.5%만이 대학교육을 받았지만, 2차 베이비붐 세대는 52.5%,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는 73.8%가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 재학 중임을 알 수 있다³³⁾. 한편 초졸 이하의 비중은 베이비붐 세대 8.7%인 반면 2차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세대는 각각 0.7%, 0.3%로 1% 미만의 매우 낮은 비중을 보인다. 즉 세대 간 교육수준에 큰 차이가 존재하며, 이것이 이들의 의식수준의 차이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겠다.

〈표 4-19〉 교육수준 : 연령집단 1

(단위 : 천 명, %)

구분	이전세대		베이비붐 세대 (42~50세)	이후세대	
	60+	51~59세		30~41세	19~29세
초졸 이하	3,974 (63.5)	1,166 (26.3)	623 (8.7)	120 (1.2)	26 (0.4)
중학교	848 (13.5)	1,053 (23.7)	1,188 (16.7)	361 (3.7)	83 (1.1)
고등학교	895 (14.3)	1,484 (33.5)	3,286 (46.1)	4,562 (46.7)	1,975 (27.0)
대학교	475 (7.6)	619 (14.0)	1,752 (24.6)	4,231 (43.3)	5,045 (68.8)
대학원	62 (1.0)	114 (2.6)	281 (3.9)	498 (5.1)	201 (2.7)

자료 : 인구센서스(2005년) 10% 표본자료

〈표 4-20〉 교육수준 : 연령집단 2

(단위 : 천 명, %)

구분	베이비붐 세대 (42~50세)	2차 베이비붐 세대 (30~36세)	베이비붐 에코세대 (20~26세)
초졸 이하	623 (8.7)	40 (0.7)	15 (0.3)
중학교	1,188 (16.7)	127 (2.2)	53 (1.1)
고등학교	3,286 (46.1)	2,590 (44.7)	1,151 (24.7)
대학교	1,852 (24.6)	2,720 (47.0)	3,353 (72.0)
대학원	281 (3.9)	316 (5.5)	84 (1.8)

자료 : 인구센서스(2005년) 10% 표본자료

32) 특히 1980년대 초반 대학입학정원 자율화가 시행되면서 대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33)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 출생자)의 대학이상 비중은 57.7%로 이전 세대(41.2%)보다 16.5%p 높다.

2) 종교 및 활동제약

교육수준과 함께 종교는 사람들의 인식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지표가 된다. <표 4-21>은 베이비붐 세대의 종교분포이다. 종교별 비중을 살펴보면 불교가 48.2%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개신교 29.5%, 천주교 20.5% 순으로 불교보다는 기독교의 비중이 1.8%p 높다. 종교 분포는 베이비붐 세대 이전·이후 세대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전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보다 불교와 유교의 비중이 더 높은 반면 개신교와 천주교의 비중은 더 낮다. 반면 이후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불교와 유교의 비중은 더 낮은 반면 개신교와 천주교의 비중은 더 높다. 불교와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고, 전통적인 사상이 보다 강조되는 종교라면 개신교와 천주교는 전통이나 인습보다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종교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는 적어도 이전 세대보다는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일정부분 경험했으며, 전통주의 가치관보다는 근대적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선호하게 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21> 종교 : 연령집단 1

(단위 : 천 명, %)

	이전세대		베이비붐 세대 (42~50세)	이후세대	
	60+	51~59세		30~41세	19~29세
불교	2,033 (52.1)	1,421 (51.3)	1,993 (48.2)	1,984 (41.8)	1,380 (39.7)
개신교	1,035 (26.5)	751 (27.1)	1,219 (29.5)	1,658 (34.9)	1,234 (35.5)
천주교	710 (18.2)	541 (19.5)	849 (20.5)	1,017 (21.4)	805 (23.2)
유교	53 (1.4)	16 (0.6)	12 (0.3)	11 (0.2)	8 (0.2)
기타	70 (1.8)	42 (1.5)	60 (1.5)	76 (1.6)	51 (1.5)

자료 : 인구센서스(2005년) 10% 표본자료

<표 4-22> 종교 : 연령집단 2

(단위 : 천 명, %)

	베이비붐 세대 (42~50세)	2차 베이비붐 세대 (30~36세)	베이비붐 에코세대 (20~26세)
불교	1,993 (48.2)	1,090 (40.2)	897 (40.0)
개신교	1,219 (29.5)	979 (36.1)	784 (35.0)
천주교	849 (20.5)	586 (22.0)	523 (23.3)
유교	12 (0.3)	6 (0.2)	5 (0.2)
기타	60 (1.5)	44 (1.6)	33 (1.5)

자료 : 인구센서스(2005년) 10% 표본자료



그렇다면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 및 베이비붐 에코세대의 종교 분포는 어떠한 양상을 보일까? <표 4-22>는 이들 세 집단의 종교분포이다.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2차 베이비붐 세대와 베이비붐 에코세대는 불교와 유교의 비중이 낮은 반면 개신교와 천주교의 비중이 높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교육수준은 높은 한편 기독교의 비중이 높아 근대적 가치관을 부모 세대보다 많이 내면화시켰다고 파악된다.

<표 4-23>은 베이비붐 세대의 활동제약 분포이다. 베이비붐 세대 중 육체적 및 정신적 제약이 있는 인구는 263천 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한다. 베이비붐 이전.이후 세대의 활동제약 비중을 살펴보면 19~29세는 1.6%, 30~41세는 2.2% 이며, 51~59세는 7.1%, 60세 이상은 26.9%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활동제약 ‘있음’의 비중이 증가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세부 항목별 활동제약 비중을 살펴보면 시.청각 및 언어장애는 전체의 0.6%, 치매는 0.01%, 중풍은 0.11%, 걷기, 계단 오르기 등의 육체적 제약은 2.0%, 정신적 질환 등의 제약은 0.8%로 나타난다. <표 4-24>는 일상생활 활동제약 유무이다. 베이비붐 세대 인구 중 배우기, 기억하기, 옷 입기, 쇼핑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96천 명인 전체의 2.8% 수준으로 육체적.정신적 활동제약(3.7%)에 비해서는 0.9%p 비중이 낮다.

<표 4-23> 활동제약 I (육체적 . 정신적 활동제약)

(단위 :천 명, %)

	이전세대		베이비붐 세대 (42~50세)	이후세대	
	60+	51~59세		30~41세	19~29세
있음	1,686 (26.9)	316 (7.1)	263 (3.7)	216 (2.2)	115 (1.6)
없음	4,571 (73.1)	4,120 (92.9)	6,867 (96.3)	9,557 (97.8)	7,214 (98.4)
시청각 및 언어장애	298 (4.8)	48 (1.1)	42 (0.6)	37 (0.4)	23 (0.3)
치매	78 (1.2)	2 (0.05)	- (0.01)	- (0.004)	-
중풍	152 (2.43)	20 (0.45)	8 (0.11)	2 (0.02)	(0.004)
육체적 제약	1,359 (21.7)	219 (4.9)	140 (2.0)	73 (0.8)	26 (0.4)
정신적 제약	158 (2.5)	41 (0.9)	57 (0.8)	59 (0.6)	33 (0.5)

주 : 육체적.정신적 제약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활동제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자료 : 인구센서스(2005년) 10% 표본자료

<표 4-24> 활동제약 II (일상생활 활동제약)

(단위 :천 명, %)

	이전세대		베이비붐 세대 (42~50세)	이후세대	
	60+	51~59세		30~41세	19~29세
있음	1,223 (20.0)	212 (4.8)	196 (2.8)	186 (1.9)	111 (1.5)
없음	5,034 (80.0)	4,223 (95.2)	6,934 (97.2)	9,587 (98.1)	7,218 (98.5)

자료 : 인구센서스(2005년) 10% 표본자료

3) 세대구성 및 주거

<표 4-25>는 세대구성 현황의 연령 세대별 분포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73.9%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유형에 속하며, 1세대는 9.6%, 3세대는 9.4%, 1인 및 비혈연 가구는 7.1%로 나타난다. 베이비붐 이전 세대인 51~59세 연령집단의 세대구성 현황은 2세대의 비중이 59.5%, 1세대가 22.3%, 3세대 9.5%, 60세 이상의 세대구성은 1세대 34.1%, 2세대 29.0%로 2세대 가구의 비중은 베이비붐 세대에 최고에 이르며, 이후 자녀의 출가 및 사별 등으로 인하여 2세대의 비중은 감소하고, 1세대와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4-26>은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유형이다. 베이비붐 세대 중 아파트 거주 비중은 50.3%로 절반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35.6%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밖에 다세대 주택 비중은 7.3%, 연립주택은 3.7%, 기타는 3.0%로 나타난다. 베이비붐 이전세대인 60세 이상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 비중이 59.8%로 가장 높으며, 아파트 거주 비중은 28.5%이다. 51~59세의 경우 단독주택은 46.4%, 아파트 39.0%, 다세대 주택은 7.1%로 나타난다. 베이비붐 이후세대인 30~41세 연령집단의 경우 아파트 거

<표 4-25> 세대 구성

(단위 : 천 명, %)

	이전세대		베이비붐 세대 (42~50세)	이후세대	
	60+	51~59세		30~41세	19~29세
1세대	2,136 (34.1)	988 (22.3)	687 (9.6)	765 (7.8)	791 (10.8)
2세대	1,813 (29.0)	2,641 (59.5)	5,265 (73.9)	7,154 (73.2)	4,611 (62.9)
3세대	1,199 (19.2)	420 (9.5)	667 (9.4)	962 (9.9)	597 (8.2)
4세대 이상	29 (0.5)	10 (0.2)	5 (0.1)	18 (0.2)	12 (0.2)
1인 및 비혈연 가구	1,079 (17.3)	377 (8.5)	505 (7.1)	873 (8.9)	1,318 (18.0)

자료 : 인구센서스(2005년) 10% 표본자료

<표 4-26> 주택 유형

(단위 : 천 명, %)

	이전세대		베이비붐 세대 (42~50세)	이후세대	
	60+	51~59세		30~41세	19~29세
단독주택	3,743 (59.8)	2,060 (46.4)	2,541 (35.6)	3,068 (31.4)	3,036 (41.4)
아파트	1,783 (28.5)	1,731 (39.0)	3,584 (50.3)	5,285 (54.1)	2,922 (39.9)
연립주택	199 (3.2)	173 (3.9)	266 (3.7)	332 (3.4)	255 (3.5)
다세대	333 (5.3)	316 (7.1)	523 (7.3)	808 (8.3)	614 (8.4)
기타	199 (3.2)	157 (3.5)	217 (3.0)	280 (2.9)	503 (6.9)

자료 : 인구센서스(2005년) 10% 표본자료



〈표 4-27〉 주택 형태

(단위 : 천 명, %)

	이전세대		베이비붐 세대 (42~50세)	이후세대(20~41)	
	60+	51~59세		30~41세	19~29세
자 가	4,834 (78.0)	3,267 (74.0)	4,567 (64.4)	5,019 (51.6)	3,711 (52.6)
전 세	636 (10.3)	522 (11.8)	1,257 (17.7)	2,682 (27.6)	1,536 (21.8)
월 세	492 (7.9)	480 (10.9)	992 (14.0)	1,554 (16.0)	1,421 (20.2)
기 타	239 (3.9)	147 (3.3)	280 (4.0)	463 (4.8)	384 (5.4)

자료 : 인구센서스(2005년) 10% 표본자료

주 비중이 더욱 증가하여 전체의 54.1%가 아파트에 거주한다. 세대별 주택 유형의 차이는 이들의 개인적 선호도나 지역분포, 가족구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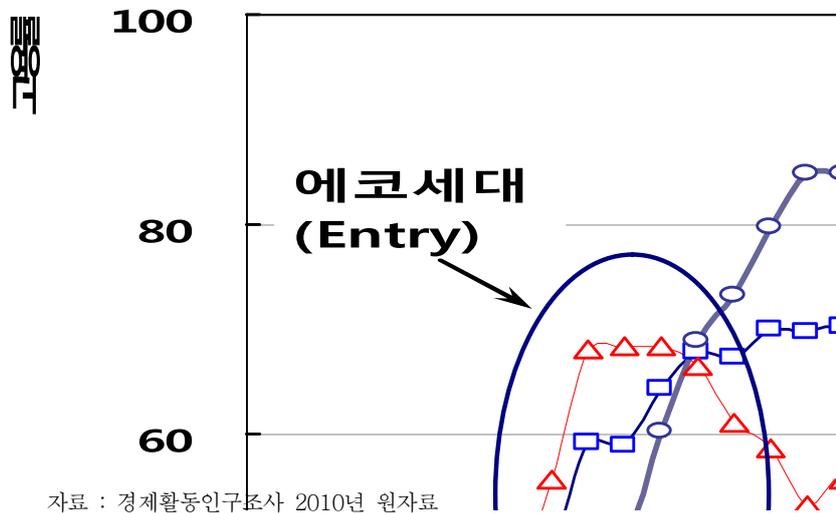
<표 4-27>은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형태이다. 베이비붐 세대 중 집을 소유한 비중은 64.4%이며, 전세는 17.7%, 월세는 14.0%, 기타 유형은 4.0%를 차지한다. 베이비붐 이전 세대의 주택 점유형태는 60세 이상은 자가의 비중이 78.0%에 이르며, 전·월세는 18.2%, 51~59세는 자가는 74.0%, 전·월세는 22.7%로 나이든 세대일수록 자기 집을 소유한 비중이 높아진다.

2. 경제활동 현황 및 특성

가. 고용률

2.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현황 및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 47세~55세에 이른 연령집단으로 노동시장에서 중년층(45세~54세)의 위치에 해당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중·고령자가 접하는 위치와 특성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를 상회하여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 고령노동시장의 특성은 단적으로 말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로 요약되는데, 이는 은퇴자를 위한 복지체계의 미비와 한국 특유의 일 문화, 고령층의 높은 실망 실업률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기인한 것으로 한국 노동시장이 중·고령자들에 친화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데는 이론이 있을 것이다. 특히 45~54세의 중년기는 개인의 근로생애 중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정점에 이루거나, 정점을 이룬 후 하강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그림 4-17]의 연령-고용률 곡선을 살펴보면 세대별 노동시장 진입과 은퇴의 패턴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47~55세)는 고용률 최고점을 이룬 후 탈퇴가 시작되는 시점인 반면 에코세대는 최종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에

막 진입하는 시점으로, 에코남성보다 에코여성의 이른 진입이 관찰된다.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년 원자료

[그림 4-17] 연령별 고용률



나. 직·산업 분포, 취업형태

1) 산업 및 직업분포

가)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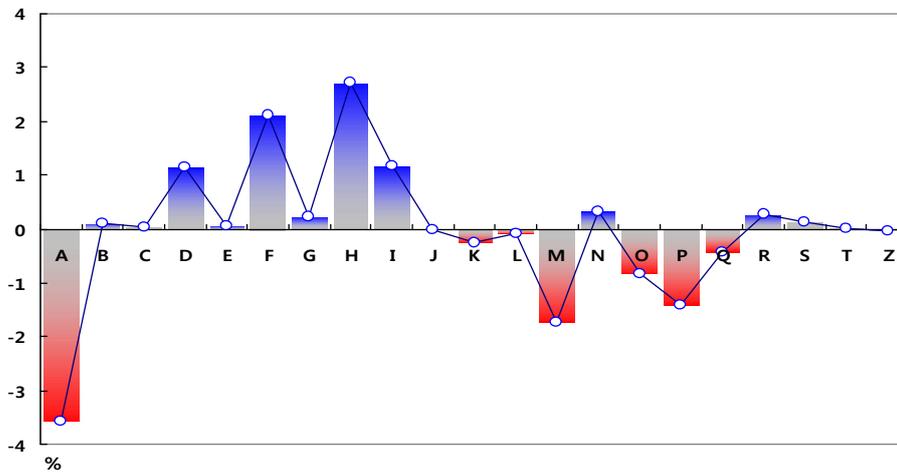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의 산업분포 현황은 인구총조사 경제활동 10% 표본자료(2005년)를 통해 검토하였다. <표 4-28>는 인구총조사 경제활동 10% 표본자료에 나타난 베이비붐 세대의 산업분포이다. 인총 표본자료에 의하면 전체 취업자의 산업분포는 제조업 19.73%, 도매 및 소매업 15.03%, 농업 및 임업 10.36%, 숙박 및 음식점업 7.74%, 건설업 7.48%, 교육 서비스업 6.77% 순이다. 이중 베이비붐 세대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 20.88%, 도매 및 소매업 15.27%, 숙박 및 음식점업 10.47%, 건설업 9.61%, 농업 및 임업 6.79%, 교육 서비스업 5.93%, 운수업 5.8%,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4.68% 순이다. 전체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와 비교했을 때,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2.73%p), 건설업(2.12%p), 운수업(1.17%p), 제조업(1.15%p) 등으로 나타난다.

<표 4-28> 베이비붐 세대의 산업분포 : 대분류

(단위 : 천 명, %)

대분류	전체(A)		베이비붐(B)		(B-A)
A. 농업, 임업	1,998	(10.36)	331	(6.79)	-3.57
B. 어업	102	(0.53)	31	(0.64)	0.1
C. 광업	20	(0.11)	7	(0.14)	0.04
D. 제조업	3,804	(19.73)	1,18	(20.88)	1.15
E. 전기가스, 수도	87	(0.45)	25	(0.51)	0.06
F. 건설업	1,443	(7.48)	469	(9.61)	2.12
G. 도매 및 소매업	2,897	(15.03)	745	(15.27)	0.24
H. 숙박 및 음식점업	1,493	(7.74)	511	(10.47)	2.73
I. 운수업	892	(4.63)	283	(5.8)	1.17
J. 통신업	225	(1.17)	56	(1.15)	-0.02
K. 금융 및 보험업	633	(3.28)	148	(3.04)	-0.25
L. 부동산 및 임대업	461	(2.39)	113	(2.31)	-0.08
M. 사업 서비스업	1,122	(5.82)	199	(4.08)	-1.74
N. 공공행정업	741	(3.85)	203	(4.17)	0.32
O. 교육 서비스업	1,305	(6.77)	289	(5.93)	-0.84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93	(3.6)	107	(2.19)	-1.41
Q. 오락, 문화	393	(2.04)	79	(1.62)	-0.42
R. 공공, 개인	846	(4.39)	228	(4.68)	0.29
S. 가사서비스	52	(0.27)	20	(0.41)	0.14
T. 국제, 외국기관	9	(0.05)	3	(0.05)	0.01
Z. 분류불가능	60	(0.31)	13	(0.27)	-0.04
계	19,277	(100.0)	4,877	(100.0)	

자료 : 인구총조사 10% 표본(2005년)



자료 : 인구총조사 10% 표본(2005년)

주 : 제시된 수치는 각 산업별 베이비붐 비중 - 각 산업별 전체 취업자 비중임.

D는 제조업, F는 건설업, H는 숙박 및 음식점업, I는 운수업 임.

[그림 4-18] 산업별 전체 대비 베이비붐 비중

<표 4-29>는 베이비붐 세대의 산업분포 현황을 중분류 수준에서 검토한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분포된 업종인 제조업을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대비 베이비

<표 4-29> 베이비붐 세대의 산업분포 : 중분류

(단위 : 천 명, %)

중분류	전체(A)	베이비붐(B)	(B-A)
A 농업	1,992 (10.33)	330 (6.8)	-3.58
임업	6 (0.03)	2 (0.03)	0.00
B. 어업	102 (0.53)	31 (0.64)	0.1
C.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7 (0.03)	3 (0.06)	0.03
금속 광업	0.4 (0.00)	0.09 (0.00)	0.00
비금속 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13 (0.07)	4 (0.08)	0.01
D. 음·식료품 제조업	304 (1.58)	88 (1.8)	0.22
담배 제조업	5 (0.02)	1 (0.02)	0.00
섭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194 (1.01)	65 (1.33)	0.32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27 (1.18)	80 (1.65)	0.47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62 (0.32)	26 (0.53)	0.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36 (0.19)	13 (0.26)	0.0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7 (0.35)	20 (0.41)	0.06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68 (0.87)	43 (0.87)	0.00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14 (0.07)	3 (0.07)	-0.01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83 (0.95)	42 (0.87)	-0.0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45 (0.75)	41 (0.85)	0.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23 (0.64)	37 (0.75)	0.11
제1차 금속산업	132 (0.68)	40 (0.81)	0.13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 및 가구 제외	292 (1.52)	90 (1.85)	0.33
기타 기 및 장비 제조업	355 (1.84)	98 (2.00)	0.16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65 (0.34)	9 (0.18)	-0.15
기타 전기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118 (0.61)	32 (0.65)	0.04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30 (2.75)	82 (1.68)	-1.0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 제조업	77 (0.4)	19 (0.38)	-0.0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66 (1.9)	93 (1.91)	0.0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43 (0.74)	40 (0.82)	0.08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186 (0.96)	55 (1.12)	0.15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0.4 (0.02)	1 (0.03)	0.01
E. 전기, 가스 및 증기업	72 (0.37)	20 (0.4)	0.03
수도사업	15 (0.08)	5 (0.1)	0.03
F. 종합 건설업	640 (3.32)	203 (4.16)	0.84
전문직별 공사업	802 (4.16)	265 (5.44)	1.28
G.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185 (0.96)	44 (0.91)	-0.0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807 (4.18)	206 (4.22)	0.04
소매업; 자동차 제외	1,905 (9.88)	494 (10.14)	0.26



〈표 4-29〉 베이비붐 세대의 산업분포 : 중분류 (계속)

(단위 : 천 명, %)

중분류	전체(A)	베이비붐(B)	(B-A)
H. 숙박 및 음식점업	1,492 (7.74)	511 (10.47)	2.73
I.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62 (3.43)	234 (4.79)	1.36
수상 운송업	21 (0.11)	5 (0.1)	-0.01
항공 운송업	28 (0.15)	5 (0.1)	-0.05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82 (0.94)	39 (0.81)	-0.13
J. 통신업	225 (1.17)	56 (1.15)	-0.02
K. 금융업	304 (1.58)	60 (1.22)	-0.35
보험 및 연금업	263 (1.37)	73 (1.49)	0.13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6 (0.34)	16 (0.32)	-0.02
L. 부동산업	421 (2.19)	103 (2.11)	-0.07
기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40 (0.21)	10 (0.2)	-0.01
M.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205 (1.07)	18 (0.37)	-0.69
연구 및 개발업	103 (0.53)	18 (0.36)	-0.1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72 (2.45)	87 (1.78)	-0.67
사업지원 서비스업	342 (1.77)	76 (1.57)	-0.21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	741 (3.85)	203 (4.17)	0.32
O. 교육 서비스업	1,305 (6.77)	289 (5.93)	-0.84
P. 보건업	514 (2.67)	76 (1.55)	-1.11
사회복지사업	180 (0.93)	31 (0.64)	-0.3
Q.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111 (0.58)	17 (0.35)	-0.22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281 (1.46)	62 (1.26)	-0.2
R.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43 (0.22)	12 (0.25)	0.03
회원 단체	182 (0.95)	50 (1.03)	0.08
수리업	273 (1.42)	67 (1.36)	-0.06
기타 서비스업	347 (1.8)	99 (2.04)	0.24
S. 가사 서비스업	52 (0.27)	20 (0.41)	0.14
T. 국제 및 외국기관	9 (0.05)	3 (0.05)	0.01
Z. 분류불가	70 (0.36)	16 (0.32)	-0.04
계	19,277 100.0	4,877 100.0	

자료 : 인구총조사 10%표본(2005년)

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음식료품 제조업(0.22%p), 섬유제품 제조업(0.32%p), 봉제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0.47%p),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0.21%p),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0.1%p),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0.11%p), 제1차 금속산업(0.13%p), 조립금속제품 제조업(0.33%p), 기타 기 및 장비 제조업(0.16%p),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0.08%p),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0.15%p)이다. 건설업 부문은 종합 건설업과 전문직별 공사업 모두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전체보다 높게 나타난다. 운수업의 세부 업종별 베이비붐 세대의 비

중을 살펴보면 육상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의 비중이 전체보다 1.36%p 높다. 이 밖에 전체 대비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전기, 가스 및 증기업(0.03%p), 수도사업(0.03%p), 숙박 및 음식점업(2.73%p), 보험 및 연금업(0.13%p),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0.32%p),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0.03%p), 기타 서비스업(0.24%p), 가사 서비스업(0.14%p) 등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인구총조사 경찰 10% 표본자료를 통해 베이비붐 취업자의 산업분포 현황을 검토한 결과, 베이비붐 세대는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운수업 중 육상 운송업과 일부 제조업 부문에 높은 비중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2005년에 조사된 자료로 근로자의 노동이동을 감안한다면 좀 더 최근자료를 통한 현황 검토가 필요하다.

<표 4-30>은 산업분포를 세대별(베이비붐 세대와 이전세대 및 이후세대)로 비교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자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자영업 등의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며, 산업분포는 이러한 취업형태의 변화를 반영한다. 베이비붐 이전세대(51+)의 산업별 분포는 농업 및 임업의 비중이 전체의 33.09%를 차지하며, 도매 및 소매업(11.8%), 제조업(11.18%), 숙박 및 음식점업(7.1%), 건설업(6.19%) 순이다. 51세 이상의 산업분포를 베이비붐 세대와 비교하면 농림어업의 비중(26.3%p)이 현저히 높으며, 부동산 및 임대업 비중(2.05%p) 역시 약간 높다. 한편 베이비붐 이후 세대(15~41세)의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22.96%), 도매 및 소매업(16.34%), 교육 서비스업(8.55%), 사업서비스업(7.61%), 건설업(7.02%) 순으로 나타난다. 베이비붐 세대의 산업 분포와 비교하면 제조업(2.08%p), 도매 및 소매업(1.07%p), 금융 및 보험업(1.27%p), 사업서비스업(3.53%p), 교육 서비스업(2.62%p)이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베이비붐 이전 및 이후 세대 간 산업분포의 차이는 대체적으로 연령에 따른 취업 형태의 변화와 시기별 산업구조의 변화에 기인하며, 산업별 비중에 베이비붐 세대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인구구조에서 세 개의 봉우리를 이루는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에코세대는 산업분포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일까?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유입 및 퇴출은 주로 연령집단 간 세대교체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각 연령집단별 산업분포는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표 4-31>은 베이비붐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에코세대의 산업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앞서도 논의했듯이 전체 대비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이다. 2차 베이비붐 세대 및 베이비붐 에코세대의 산업별 비중과 비교해 보면 제조업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보다 2차 베이비붐 세대 및 에코세대의 비중이 높으나,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및 운수업은 여전히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게 분포된다.



〈표 4-30〉 베이비붐 세대의 산업분포 : 세대별 비교 1

(단위 : 천 명, %)

대분류	전체	이전세대 (51+)	베이비붐 세대 (42~50세)	이후세대 (15~41세)
A. 농업, 임업	1,998 (10.36)	1,463 (33.09)	46 (6.79)	203 (2.04)
B. 어업	102 (0.53)	51 (1.15)	4 (0.64)	21 (0.21)
C. 광업	20 (0.11)	7 (0.15)	0.7 (0.14)	7 (0.07)
D. 제조업	3,804 (19.73)	494 (11.18)	98 (20.88)	2,291 (22.96)
E. 전기가스, 수도	87 (0.45)	13 (0.3)	2 (0.51)	49 (0.49)
F. 건설업	1,443 (7.48)	274 (6.19)	45 (9.61)	700 (7.02)
G. 도매 및 소매업	2,897 (15.03)	522 (11.8)	70 (15.27)	1,630 (16.34)
H. 숙박 및 음식점업	1,493 (7.74)	314 (7.1)	50 (10.47)	668 (6.69)
I. 운수업	892 (4.63)	247 (5.6)	27 (5.8)	362 (3.62)
J. 통신업	225 (1.17)	20 (0.46)	5 (1.15)	149 (1.49)
K. 금융 및 보험업	633 (3.28)	55 (1.25)	14 (3.04)	430 (4.31)
L. 부동산 및 임대업	461 (2.39)	193 (4.36)	11 (2.31)	156 (1.56)
M. 사업서비스업	1,122 (5.82)	164 (3.71)	19 (4.08)	759 (7.61)
N. 공공행정업	741 (3.85)	121 (2.74)	20 (4.17)	417 (4.18)
O. 교육서비스업	1,305 (6.77)	163 (3.69)	28 (5.93)	853 (8.55)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93 (3.6)	64 (1.46)	11 (2.19)	522 (5.23)
Q. 오락, 문화	393 (2.04)	48 (1.09)	8 (1.62)	266 (2.66)
R. 공공, 개인서비스	846 (4.39)	174 (3.94)	23 (4.68)	444 (4.45)
S. 가사서비스	52 (0.27)	22 (0.5)	2 (0.41)	10 (0.1)
T. 국제, 외국기관	9 (0.05)	3 (0.06)	0.2 (0.05)	4 (0.04)
Z. 분류불가능	60 (0.31)	8 (0.18)	1 (0.27)	39 (0.39)
계	19,277 (100.0)	4,422 (100.0)	4,877 (100.0)	9,979 (100.0)

자료 : 인구총조사 10% 표본(2005년)

주 : 세대별 연령은 2005년 기준임

베이비붐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 에코세대 간의 산업분포의 차이는 주로 연령효과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들 집단 간 산업 분포를 통해 향후 세대 간 노동력 유·출입 패턴을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산업별 분포는 제조업(22.18%), 도·소매업(16.28%), 사업서비스업(8.35%), 교육서비스업(8.25%), 건설업(7.81%), 숙박 및 음식점업(5.78%) 순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농림어업의 비중이 낮고, 교육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 공공·개인서비스업의 비중이 각각 1.48%p, 2.53%p, 0.27%p 높다. 한편 에코세대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대비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의 비중이 각각 2.35%p, 3.09%p, 5.73%p 높다.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 산업별 취업자가 에코세대로 대체된다는 가정하에 산업별 인력수급 현황을 추산해 보면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산업은 농림어업 및 광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숙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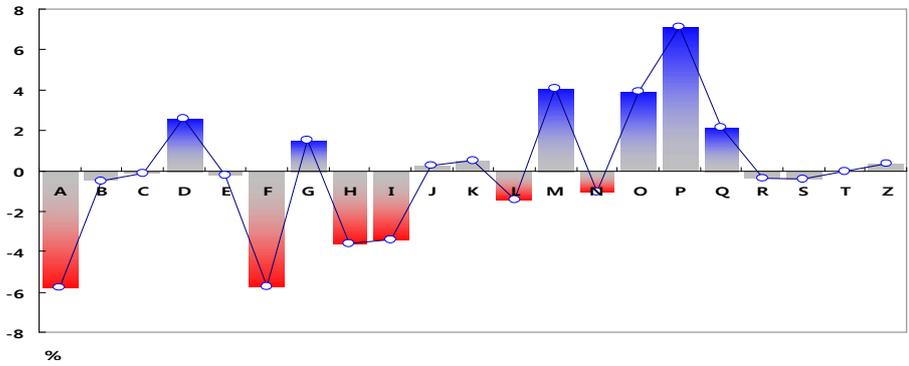
및 음식점업,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공공행정업 등이다. 반면 인력초과가 예상되는 산업은 제조업, 도소매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 오락문화 서비스업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별 단순 비중에 의해 추산된 것으로 향후 산업구조 변화요인 등이 반영되지 않아 절대적인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표 4-31〉 베이비붐 세대의 산업분포 : 세대별 비교 2

(단위 : 천 명, %)

대분류	전체	베이비붐 A (42~50세)	2차 베이비붐 세대 B (30~36세)	베이비붐 예코세대 C (20~26세)	C-A(%)
A. 농업, 임업	1,998 (10.36)	46 (6.79)	73 (1.93)	20 (1.01)	-5.78
B. 어업	102 (0.53)	4 (0.64)	7 (0.19)	2 (0.12)	-0.52
C. 광업	20 (0.11)	0.7 (0.14)	3 (0.07)	0.8 (0.04)	-0.1
D. 제조업	3,804 (19.73)	98 (20.88)	835 (22.18)	468 (23.47)	2.59
E. 전기가스, 수도	87 (0.45)	2 (0.51)	21 (0.57)	6 (0.31)	-0.2
F. 건설업	1,443 (7.48)	45 (9.61)	294 (7.81)	77 (3.88)	-5.73
G. 도매 및 소매업	2,897 (15.03)	70 (15.27)	613 (16.28)	335 (16.8)	1.53
H. 숙박 및 음식점업	1,493 (7.74)	50 (10.47)	217 (5.78)	137 (6.88)	-3.59
I. 운수업	892 (4.63)	27 (5.8)	145 (3.85)	48 (2.41)	-3.39
J. 통신업	225 (1.17)	5 (1.15)	62 (1.65)	29 (1.43)	0.28
K. 금융 및 보험업	633 (3.28)	14 (3.04)	180 (4.79)	71 (3.54)	0.51
L. 부동산 및 임대업	461 (2.39)	11 (2.31)	65 (1.72)	17 (0.86)	-1.45
M. 사업서비스업	1,122 (5.82)	19 (4.08)	314 (8.35)	163 (8.17)	4.09
N. 공공행정업	741 (3.85)	20 (4.17)	179 (4.75)	62 (3.13)	-1.04
O. 교육서비스업	1,305 (6.77)	28 (5.93)	310 (8.25)	197 (9.86)	3.93
P. 보건 및 사회복지업	693 (3.6)	11 (2.19)	158 (4.2)	186 (9.33)	7.14
Q. 오락, 문화	393 (2.04)	8 (1.62)	94 (2.51)	75 (3.79)	2.17
R. 공공, 개인	846 (4.39)	23 (4.68)	175 (4.66)	86 (4.32)	-0.36
S. 가사서비스	52 (0.27)	2 (0.41)	3 (0.08)	0.4 (0.02)	-0.39
T. 국제, 외국기관	9 (0.05)	0.2 (0.05)	2 (0.05)	0.3 (0.02)	-0.04
Z. 분류불가능	60 (0.31)	1 (0.27)	13 (0.34)	12 (0.62)	0.35
계	19,277 (100.0)	4,877 (100.0)	3,763 (100.0)	1,994 (100.0)	





자료 : 인구총조사 10% 표본(2005년)
 주 : 제시된 수치는 각 산업별 베이비붐 세대 비중 - 각 산업별 예코세대 비중임. F는 건설업, H는 음식숙박업, I는 운수업, M은 사업서비스업, O는 교육 서비스업, P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임
 [그림 4-19] 산업별 예코세대 대비 베이비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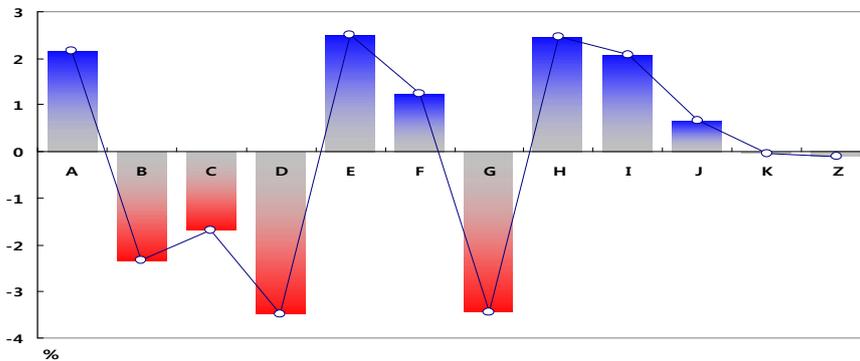
나) 직업

<표 4-32>는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분포이다. 전체 취업자의 직업분포는 사무직 16.31%, 장치·기계조작 조립원 11.61%, 판매직 10.98%, 농림어업직 10.65%, 기능원 10.0%, 전문가 9.92%, 기술공 8.99%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분포는 장치·기계조작 조립원 13.68%, 사무직 12.82%, 기능원 12.47%, 판매직 12.22%, 서비스직 12.17%,

<표 4-32>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분포 : 대분류

(단위 : 천 명, %)

대분류	전체(A)	베이비붐(B)	(B-A)
A. 의회의원 및 고위임직원	693 (3.59)	281 (5.76)	2.17
B. 전문가	1,912 (9.92)	369 (7.58)	-2.34
C. 기술공	1,732 (8.99)	356 (7.3)	-1.69
D. 사무직	3,144 (16.31)	625 (12.82)	-3.49
E. 서비스직	1,864 (9.67)	594 (12.17)	2.5
F. 판매직	2,116 (10.98)	596 (12.22)	1.25
G. 농림어업직	2,053 (10.65)	351 (7.19)	-3.45
H. 기능원	1,928 (10.0)	608 (12.47)	2.47
I. 장치·기계조작 조립원	2,239 (11.61)	667 (13.68)	2.07
J. 단순노무직	1,447 (7.5)	399 (8.17)	0.67
K. 군인	79 (0.41)	18 (0.37)	-0.04
Z.분류불가능	70 (0.36)	13 (0.26)	-0.1
계	19,277 (100.0)	4,877 (100.0)	



자료 : 인구총조사 10%표본(2005년)

주 : 제시된 수치는 각 직업별 베이비붐 세대 비중 - 각 직업별 전체 취업자 비중임

A는 의회의원 및 고위임직원, E는 서비스직, F는 판매직, H는 기능직, I는 장치 기계 조작조립원

[그림 4-20] 직업별 전체 대비 베이비붐 비중

단순노무직 8.17%, 전문가 7.58% 순이다. 전체 대비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직종은 의회의원 및 고위임직원(2.17%p), 서비스직(2.5%p), 판매직(1.25%p), 기능원(2.47%p), 장치·기계조작 조립원(2.07%p)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산업이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이었던 것을 반추하면 직업분포 역시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전문직 중 전문가와 기술공 비중이 전체보다 낮은 반면 의회의원 및 고위임직원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2005년 이들의 연령은 42~50세로 노동력 구조에서 중역 및 관리직에 다수 포진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베이비붐 세대의 세부 직업별 분포는 어떠한가? 센서스 자료에서 나타나는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별 비중(중분류)을 검토해 보았다. <표 4-33>에 의하면 의회의원 및 고위임직원 직군 중 전체 대비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직종은 행정 및 경영 관리자(0.17%p), 일반관리자(1.99%p)로 나타난다. 전문직군 중에서는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0.04%p),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0.1%p)의 비중이 높은 반면 과학 전문가나 컴퓨터 및 공학 관련 전문가의 비중은 전체보다 낮다. 기술공 및 준전문가 직군 중에는 전문가 직군에서와 유사하게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의 비중이 전체보다 0.21%p 높다. 이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분포된 전문직의 세부 직종은 행정 및 경영 관리직 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서비스·판매직의 세부 직종별 베이비붐 세대의 분포는 어떠한가? <표 4-33>에 의하면 서비스직 부문 중에서는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2.72%p), 판매직 중에서는 도·소매 판매 종사자(1.46%p)의 비중이 높게 분포된 반면 통신 판매직 등의 비중은 낮다. 그 밖에 블루칼라 직종의 세부 직종별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을 살펴보면,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1.23%p),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9%p),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1.69%p)의 비중이 높게 분포된다.

<표 4-33>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분포 : 중분류

(단위: 천 명, %)

중분류	전체(A)	베이비붐(B)	(B-A. %)
A. 의회의원 및 고위임직원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	5 (0.03)	2 (0.03)	0.00
행정 및 경영관리자	82 (0.43)	29 (0.6)	0.17
일반 관리자	605 (3.14)	250 (5.13)	1.99
B. 전문가			
과학전문가	25 (0.13)	5 (0.1)	-0.02
컴퓨터관련 전문가	126 (0.65)	10 (0.21)	-0.44
공학 전문가	238 (1.24)	51 (1.04)	-0.2
보건의료 전문가	351 (1.82)	49 (1.01)	-0.82
교육전문가	816 (4.24)	181 (3.72)	-0.51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61 (0.32)	17 (0.35)	0.04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100 (0.52)	30 (0.63)	0.1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194 (1.01)	25 (0.52)	-0.49
C. 기술공 및 준전문가			
과학관련 기술 종사자	14 (0.07)	3 (0.07)	0.00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79 (0.41)	7 (0.14)	-0.27
공학 관련 기술종사자	493 (2.56)	90 (1.85)	-0.71
보건의료 준전문가	88 (0.46)	9 (0.19)	-0.27
교육 준전문가	249 (1.29)	35 (0.71)	-0.58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488 (2.53)	134 (2.74)	0.21
사회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58 (0.3)	12 (0.24)	-0.06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76 (0.39)	10 (0.21)	-0.18
기타 준전문가	188 (0.97)	56 (1.14)	0.17
D. 사무직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	2,725 (14.14)	546 (11.2)	-2.94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419 (2.18)	79 (1.62)	-0.55
E. 서비스 종사자			
대인 서비스 관련 종사자	479 (2.48)	116 (2.38)	-0.1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종사자	1,193 (6.19)	435 (8.91)	2.72
여행 및 운송관련 종사자	26 (0.13)	4 (0.09)	-0.05
보안 서비스 종사자	167 (0.87)	39 (0.79)	-0.07
F. 판매 종사자			
도·소매 판매 종사자	2,018 (10.47)	582 (11.93)	1.46
통신판매 종사자	84 (0.43)	12 (0.25)	-0.18
모델 및 홍보 종사자	14 (0.07)	2 (0.04)	-0.03

자료 : 인구총조사 10% 표본(2005년)

〈표 4-33〉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분포 : 중분류 (계속)

중분류	전체(A)	베이비붐(B)	(B-A)
G.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농업 숙련 종사자	1,957 (10.15)	322 (6.6)	-3.55
임업 숙련 종사자	5 (0.02)	2 (0.03)	0.01
어업 숙련 종사자	91 (0.47)	27 (0.56)	0.09
H.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622 (3.23)	217 (4.46)	1.23
금속, 기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09 (1.09)	65 (1.34)	0.25
기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551 (2.86)	128 (2.62)	-0.24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133 (0.69)	40 (0.83)	0.14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13 (2.14)	158 (3.23)	1.09
I. 장치, 기조작 및 조립종사자			
고정기 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157 (0.81)	44 (0.91)	0.09
기 조작용 및 관련 종사자	654 (3.39)	186 (3.82)	0.43
조립 종사자	548 (2.84)	132 (2.7)	-0.14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880 (4.56)	305 (6.25)	1.69
J. 단순노무직			
서비스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58 (4.97)	239 (4.89)	-0.08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42 (0.22)	8 (0.17)	-0.05
제조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100 (0.52)	30 (0.61)	0.09
광업, 건설 및 운송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347 (1.8)	122 (2.5)	0.7
기타	79 (0.41)	18 (0.37)	-0.04
미상	70 (0.37)	13 (0.26)	-0.11
계	19,277 (100.0)	4,877 (100.0)	

자료 : 인구총조사 10% 표본(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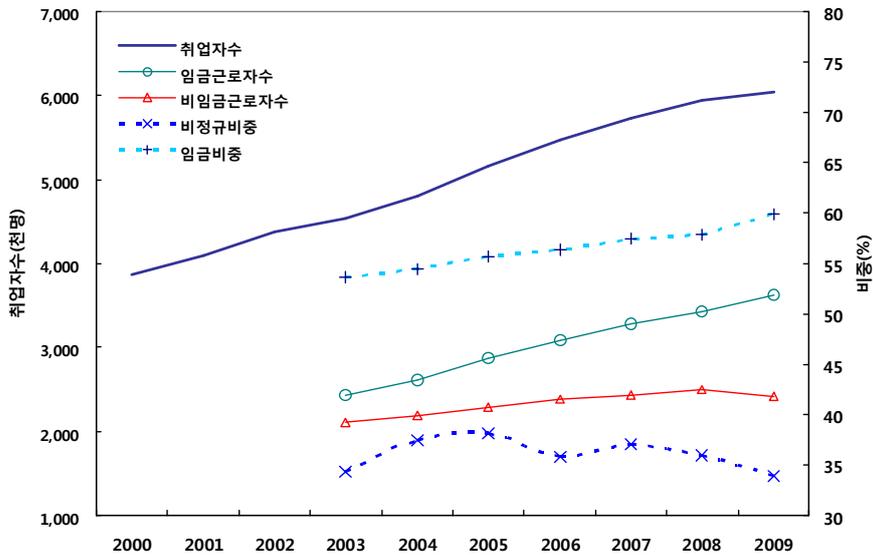
2) 취업형태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형태 및 임금수준을 논의하기 이전에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근로형태부가조사 자료를 통해 중·고령층의 취업형태의 추이를 먼저 짚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특성은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임금근로의 대안으로 이러한 취업형태를 취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영세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매우 높아지는 반면, 고용 불안정성은 대체로 증가한다.

[그림 4-21]은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취업형태 추이이다. 전체 중·고령층 취업자가 증가함에 맞추어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의 총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3년 임금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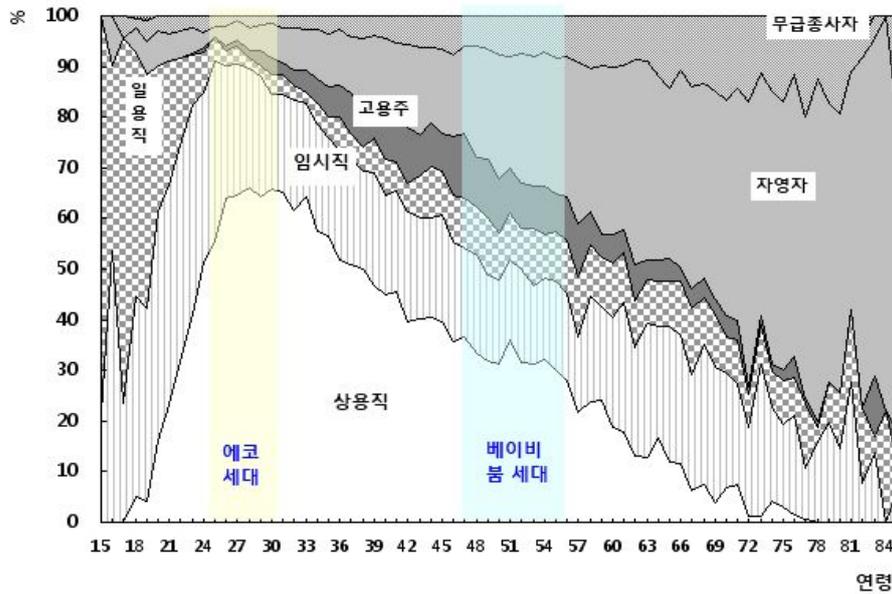
자는 2,429천 명이었으나 2005년 2,870천 명, 2008년 3437천 명, 2009년 3,622천 명으로 2003년 대비 100만여 명 증가하였다. 한편 비임금근로자는 2003년 2,102천 명, 2005년 2,284천 명 2008년 2,500천 명, 2009년 2,420천 명으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체 중·고령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53.61%에서 2005년 55.68%, 2008년 57.89%, 2009년 59.95%로 최근으로 올수록 중·고령 층 근로자 중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이 확인된다. 한편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은 65% 내외로 각 시기별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2000년~2009년), 「근로형태부가조사」(2003년~2009년) 원자료 각 년도
 분석대상 : 각 년도 45~54세 중고령자

[그림 4-21] 중·고령자의 취업형태 추이(2000년~2009년)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형태의 분포는 어떠한가? [그림 4-22]는 연령별 취업형태이다. 각 세별 취업자를 ‘100’으로 하였을 때, 각각의 취업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을 영역형으로 도시하였다. 그림에 나타나는 바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의 비중은 20대 후반에 정점을 이루다가 이후 구간에서 감소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임금 부문(특히 자영자)의 비중이 증가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형태별 비중은 상용직 34.28%, 임시직 18.22%, 일용직 8.95%로 상용직의 비중은 30% 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고용주는 9.89%, 자영자는 22.23%, 무급종사자는 6.44%로 비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8.56%이다.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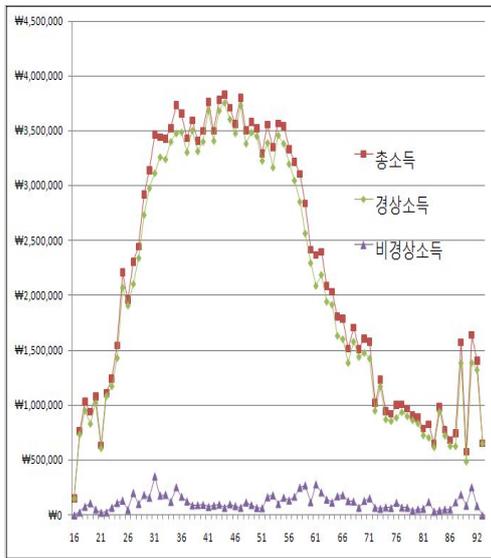
[그림 4-22] 연령별 취업형태

3. 소득 및 소비

가.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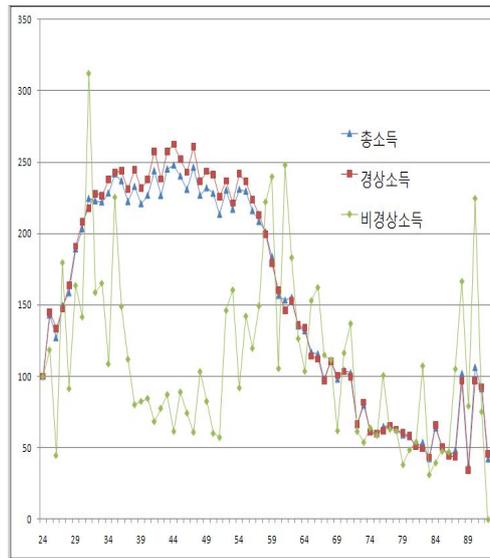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소득 및 소비수준을 검토하기 이전에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나는 연령-소득 프로파일을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총량적인 수준에서 연령-소득의 관계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소득수준 역시 증가하다가 가구의 은퇴가 시작되는 시점에 가구소득이 감소하는 ‘역U자’형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고령자를 위한 연금체계가 미비한 한편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를 기점으로 한 근로소득의 감소가 전체 가구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³⁴⁾. [그림 3-14]와 [그림 3-15]는 「가계동향조사(2009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령-소득 곡선을 산출한 것이다. 여기서 소득은 총소득 및 소득원천별 연령-소득 곡

34) 한국의 고령자 소득은 선진국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한국 고령자의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둘째, 고령자 집단 내의 소득의 불평등도는 매우 심하다. 셋째, 고령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의 감소하는 기울기는 매우 가파르다. 한국 고령자의 소득 구성의 이러한 특성은 고령자(은퇴자)를 위한 공적연금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고령자들이 근로소득에 크게 의존하며, 공적이전 소득보다는 사적이전 소득 의존도가 높은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장지연 외, 2008: 40).



자료 : 「가계동향조사(2009년)」 원자료

[그림 4-23] 연령-소득 프로파일



자료 : 「가계동향조사(2009년)」 원자료

주 : 가구주 24세의 소득을 '100'으로 환산하여 작성

[그림 4-24] 연령-소득 프로파일

선을 따로 산출하여 도시하였다. [그림 4-23]에 의하면 가구의 총소득은 가구주의 연령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다가 40대 후반에서 50세를 기점으로 정점에 이르고, 이후 총소득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총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곡선 역시 총소득 패턴과 유사하다. 한편 비경상 소득은 총소득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청년가구주 및 55세 이상 고령가구주에게서 소득액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24세의 소득액을 '100'으로 환산하여 작성된 [그림 4-24]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이 그래프에서 비경상 소득 곡선은 청년층과 55세 이상 고령층을 기점으로 뚜렷한 'U'자형의 형태를 보인다.

<표 4-34>는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분포이다. 전체 가구의 소득분포는 200~300만 원 21.05%, 100~200만 원 20.14%, 300~400만 원 17.2% 순이며, 600만 원 이상은 3.65%로 나타난다.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범주별 분포는 200~300만 원 19.94%, 300~400만 원 18.81%, 100~200만 원 17.67% 순이며, 600만 원 이상은 12.87%로 전체 평균보다 9.22%p 높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월평균 소득은 감소하고 저소득자의 비중이 높아지는데,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 미만은 44.36%, 100~200만 원은 27.29%에 이른다. 연령 집단별 월평균 소득은 베이비붐 세대는 353만 원, 이후세대인 34~45세는 362만 원, 이전세대인 55~59세는 324만 원으로 나타난다. 베이비붐 세대와 이후세대(55~59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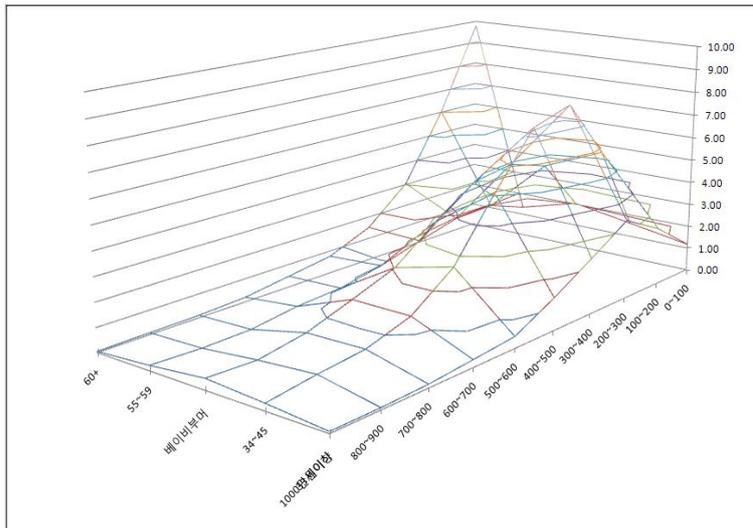
<표 4-34>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분포

(단위 : %, 만 원)

	전체	이전세대		베이비붐 세대 46~54세	이후세대	
		60+	55~59세		34~45세	33세 이하
100 미만	15.97	44.36	14.72	8.38	4.87	9.91
100 이상 ~ 200 미만	20.14	27.29	21.51	17.67	16.23	20.76
200 이상 ~ 300 미만	21.05	13.78	20.75	19.94	23.76	28.55
300 이상 ~ 400 미만	17.20	6.83	15.66	18.81	22.14	19.81
400 이상 ~ 500 미만	11.54	3.44	10.00	13.96	15.39	11.51
500 이상 ~ 600 미만	6.22	2.15	6.13	8.38	8.02	4.08
600 이상	3.65	2.15	11.23	12.87	9.59	5.39
총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소득액	300만 원	161만 원	324만 원	353만 원	362만 원	285만 원

자료 : 「가계동향조사(2009년)」 원자료

제4장



자료 : 「가계동향조사(2009년)」 원자료

[그림 4-25]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분포

월평균 총소득 격차는 29만 원, 60세 이상 가구와의 격차는 무려 192만 원으로 은퇴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가 세대별 총소득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표 4-35>는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원천별 구성 현황이다³⁵⁾. 전체 소득원천별 구성은

경상소득 95.82%, 비경상 소득 4.18%이며, 경상소득의 항목별 구성비중은 근로소득이 63.84%로 경상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사업소득 21.39%, 이전소득 10.09%, 재산소득 0.49%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장이 이뤄지기 때문에 총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중은 감소하게 된다. <표 4-35>에서 연령집단별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33세 이하는 76.56%, 34~45세는 68.77%, 베이비붐 세대는 65.33%, 55~59세는 63.01%, 60세 이상은 35.49%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총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다. 특히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5.49%인 반면 이전소득(공적+사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2.15%로 60세 이상의 은퇴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의 비중은 감소하고, 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65.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소득은 25.46%, 이전소득 5.97%, 재산소득 0.4%로 총소득 중 경상소득 97.16%, 비경상 소득은 2.84%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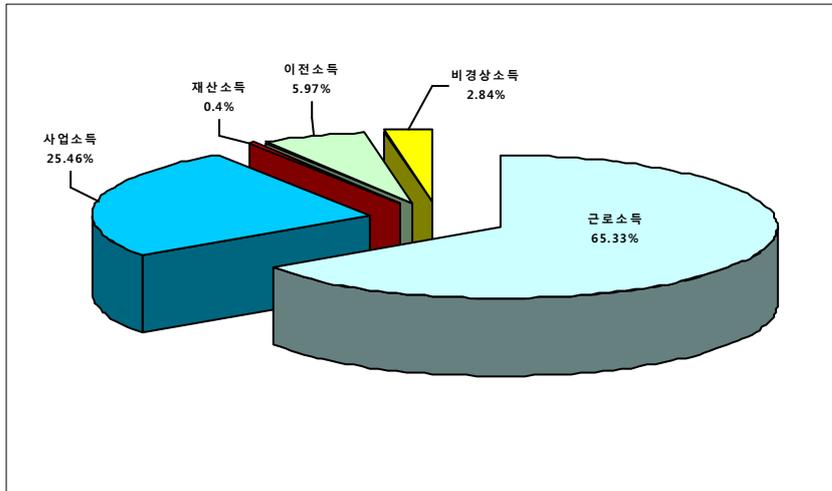
<표 4-35>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원천별 구성

(단위 : %)

	전체	이전세대		베이비붐 세대 46~54세	이후세대	
		60+	55~59세		34~45세	33세 이하
경상소득	95.82	92.28	94.15	97.16	96.89	93.86
근로 소득	63.84	35.49	63.01	65.33	68.77	76.56
사업 소득	21.39	23.09	21.8	25.46	21.19	8.79
재산 소득	0.49	1.54	0.51	0.4	0.25	0.31
이전 소득	10.09	32.15	8.84	5.97	6.67	8.21
비경상 소득	4.18	7.72	5.85	2.84	3.11	6.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가계동향조사(2009년)」 원자료

- 35) 1. 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 소득으로 구성된다.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은 가구주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사업소득은 가구주 및 가구원의 이사소득, 재산소득은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전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이전소득(친지 등의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비경상 소득은 경조소득,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등을 말한다.
2. 소득구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개별 가구의 가구소득의 구성비를 구한 후 각 항목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 즉 비율의 평균(mean of the share) 방법 둘째, 전체 가구의 총소득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는 방법, 즉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방법(mean share of aggregate income)이다. 전자의 경우 평균적인 가구의 상대적인 소득구성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한편, 후자는 집단들의 특정 소득원 의존도를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전자의 경우 총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보이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고소득층일수록 공적이전소득에 덜 의존하게 되는데, 비율의 평균방법은 전체 소득에 대한 기여분의 크기에 대한 가중치 없이 모든 가구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이다(Rein et al., 2004).



자료 : 「가계동향조사(2009년)」 원자료

[그림 4-26]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원천별 구성

<표 4-36>은 소득계층별 근로소득의 비중이다. 전체 가구를 소득 5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별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하위층으로 갈수록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데, 상위 5분위는 총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중은 68.08%, 4분위는 67.37%, 3분위는 61.65%, 2분위는 54.65%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1분위는 총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30.04%에 불과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계층별 근로소득 비중은 5분위 69.89%, 4분위 63.64%, 3분위 58.63%, 2분위 58.62%, 1분위 48.2%로 저소득 계층일수록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다. 가구주가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 총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반면 이전소득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득분위별 근로소득 비중의 편차는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작은 편이다.

<표 4-36> 소득계층별 근로소득의 비중

(단위 : %)

	전체	이전세대		베이비붐 세대 46~54세	이후세대	
		60+	55~59세		34~45세	33세 이하
1 분위	30.04	17.02	43.67	48.20	53.04	40.24
2 분위	54.65	30.55	51.41	58.62	62.94	78.07
3 분위	61.65	36.91	57.24	58.63	65.13	82.23
4 분위	67.37	48.36	65.36	63.64	70.97	81.17
5 분위	68.08	42.66	67.57	69.89	70.25	71.44

자료 : 「가계동향조사(2009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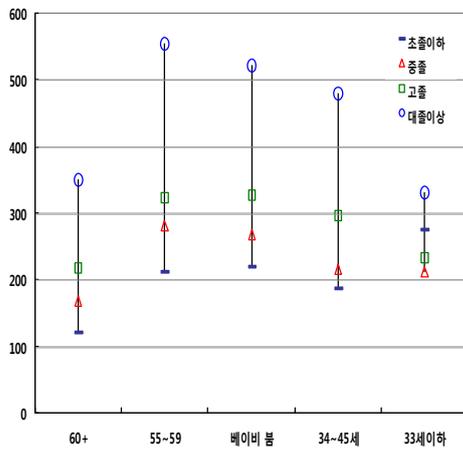
<표 4-37>은 교육수준 및 직업별 소득분포이다. 가구의 총소득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적 위세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교육수준별 총소득은 초졸 이하가 154만 원, 중졸

<표 4-37> 교육수준 및 직업별 소득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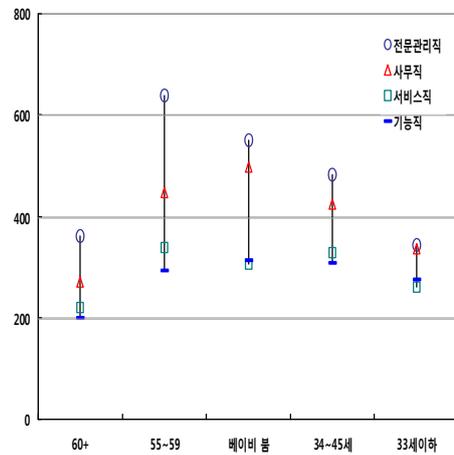
(단위: 만 원)

		전체	이전세대		베이비붐 세대 46~54세	이후세대	
			60+	55~59세		34~45세	33세 이하
교육 수준	초졸이하	154	120	212	220	187	276
	중졸	223	169	281	268	215	213
	고졸	292	218	322	326	297	233
	대학	381	233	567	455	405	298
	대학원	518	233	543	587	552	361
직업	전문·관리직	474	362	639	551	482	343
	사무직	416	270	446	497	424	335
	서비스직	302	220	337	306	329	261
	기능직	285	199	293	313	308	275
	농림어업직	213	144	225	274	249	3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426	280	430	425	451	432
	비맞벌이	250	149	284	306	309	247

자료 : 「가계동향조사(2009년)」 원자료



자료 : 「가계동향조사(2009년)」 원자료
[그림 4-27] 교육수준별 소득분포



자료 : 「가계동향조사(2009년)」 원자료
[그림 4-28] 직업별 소득분포

223만 원, 고졸 292만 원, 대졸 381만 원, 대학원 518만 원으로 나타난다.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수준별 소득은 초졸 이하 220만 원, 중졸 268만 원, 고졸 326만 원, 대졸 455만 원, 대학원졸 587만 원으로 학력 간 소득 격차가 다른 세대에 비해 크다. 한편 60세 이상 가구 가구의 교육수준별 소득은 초졸 이하 120만 원, 중졸 169만 원, 고졸 218만 원, 대졸 233만 원으로 학력수준별 소득격차가 다른 세대에 비해 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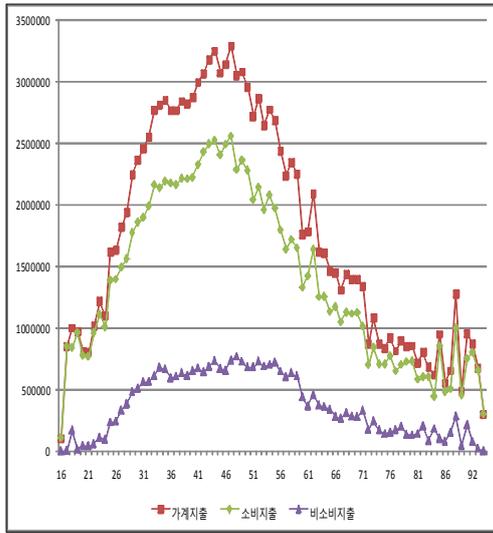
한편 직업별 총소득은 전문·관리직 474만 원, 사무직 416만 원, 서비스직 302만 원, 기능직 285만 원, 농림어업직 213만 원 수준으로 나타난다.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별 소득수준은 전문·관리직 551만 원, 사무직 497만 원, 서비스직 306만 원, 기능직 313만 원, 농림어업직 274만 원으로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소득은 농림어업 종사자의 2배 수준이다. 소득수준이 최고점이 되는 연령범주는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전문·관리직과 서비스직은 55~59세(각각 639만 원, 337만 원), 사무직과 기능직은 베이비붐 세대(497만 원, 313만 원)에 소득수준이 정점을 보인다. 맞벌이 여부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은 맞벌이는 425만 원, 비맞벌이는 306만 원으로 두 집단 간 격차는 119만 원으로 나타난다.

나. 소비

[그림 4-29]와 [그림 4-30]은 「가계동향자료(2009년)」를 통해 작성된 연령-소비 프로파일이다. 연령-소득의 관계가 ‘역U자’형 패턴을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에 따라 소비수준이 증가하다가 은퇴시점을 기점으로 가구 소비는 감소한다. 다만 총소득 곡선과의 차이점이라면 소득수준은 50대 중반 이후 감소하는 반면 총소비는 40대 중반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항목별 구성을 살펴보면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6.2%, 비소비 지출은 23.8%를 차지한다. 각 연령집단별 총지출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구주 연령 33세 이하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이 79.6%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 78.8%, 34~45세 77.8% 순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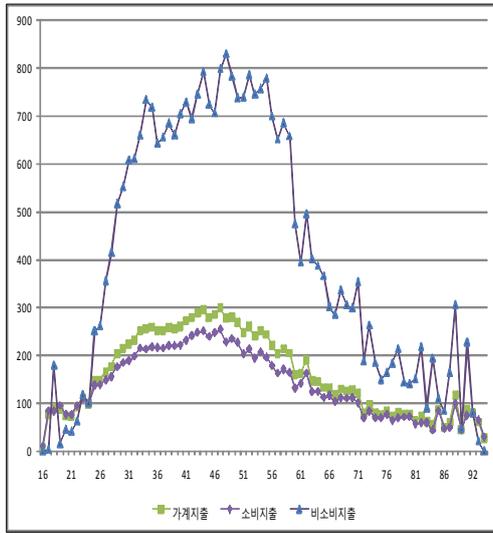
<표 4-39>는 베이비붐 세대의 항목별 소비지출구조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총소비를 ‘100’으로 봤을 때, 기타 소비지출을 제외한 항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부문은 ‘교육비’로 총지출 중 11.84%를 차지한다.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해보면, 가구주 연령 33세 이하 가구의 총지출 중 교육비 비중은 2.54%, 34~45세 가구는 10.76%, 55~59세는 3.23%, 60세 이상은 1.59%로 여타의 연령집단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가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으로 높은 사교육비 및 대학등록금 지출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 : 「가계동향조사(2009년)」 원자료

[그림 4-29] 연령-소비 프로파일1



자료 : 「가계동향조사(2009년)」 원자료

주 : 가구주 24세의 소득을 '100'으로 환산하여 작성

[그림 4-30] 연령-소비 프로파일2

<표 4-38>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항목별 구성

(단위 : %)

	전체	이전세대		베이비붐 세대 46~54세	이후세대	
		60+	55~59세		34~45세	33세 이하
□가계 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비 지출	77.3	78.8	73.2	76.2	77.8	79.6
비소비 지출	22.7	21.2	26.8	23.8	22.2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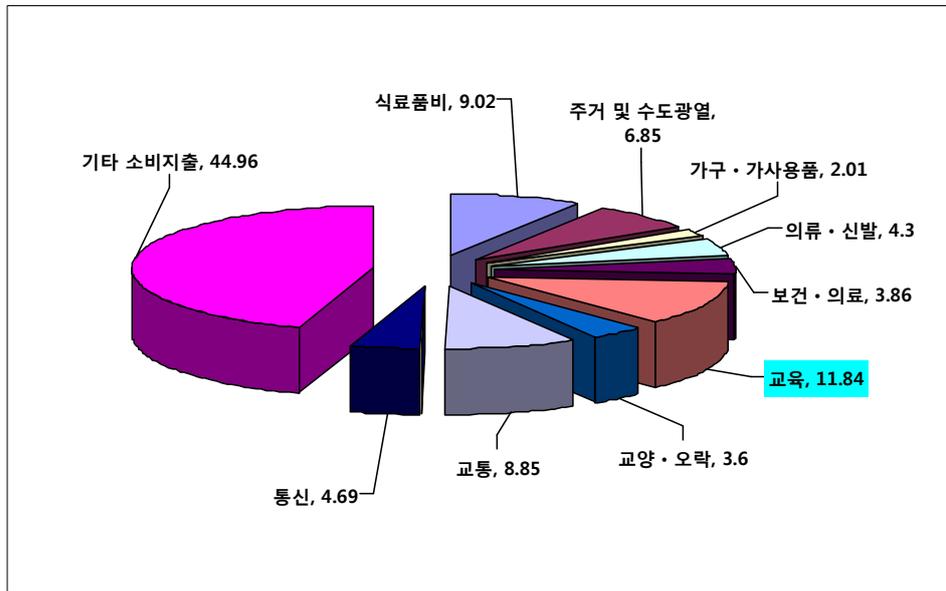
자료 : 「가계동향조사(2009년)」 원자료

<표 4-39>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지출 구조

(단위 : %)

	전체	이전세대		베이비붐 세대 46~54세	이후세대	
		60+	55~59세		34~45세	33세 이하
□소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비	9.57	17.03	10.48	9.02	8.47	6.83
주거 및 수도광열	7.36	12.70	7.53	6.85	6.13	7.68
가구·가사용품	2.43	3.35	2.54	2.01	2.39	2.55
의류·신발	4.20	3.88	4.36	4.30	4.08	4.63
보건·의료	4.57	10.08	5.57	3.86	3.58	3.78
교육	8.51	1.59	3.23	11.84	10.76	2.54
교양·오락	3.59	3.36	3.23	3.60	3.61	3.94
교통	8.42	8.61	9.88	8.85	7.79	8.48
통신	4.20	4.15	4.55	4.69	3.82	4.24
기타 소비지출	47.15	35.24	48.62	44.96	49.37	55.31

자료 : 「가계동향조사(2009년)」 원자료



자료 : 가계동향조사(2009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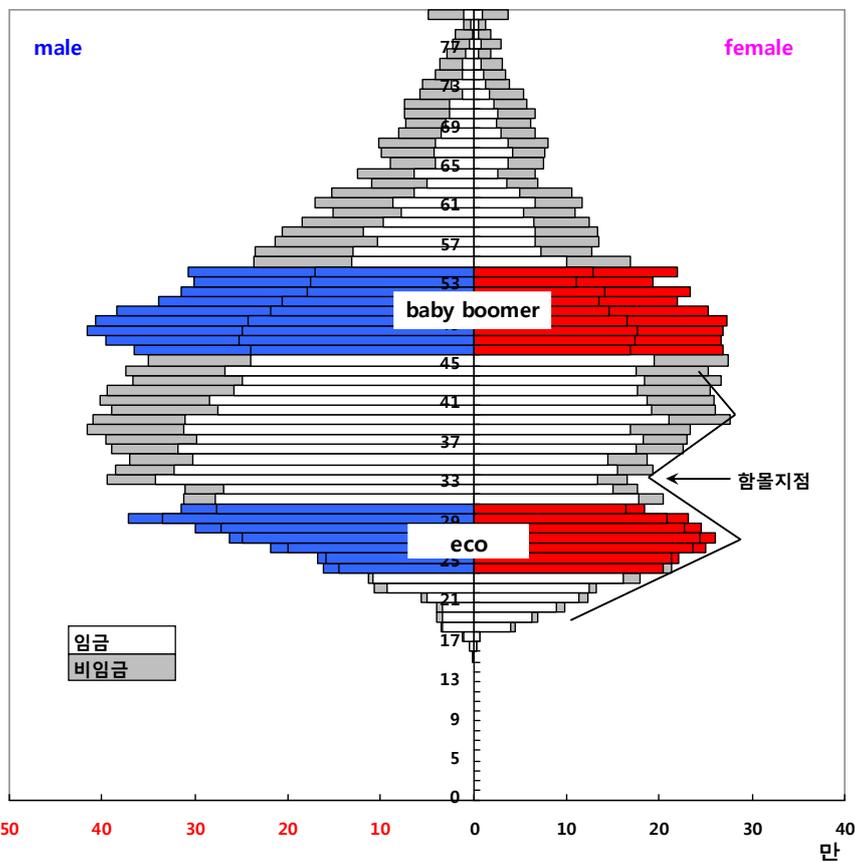
[그림 4-31]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지출 구조

제4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효과

1. 노동력 구조와 세대 간 일자리 분석

가. 인구구조와 노동력 구조

[그림 4-32]는 「경제활동인구조사(2010)」 원자료를 통해 작성된 노동력 구조이다³⁶⁾.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각 세별 및 성별 취업자 구조이다. 인구구조가 종형태를 띠는 것과는 달리 노동력 구조는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5세 이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2010)」 원자료

[그림 4-32] 노동력 구조(전체)

36) 각 세별 취업자를 대상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작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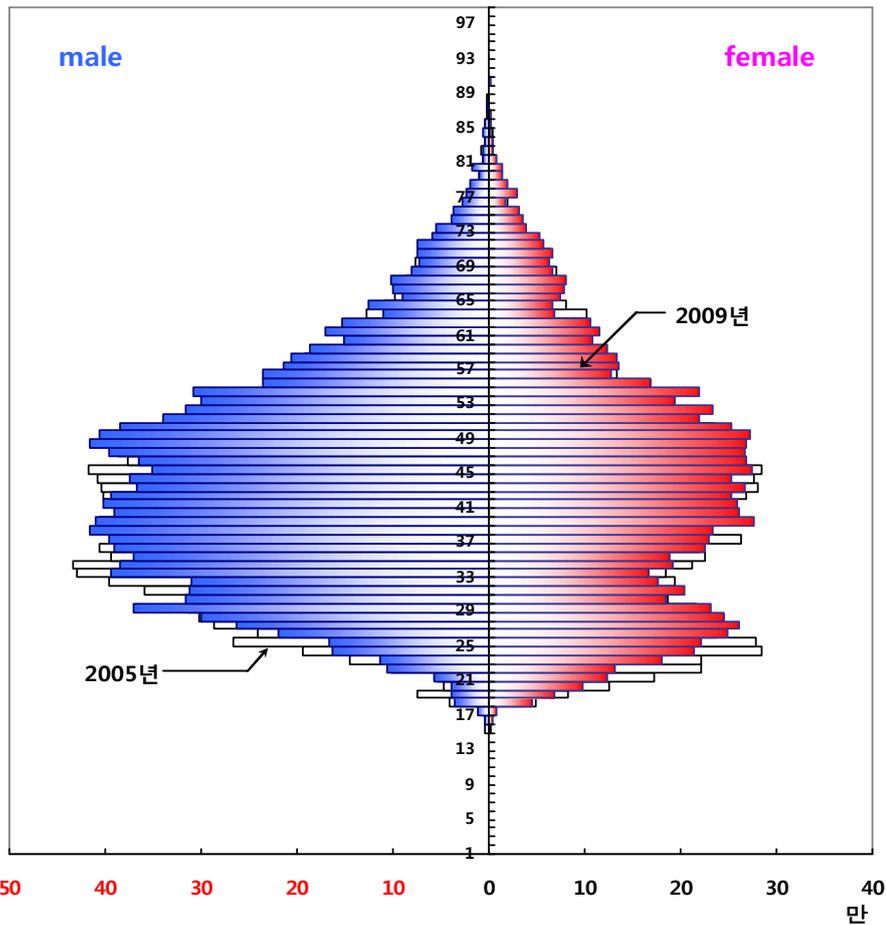


후 급격히 증가하여 남성의 경우 30~40대가 가장 두터운 구조를 이룬다.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이른 노동시장 진입으로 인하여 20대 중·후반까지 취업자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나, 30대에 깊은 함몰지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출산·양육 이후 30대 중·후반부터 노동시장 재진입이 이뤄져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하게 된다. 남성과 여성 모두 50세를 전후하여 취업자의 절대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이 이뤄지는데, 취업자 수 감소의 폭은 여성보다 남성이 크며, 이는 노동시장 퇴출의 규모와 속도가 여성보다 매우 급하게 진행됨을 의미한다.

둘째, 연령별 임금 및 비임금 취업자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임금 및 비임금 분포의 비중은 시기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비임금근로자를 ‘1’로 보았을 때 임금근로자는 2.2~2.5명 수준이다. 연령에 따른 취업형태의 분포는 저연령대에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며, 고연령대로 갈수록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그림 4-32]에서 안쪽의 피라미드는 각 세별 임금근로자이며, 바깥쪽은 각 세별 비임금근로자이다. 20대 이하의 경우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매우 적으나, 30대 중후반 이후 비임금근로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며, 50대 이상 취업자의 경우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임금근로자를 압도한다.

셋째, [그림 4-32]를 통해 전체 노동력 구조에서 베이비붐 세대 및 에코세대가 차지하는 지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 47세~55세에 이른 연령집단으로 퇴직연령인 55세에 본격적으로 도달하였다. 이들이 전체 노동력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에 이르며, 노동시장에서의 본격적인 퇴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에코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로 2010년 25~31세(1979~1985년생)에 이른 인구집단으로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하였거나, 진입을 앞둔 집단이다. 이들의 노동력 규모는 남성 약180만, 여성 160만 총 340여만 명으로 전체 노동력 중 14%가량을 차지한다.

[그림 4-33]은 노동력 구조의 추이(2005년, 2009년)이다. 경제활동인구의 총량의 변화는 인구크기 증감량에 따른 ‘인구요인’과 경제활동참여율 변화에 따른 ‘사회요인’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두 시점의 노동력 피라미드의 양태를 살펴보면 2005년의 각 세별 노동력 규모가 거의 동일한 모양으로 상승 이동한 것이 관찰된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 인구를 요인별로 분해한 선행연구 결과, 경제활동인구 총변화량의 95% 가량이 인구크기의 변화로 설명되는데(박경숙, 2003), 이 같은 논의와 일관되게 노동력 구조는 무엇보다 인구구조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다. 또한 두 시점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노동력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 23% 가량으로 자연사망률을 고려한다면 두 시점 간 노동력 구성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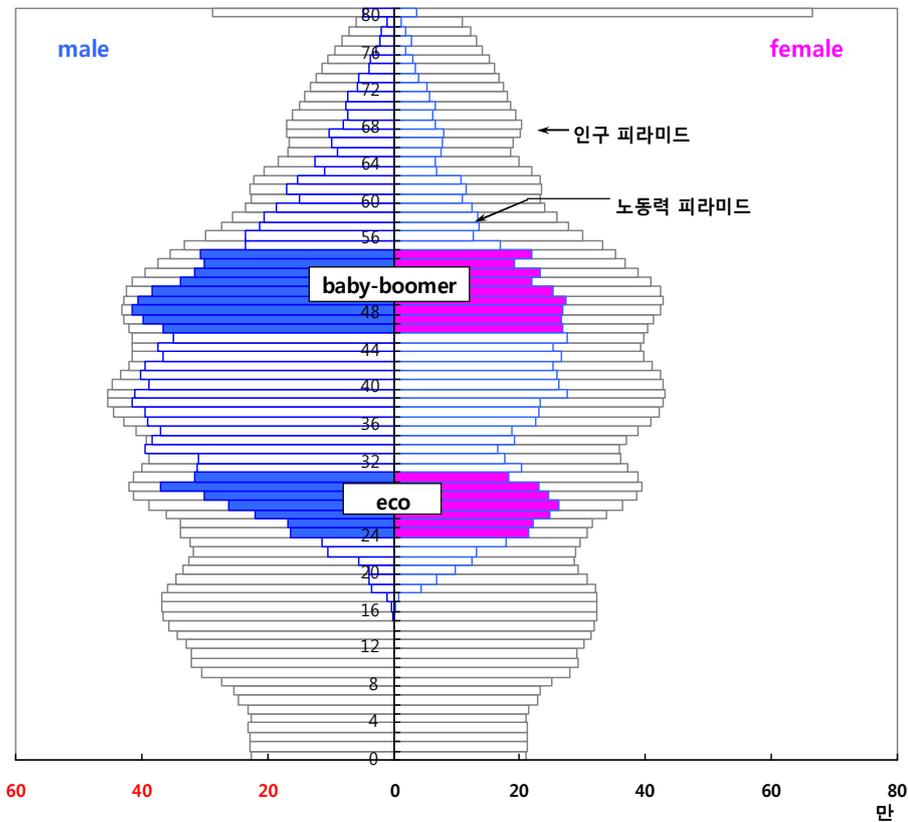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2005, 2009)」 원자료

[그림 4-33] 노동력 구조 추이(2005~2009)

그렇다면 인구구조 내 노동력 구조의 포괄범위 및 연령별 형태는 어떠한가? [그림 4-34]는 장래인구추계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인구 및 노동력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안쪽의 작은 피라미드는 노동력 피라미드이며, 바깥쪽은 인구 피라미드이다. 작은 피라미드 내는 노동력 인구를 의미하며, 작은 피라미드와 큰 피라미드 사이의 간극은 비노동력 인구를 뜻한다.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전체 인구 중 연령별 노동력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20대 중반 이후 노동시장으로 급격한 진입이 이뤄져 청·장년시기에 노동력규모와 전체 인구규모 간의 큰 간격이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여성은 20대 중반 이후 남성보다 급격한 노동시장 진

입이 이뤄지지만, 30대 초반 이후 노동시장 이탈이 발생하며, 전 연령대에서 남성에 비해 노동력 피라미드와 인구 피라미드 간 간극(비노동력인구의 규모)이 크다.

둘째, 세대별 노동력 규모가 전체 인구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산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47세~55세)는 노동시장에서 왕성한 경제활동 이후 막 은퇴시점에 이른 연령집단으로 전체 인구규모와의 격차가 조금씩 커지는 것이 확인된다. 에코세대(25세~31세)는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하였거나, 노동시장 진입이 예상되는 연령집단으로 특히 남성의 가파른 노동력 규모의 증가가 관찰된다.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진입은 이르나 30세 전후로 노동시장 이탈이 발생하며, 전(全) 연령대에서 비노동력인구의 규모가 남성보다 크다.



자료 : 「장래인구추계(2010년)」, 「경제활동인구(2010년)」

[그림 4-34] 인구구조와 노동력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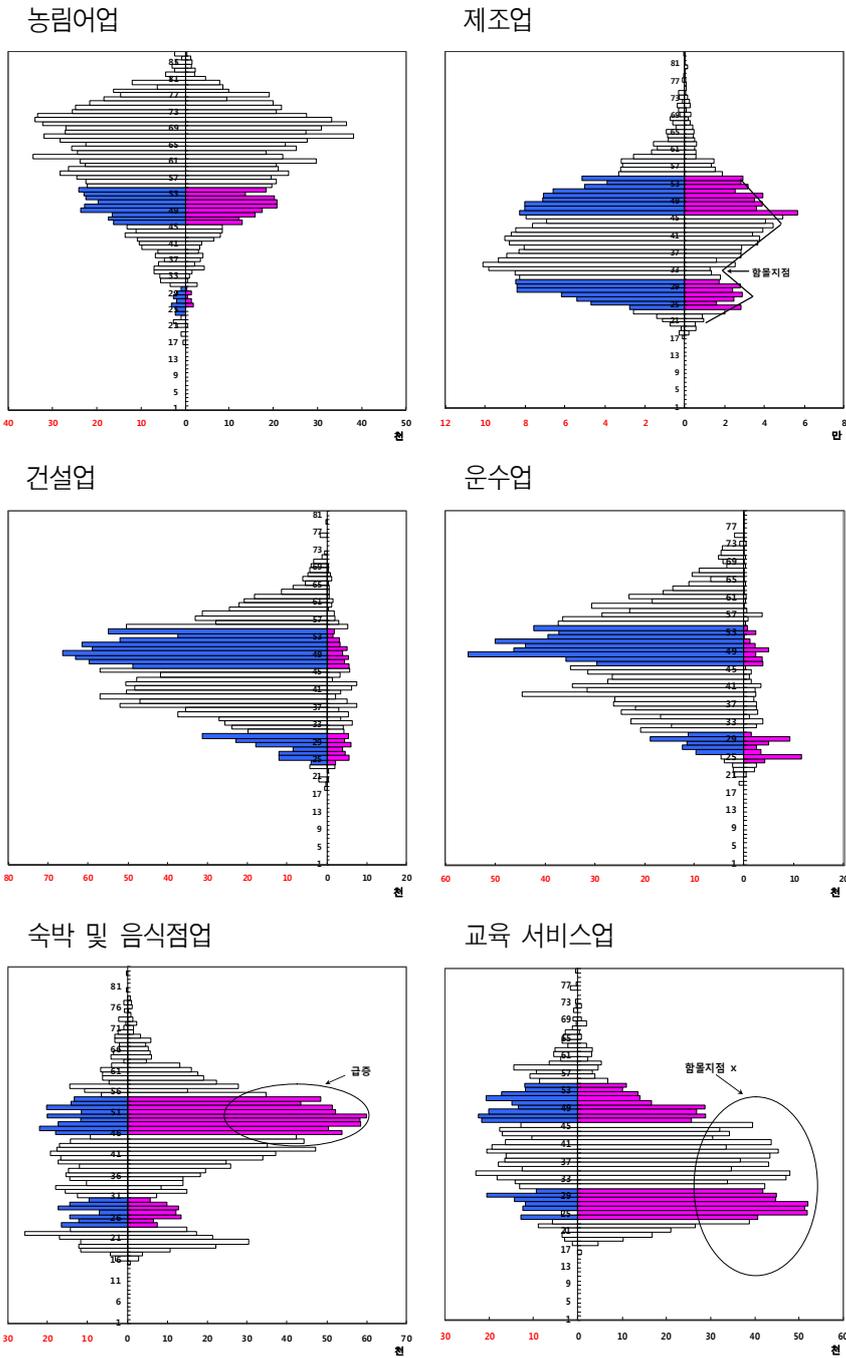
나. 부문별 노동력 구조

노동력의 연령구조는 산업과 직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직·산업별 노동력 연령구조를 살펴보는 한편 직업과 산업별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세대가 차지하는 지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림 4-35]는 산업별 노동력 구조이다. 제시된 업종은 앞서 논의한 베이비붐 세대 직·산업별 현황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종(농림어업 제외)에 한정하였다.

‘농림어업’의 경우 전체적인 노동 피라미드 구조가 저(低)연령대에는 매우 좁은 형태이지만, 40대 후반 이후 급격히 규모가 확장되는 역피라미드 형태를 띤다. 이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매우 고령자라는 것을 반증한다. 연령별 농어업 종사자 규모는 저연령대 일수록 감소하며, ‘에코세대’ 중 농어업 종사자는 2만여 명으로 전체 농림어업 취업자 중 1% 가량에 불과하다.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분포된 ‘제조업’의 노동력 피라미드를 보면 전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의 노동력 규모가 큰 것이 관찰된다. 또한 여성 노동력의 경우 30대 초·중반에 깊은 함몰지점이 존재하지만, 30대 후반 이후 여성노동력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은퇴 시점인 40대 중반 이후 다시 노동력 규모는 감소한다. 제조업 노동력 구조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4%(912만 명)이고, ‘에코세대’는 16%(611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숙련노동자가 많이 포진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청년세대는 기피하는 업종으로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후 이 부문의 숙련근로자의 부족이 우려된다.

다음 ‘건설업’과 ‘운수업’의 노동력 피라미드이다. 이 두 업종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나(각각 7%와 5% 수준), 노동력의 성별 구성상 매우 성비가 불균형적인 업종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건설업 여성 취업자를 ‘1’로 했을 때 남성비는 ‘9.5’이며, 운수업은 ‘11.4’로 이 두 업종은 매우 남성집중업종임을 알 수 있다. 건설업과 운수업은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업종(각각 32% 수준)인 반면 에코세대의 취업자 규모(각각 9% 수준)는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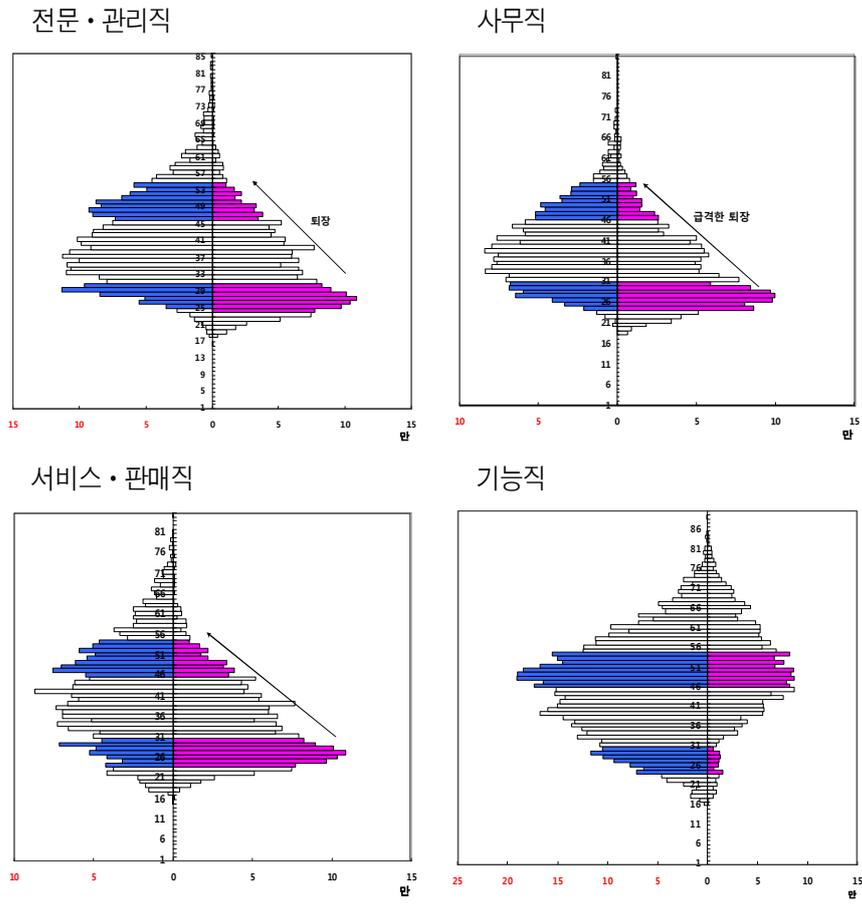
건설업과 운수업이 남성집중업종이었던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은 여성의 취업자 규모가 남성보다 매우 큰 여성집중직종으로 분류된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30대 초반 이후 여성취업자의 규모가 급증하는데, 특히 베이비붐 남성 대비 여성취업자의 규모가 매우 크다. 반면 에코세대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아 전체 숙박 및 음식점업 중 8%를 차지한다. 교육서비스업은 남성보다 여성의 취업자 규모가 큰 한편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취업단절이 발견되지 않는 업종이다.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에코세대는 약 41만여 명으로 이중 여성이 33만 명으로 전체 에코세대의 80%를 차지한다. 반면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급격한 퇴장이 관찰되는데, 특히 여성취업자의 취업자 규모 감소폭이 남성보다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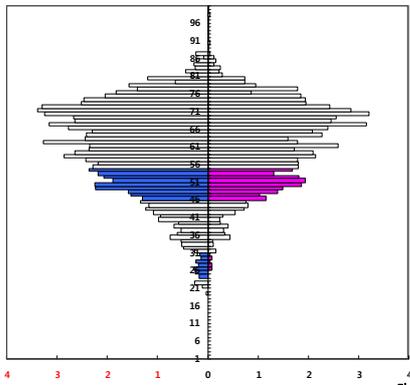
제4장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원자료
 [그림 4-35] 산업별 노동력구조

[그림 4-36]은 직업별 노동력 구조이다. 전문·관리직의 경우 남성은 중형 형태이나, 여성은 20대 후반 이후 급격한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이 이뤄진다. 이 같은 현상은 사무직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데, 이는 이들 직종이 임금 부문의 주를 이루어 동일 부문 내로 여성의 재취업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체 직업 중 전문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0% 가량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증대된 전문직 관련 신직종은 주로 젊은 연령층으로 채워졌다고 논의된다. [그림 4-36]에서 전문·관리직 중 에코세대의 비중은 22% 가량인 한편 베이비붐 세대는 약 18%로 에코세대의 비중이 5%p 가량 높다. 한편 사무직 역시 20대 후반 이후 여성의 급격한 퇴장으로 여성의 경우 청년층의 사무직 규모가 큰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사무직 규모는 매우 작다. 특히 사무직은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퇴직연령이 낮아(정년제의 적용이 가장 엄밀하여) 고령자의 취업자 규모가 매우 작다. 전체 사무직 중 에코세대의 비중은 약 27%, 베이비



농림어업직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원자료
[그림 4-36] 직업별 노동력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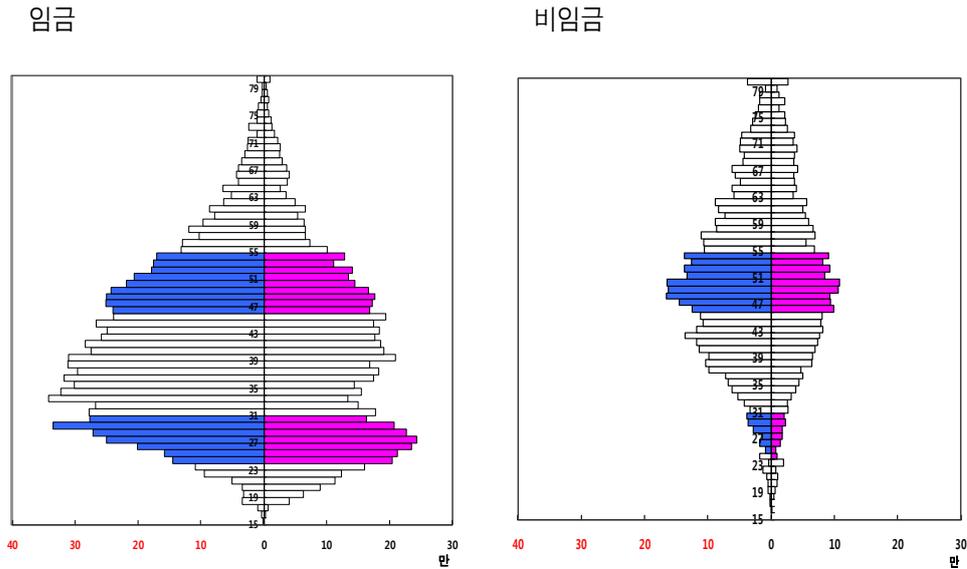


붐 세대는 약 14%로 사무직의 경우 에코세대의 규모가 베이비붐 세대 규모를 압도한다. 서비스·판매직의 노동력 구조는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여성은 20대 중반 이후 노동시장을 급격히 퇴장하며, 이 직종에 종사하는 에코세대 규모는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를 약간 상회한다.

한편 기능직의 노동력 구조는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앞서 살펴본 세 개의 직업군의 노동력 구조가 남성은 종형, 여성은 피라미드형이었던 것과는 달리 기능직의 경우 저연령 여성의 취업자 규모는 매우 작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40, 50대의 취업자 규모가 매우 두텁다. 또한 청년층 여성의 취업자의 규모는 매우 작으나, 40대 이상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두드러진다. 기능직에 종사하는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는 총 220만여 명으로 전체 기능직 취업자 중 28%에 이른다. 한편 에코세대는 총 70만여 명으로 전체 기능직 취업자 중 9% 가량을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농림어업의 노동력 구조를 도시하였다. 농림어업직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취업자 규모가 커지는 역 피라미드 형태이며, 산업별 노동력 구조의 농림어업과 유사한 모양이다.

시기별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력의 취업형태별 분포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가 대략 2.3~2.5:1의 비율로 구성된다. 연령별 취업형태 구조는 저연령 취업자일수록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20대 후반에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정점을 이루다 이후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한다. [그림 4-37]과 [그림 4-38]에서 나타나듯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주로 임금부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청년층의 임금취업자 분포는 매우 두텁다. 반면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연령의 증가에 따

라 조금씩 증가하여 60대 이후에는 비임금근로자의 규모가 임금의 규모를 상회하며, 이러한 경향은 남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임금부문의 베이비붐 세대 임금근로자는 330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 19.9%를 차지하며, 에코세대 임금근로자는 313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 19.0%를 차지한다.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원자료
 [그림 4-37] 취업형태별 노동력 구조 I

다. 세대 간 일자리 분석

일반적으로 노동력의 연령의 구분은 개인의 생애과정에서의 경제활동과 근로를 중심으로 크게 세 연령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0-14세 사이의 ‘유년층 인구(A)’로 법적으로 경제활동의 지위가 주어지기 이전의 연령층이고, 둘째는 15-64세 사이의 ‘경제활동인구(B)’이다. 이 연령층은 다시 15-54세 사이의 ‘핵심근로계층’³⁷⁾([그림 4-38]에서 B1)과 55-64세 사이의 ‘고령근로계층(B2)’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는 65세 이상의 ‘비경제활동’ 혹은 ‘정년퇴직인구(C)’이다(방하남 외, 2004).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정책 편의상의 구분이며, 현실적인 노동력의 구성과는 괴리가 있다. 노동력 조사에 15세 이상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15-19세까지의 인구는 대부분 정규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20-64세의 노동력 인구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37) OECD는 핵심근로계층은 20-54세로 정의하고 있다.

노동력의 구성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20-29세), 기간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장년층(30-55세), 핵심노동에서의 이탈과 재진입을 시도하는 고령층(55-64세)의 세 연령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4-39] 참조).

0-14세	15-54세	55-64세	65세+
유년층 인구(A)	핵심근로계층(B1)	고령근로계층(B2)	비경활 은퇴인구(C)
	노동력인구(B)		

[그림 4-38] 연령계층과 경제활동에 따른 인구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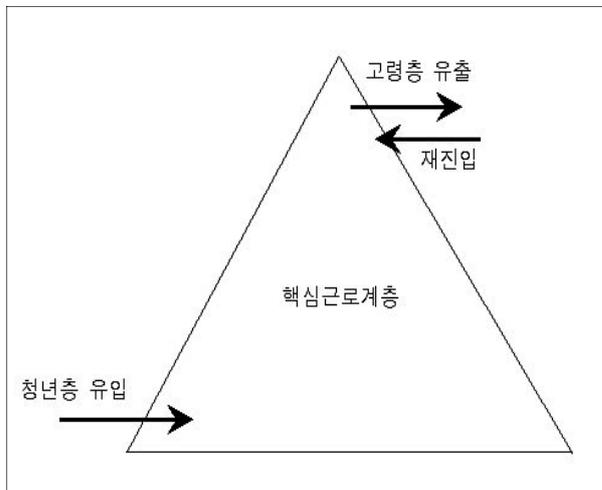
노동력인구(20-64세)		
20-29세	30-55세	55-64세
청년층 (신규진입자)	핵심근로계층	고령근로계층 (핵심근로 탈퇴와 재진입)

[그림 4-39] 노동력 인구의 구성

그러나 서로 다른 연령집단으로 구성되는 노동력 구조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닌 빈번한 노동력의 유입과 유출이 지속되는 가변적인 집합체이다([그림 4-40] 참조). 특히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피라미드형의 노동조직을 가상하였을 때, 피라미드 조직 구조의 하층을 형성하게 되는 청년층 노동력은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적정 연령을 초과한 고령 노동자는 노동조직을 완전히 이탈하거나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시도한다. 한편 피라미드 중간계층을 형성하는 중장년층은 노동시장 진입과 이탈의 이동이 적은 상태로, 연령과 근속의 증가에 따라 피라미드 조직구조 윗부분을 향해 상향 이동한다³⁸⁾. 개인의 근로생애를 통해 관찰되는 노동시장으로의 유입과 유출, 노동력 구조의 유동성은 세대

38) [그림 4-40]의 노동력의 유입과 유출이 반복되는 노동력의 유동적인 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연령계층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노동이동률에 의해서이다. 청년층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연령계층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히 이뤄지는 한편, 적절한 직업을 탐색하기 위한 시기로 이직률 또한 높다. 노동시장의 이탈과 진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청년기에는 이탈률과 진입률이 모두 높은 편이지만, 이탈보다는 진입비중이 높으며,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률이 뚜렷이 높다. 한편 고령층은 개인차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된 일자리를 은퇴하는 시기로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노동시장 이탈률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갖으며, 빈번한 재진입 또한 동시에 이뤄진다. 반면 중장년층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이탈률과 진입률 모두 낮은 안정적인 구조를 보인다.





[그림 4-40] 노동력의 유입(流入)과 유출(流出)

간 일자리 교체를 통해서 이뤄진다고 할 수 있겠다.

청년층은 정규교육 이수 후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연령계층으로 청년층 노동시장은 경기변화와 시장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한 구조이다. 또한 청년층은 이직률이 매우 높으며, 청년기 동안 취업·미취업 상태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불안정성을 보인다. 또한 청년층은 초직의 획득이 어렵고,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 장기간의 구직기간을 거치며, 일자리에 정착하기까지 높은 불안정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이 처한 취약한 상황에 기인한다. 또한 청년층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정규교육 이외에 경력이 없으며, 축적된 인적 자본양이 적다. 한편 고령층은 장기간의 근로 이후 은퇴를 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남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노동시장 유입과 탈퇴를 반복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³⁹⁾, 한국의 고령근로자들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이후 노동시장을 완전히 이탈하는 것이 아닌 늦은 나이까지 노동시장에 남아 소득활동을 계속한다.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직·산업 분포는 어떠하며, 이들과 일자리 교체가 예상되는 에코세대의 직·산업 분포는 어떠한가? 즉 세대의 일자리 분포의 양상과 차이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둘째, 세분화된 직·산업 분류 수준별 에코세대 및 베이비붐 세대의 지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39) 한국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율은 OECD 국가 중 일본과 함께 매우 높은 수준의 국가로 분류된다.



1)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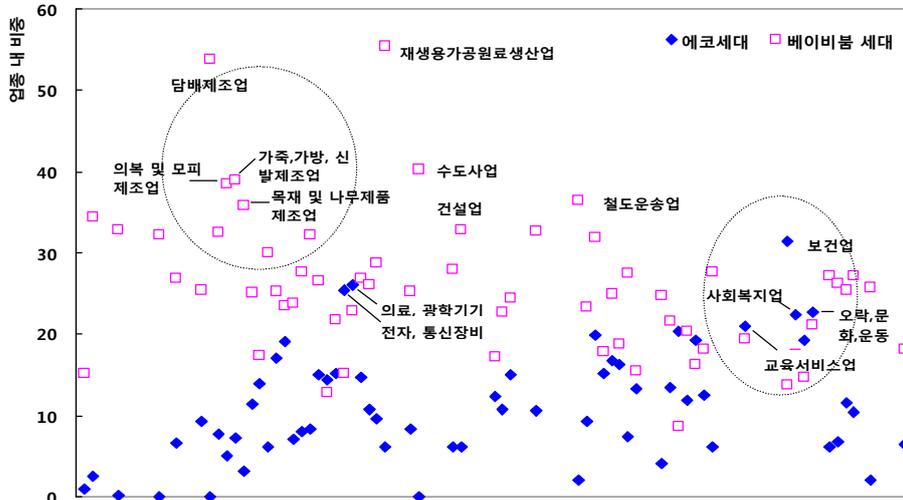
여기서는 2005년과 201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서 나타나는 세대별 업종 분포를 파악하고, 두 시기 간 일자리 분포 증감의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일자리 유입·유출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4-41]은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세대의 업종별 비중을 도시한 것이다(2005년)⁴⁰⁾. 자료 분석에 2005년도 경제활동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도 출생)는 만 42~50세, 에코세대(1979~1985년도 출생)는 만 20~26세가 분석 대상이 된다. 40대는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하고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률이 최고치를 보이는 연령대이다. 반면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학력화 및 늦은 첫 일자리 진입을 감안한다면 에코세대는 지극히 일부만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였을 것이라고 가정된다.

[그림 4-41]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업종(해당 산업 내 30% 이상 분포된 업종)은 1차 산업 중에서는 ‘임업’(34.37%), ‘어업’(32.92%),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32.25%)으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베이비붐 세대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제조업의 세부 업종 중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담배 제조업’(53.86%), ‘섬유제품 제조업’(32.6%), ‘봉제 및 모피제품 제조업’(38.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35.8%),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55.5%) 등 제조업의 탈기술 부문의 사양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제조업 중 에코세대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5.4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6.07%) 등 기술변화에 민감한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중 ‘수도 사업’의 베이비붐 세대 비중이 40.31%로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에코세대 중 ‘수도 사업’ 종사 비중은 0%이다. 건설업 역시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전문직별 건설업’의 베이비붐 세대 비중은 32.78%에 이른다. ‘음식숙박업’ 역시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32.64%)이 높으며, 운수업 중에서는 ‘철도운송업’(36.4%)과 ‘항공운송업(31.82%)’에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서비스업의 세대 간 세부 업종별 분포에는 극명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27.66%),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27.15%), ‘회원단체’(26.16%), ‘수리업’(25.35%), ‘가사 서비스업’(25.81%) 등에 높은 비중은 보이는 반면 에코세대는 ‘교육서비스업’(20.93%), ‘보건업’(31.48%), ‘사회복지사업’(22.5%), ‘영화·방송 및 공연 예술 관련 산업’(19.21%),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산업’(22.79%)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림 4-42]는 2010년도 경제활동조사 자료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일자리 분포이다. 2005년에 비해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많이 진전되어 업종 내 비중이 전반적으로 상승

40) 여기서의 y축의 비중은 각 업종별 취업자를 ‘100’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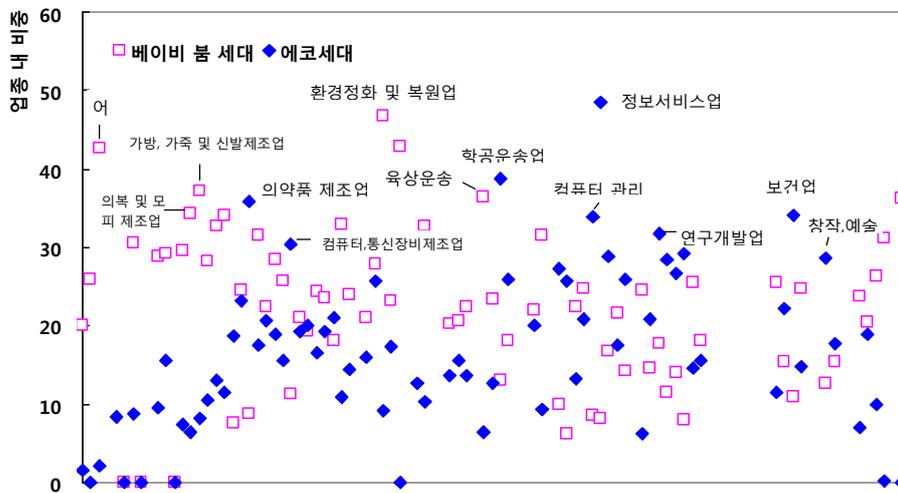
세대 간 일자리(업종) 분포(2005년 경활, 전체)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2005년 원자료

[그림 4-41] 세대별 업종 비중(2005년)

세대 간 일자리(업종) 분포(2010년 경활,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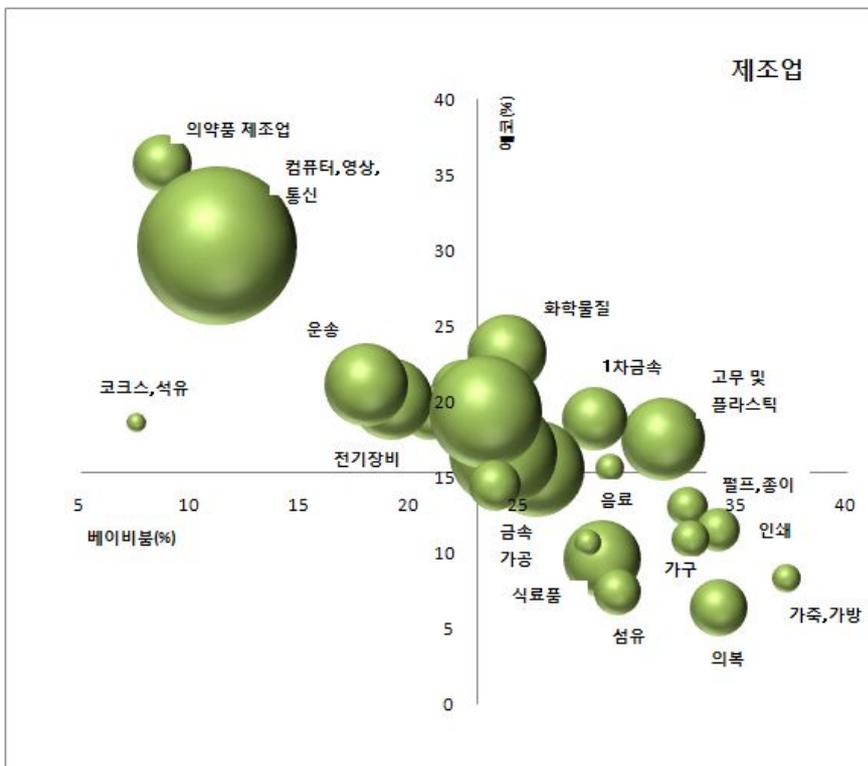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년 원자료

[그림 4-42] 세대별 업종 비중(2010년)

한 것이 관찰된다. 특히 에코세대의 진입은 방송통신업 및 서비스업 일부 부문에서 두드러진다. 에코세대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운수업 중에서는 ‘항공운수업’(38.86%), ‘통신업’(20.9%),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33.91%), ‘정보서비스업’(48.59%), ‘연구 개발업’(31.8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9.28%), ‘교육서비스업’(22.28%), ‘보건업’(34.14%),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8.73%) 등으로 주로 기술변화에 민감한 신산업 부문에 에코세대의 유입이 많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43]은 X, Y축에 각각 두 세대의 업종별 비중 및 에코세대 취업자 수까지 고려하여 작성된 그림이다(제조업을 중심으로 작성됨). [그림 4-43]은 제조업의 세부 업종

제4장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0.3

주 : 1. X축은 각 업종 내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며, Y축은 각 업종 내 에코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임

2. 거품의 크기는 해당 산업별 에코세대의 취업자 수임

[그림 4-43] 에코세대의 업종별 취업자 규모 및 업종 내 비중

별 세대별 위치와 에코세대 취업자 규모를 보여준다. 여기서 거품의 크기는 에코세대의 취업자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품의 크기가 클수록 에코세대의 취업자 수가 많은 업종

이다. 또한 X, Y축은 각각 직종 내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과 에코세대의 비중이다. X, Y축의 기준은 '0'이 아닌 두 세대의 업종 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인 23.1%, 15.3%를 기준으로 하였다. 기준 축에 의해 그림에서 네 개의 영역이 형성되는데, 좌측상단에 위치한 세부업종들은 에코세대의 비중은 평균(15.3%)보다 높고,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은 평균(23.1%)보다 낮은 업종들이다. 우측상단은 에코세대의 비중과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업종이 위치한다. 반면 우측하단은 에코세대의 비중은 낮으나,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은 높은 업종이 위치하고, 좌측하단은 에코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모두 낮은 업종이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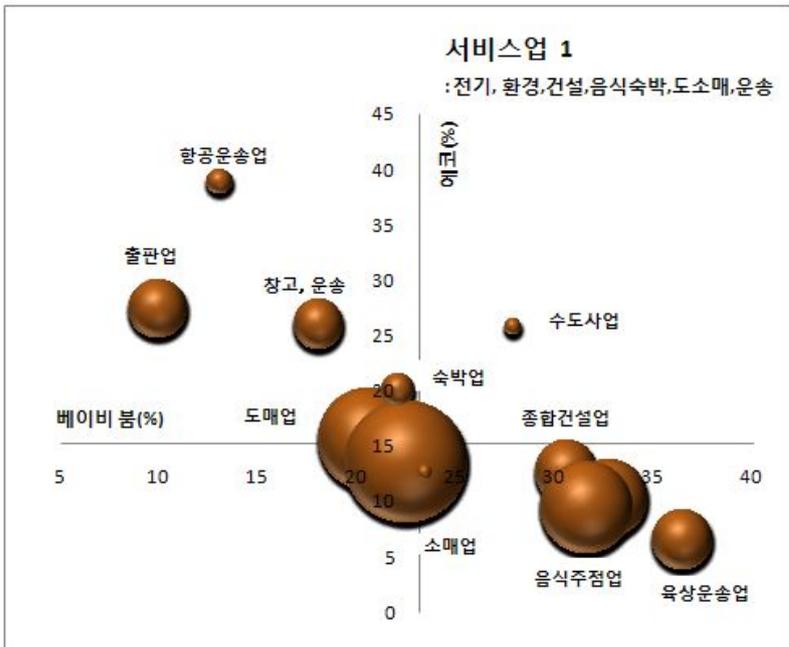
[그림 4-43]에 나타나는 바에 따르면 좌측상단에 위치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은 낮은 반면 에코세대의 비중이 높은 직종은 '컴퓨터·영상·통신장비 제조업'(144천 명)⁴¹⁾,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18천 명), '운송장비 제조업'(39천 명), '전기 장비 제조업'(38천 명) 등으로 나타난다. 한편 우측상단의 에코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모두 평균 이상인 업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34천 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38천 명), '1차 금속 제조업'(23천 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72천 명) 등이다. 반면 우측하단에 위치한 업종들은 에코세대의 비중은 낮은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은 높은 업종들로 이 영역의 대표적인 업종은 '식품 제조업'(34천 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9천 명),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5천 명), '인쇄 및 기록대체 복제업'(10천 명), '의복·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8천 명) 등이다. 한편 좌측하단은 에코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모두 평균 이하 업종이 위치하나, 이 영역에 해당하는 업종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림 4-43]의 제조업 분포에서 나타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제조업은 섬유, 목재, 의복 등 사양 산업 부문과 컴퓨터, 전자·전기, 영상 등 신기술 부문으로 이원화될 수 있는데, 그림의 영역 중 사양 산업 부문은 우측하단(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은 높지만 에코세대의 비중은 평균보다 낮은 영역)에 밀집한 반면, 제조업 중 신기술 부문은 좌측상단(에코세대의 비중은 높으나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은 평균보다 낮은 영역)에 밀집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보면 [그림 4-42]의 분석결과와 맞물려서 이해될 수 있는데, 아직 에코세대의 진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에코세대의 높은 학력수준과 젊은층의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인하여 제조업 내에서 업종은 세대 간 뚜렷이 분리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44]는 전기, 환경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운송업 부문의 비중이다. 이 그림 역시 [그림 4-43]과 동일하게 X, Y축에 각각 두 세대의 업종별 비중 및 에코세대의 업종별 취업자 규모가 제시되어 있다. 좌측상단(에코세대의 비중은 높으나, 베

41)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업종별 에코세대 취업자 수이다.

이비붐 세대의 비중은 낮은 업종에 위치한 업종은 ‘출판업’(65천 명), ‘항공운송업’(11천 명), ‘창고 운송관련 서비스업’(47천 명)으로 운송업 부문 중 항공운송업의 에코세대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에코세대의 취업자 규모가 큰 ‘도매업’(200천 명)의 세대별 비중은 에코세대 20.57%, 베이비붐 세대 15.56%이며, ‘소매업’(293천 명)은 각각 22.47%, 13.58%로 세대별 취업자 비중인 평균값에 근접하여 도매업과 소매업의 거품의 위치는 거의 축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측상단은 에코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모두 높은 업종으로 ‘수도사업’(4천 명)이 있는데, 이에 종사하는 에코세대의 규모는 매우 적다. 우측하단은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고, 에코세대의 비중은 낮은 업종이 위치한다. 운수업 중 ‘항공 운송업’은 에코세대의 비중이 높은 반면 ‘육상운송업’은 에코세대의 비중이 낮고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또한 ‘종합건설업’(75천 명), ‘음식점 및 주점업’(168천 명) 등은 에코세대의 비중은 낮으나,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은 평균 이상인 업종들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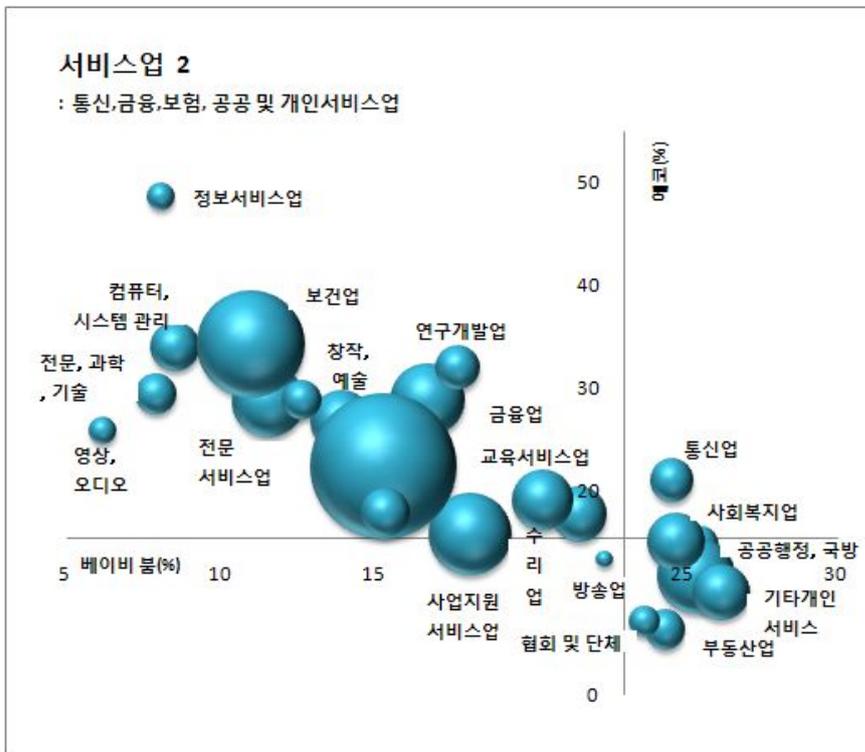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0.3

주 : 1. X축은 각 업종 내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며, Y축은 각 업종 내 에코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임

2. 거품의 크기는 해당 산업별 에코세대의 취업자 수임.

[그림 4-44] 에코세대의 업종별 취업자 규모 및 업종 내 비중 : 서비스업 1

[그림 4-45]는 통신, 금융, 보험,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부문의 세대별 비중을 도시한 것이다. 먼저 좌측상단에 위치한 업종들은 에코세대의 비중이 평균 이상으로 높게 분포된 업종이다. 에코세대의 비중이 높은 동시에 에코세대의 취업자 규모 최대 업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이 업종 내 에코세대의 비중은 22.28%이며, 에코세대 종사자 수는 411천 명으로 여타의 업종 중 에코세대 규모가 매우 크다. 또한 ‘보건업’, (223천 명), ‘금융업’(101천 명), ‘전문서비스업’(100천 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44천 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2천 명), ‘정보서비스업’(14천 명), ‘창작.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30천 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13천 명) 등이 에코세대의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분류된다. 한편 통신업의 경우 우측상단에 위치하여 에코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모두 평균 이상인 업종임을 알 수 있다. 우측하단은 에코세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0.3

주 : 1. X축은 각 업종 내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며, Y축은 각 업종 내 에코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임

2. 거품의 크기는 해당 산업별 에코세대의 취업자 수임

[그림 4-45] 에코세대의 업종별 취업자 규모 및 업종 내 비중 : 서비스업 2



대의 비중은 낮은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업종들이다. 이 영역에 속하는 업종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113천 명), ‘부동산업’(29천 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다. 한편 ‘방송업’은 그림의 영역 중 좌측하단에 위치하여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세대의 비중이 모두 낮은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림 4-44], [그림 4-45]를 통해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부문의 세부 업종별 비중 추이를 검토해보았다. 제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부문 역시 세대별 업종 분리의 양상이 나타난다. 에코세대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연구 개발업’, ‘항공운송업’, ‘정보 서비스업’ 등 인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육상 운송업’, ‘음식점 및 주점업’, ‘부동산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 등으로 두 영역의 업종의 특성은 매우 이질적이다. 에코세대의 유입이 주로 신기술의 전문직 영역에서 이뤄지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저학력, 저숙련의 낮은 지위의 일자리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세대 간 일자리 분포에서 발견되는 경향성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출인력이 고령자, 저학력, 고임금자인 반면 유입인력은 유출인력에 비해 저령자, 고학력, 저임금 근로자로 구성될 것이다. 둘째, 유입인력으로 채워질 부문들은 주로 신기술의 전문직 및 서비스직인 반면 인력의 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부문은 주로 고속련의 제조업, 운수업 등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력의 유출과 유입이 전혀 다른 지점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흔히 고령층의 정년연장이 청년층 일자리의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세대 간 유출 및 유입 부문에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존재한다. 직종과 업종의 연령분절화 및 세대 간 인적자본 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노동수요 측면에서) 선호되는 일자리의 유형이 다르다. 또한 연령 증가에 따라 상용직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임시직 비중 및 자영업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들은 고용안정성 면에서 매우 취약한 구조에 놓여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세대가 부모-자녀 세대임을 감안한다면, 두 세대를 일자리 경합의 경쟁적 관계로 인식하기보다는 상호보완의 완충적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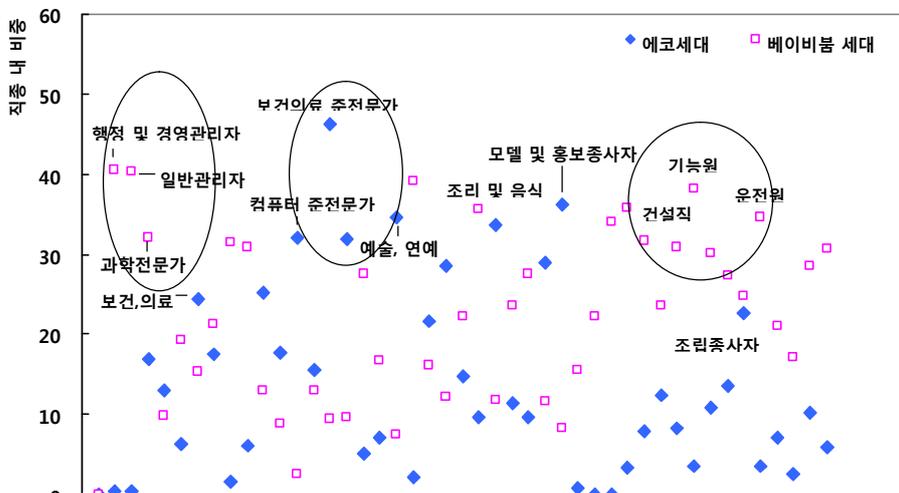
직업은 산업구조에 의해 파생적으로 발생한다. [그림 4-46]은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세대의 직종 비중이다(2005년). 전문직 및 준전문직 부문 중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직종은 ‘행정 및 경영 관리자’(40.55%), ‘일반 관리자’(40.23%), ‘과학 전문가’(32.04%), ‘기타 준전문가’(39.07%) 등이며, 에코세대의 비중이 높은 직종은 ‘보건의료 전문가’(24.44%),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25.11%),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32.1%),

‘보건의료 준전문가’(46.28%), ‘교육 준전문가’(31.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34.7%)로 베이비붐 세대는 조직 상층부의 관리직 부문에 높은 비중을 보이는 반면 에코세대는 보건 및 문화, 예술, 컴퓨터 관련 직종 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는 기능직 부문에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인다. 특히 이들의 비중이 높은 직종은 ‘운전원’(34.57%),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35.89%), ‘금속.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31.6%), ‘정밀기구.세공 및 정비 기능 종사자’(30.93%)와 ‘단순노무직’ 부문이다. 반면 에코세대는 일부 서비스직에서 높은 비중을 보여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33.66%), ‘모델 및 홍보 종사자’(36.26%), ‘통신 판매 종사자’(29.0%) 등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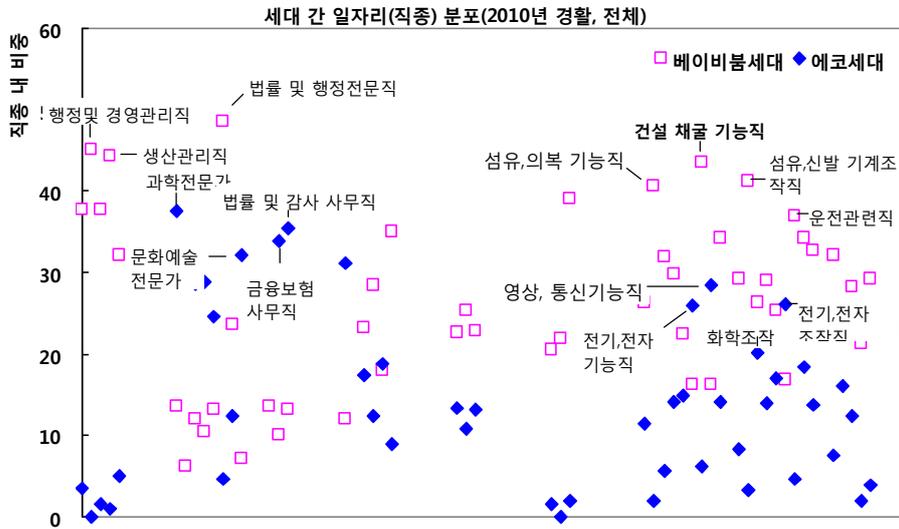
[그림 4-47]은 201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일자리 비중이다. 여기서 에코세대의 비중이 높은 직종은 ‘영상, 통신장비 관련 기능직’(28.39%),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20.18%), ‘전기 및 전자관련 기계 조작직’(26.17%) 등이며,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직종은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45.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기능직’(44.31%), ‘전문 서비스 관리직’(37.82%), ‘공공 및 기업 고위직’(37.75%) 등이다. 2005년과 비교했을 때,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화이트 칼라 부문의 고위직에 많이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대 간 일자리(직종) 분포(2005년 경찰, 전체)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2005년 원자료

[그림 4-46] 세대별 직종 비중(2005년)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20010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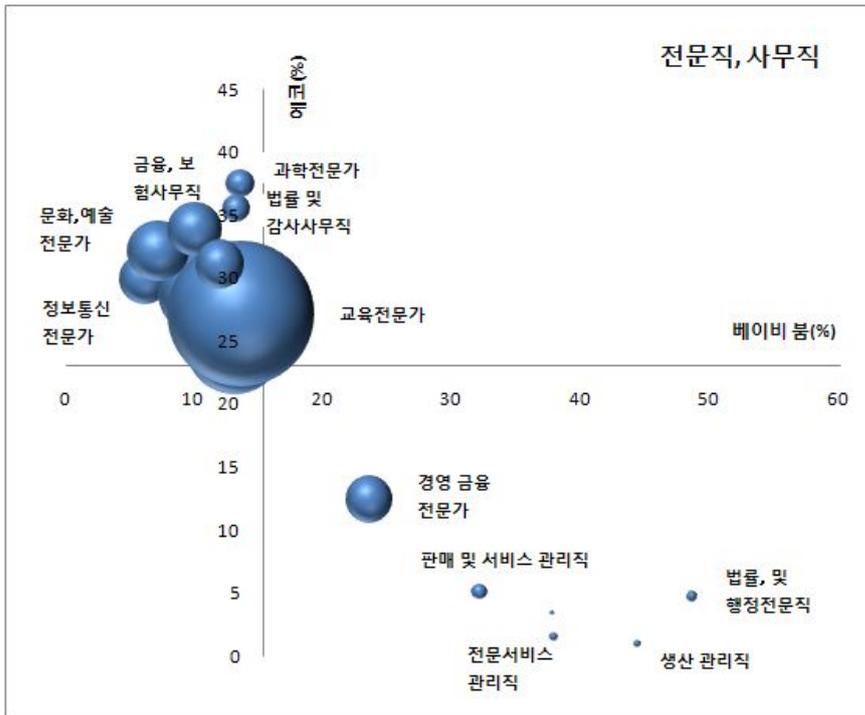
[그림 4-47] 세대별 직종 비중(2010년)

[그림 4-48]은 X, Y축에 각각 두 세대의 직종별 비중 및 에코세대 취업자 수까지 고려하여 작성된 그림이다. [그림 4-48]은 전문직과 사무직의 세부 업종별 세대별 위치와 에코세대 취업자 규모를 보여준다. 여기서 거품의 크기는 에코세대의 취업자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품의 크기가 클수록 에코세대의 취업자 수가 많은 직종이다. 또한 X, Y 축은 각각 직종 내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과 에코세대의 비중이다. X, Y 축의 기준은 '0'이 아닌 두 세대의 업종 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인 23.1%, 15.3%를 기준으로 하였다. 기준 축에 의해 그림에서 네 개의 영역이 형성되는데, 좌측상단에 위치한 세부직종들은 에코세대의 비중은 평균(15.3%)보다 높고,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은 평균(23.1%)보다 낮은 업종들이다. 우측상단은 에코세대의 비중과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직종이 위치한다. 반면 우측하단은 에코세대의 비중은 낮으나,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은 업종이 위치하고, 좌측하단은 에코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모두 낮은 업종이 위치한다.

먼저 좌측상단은 에코세대의 비중은 평균(23.1%)보다 높은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은 평균(15.3%)보다 낮은 직종으로 이에 해당하는 직종은 '교육전문가'(331천 명)⁴²⁾,

42) 전문직과 사무직 부문에서 가장 종사자 수가 많은 직종은 교육전문가이다.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0.3

주 : 1. X축은 각 직종 내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며, Y축은 각 직종 내 예코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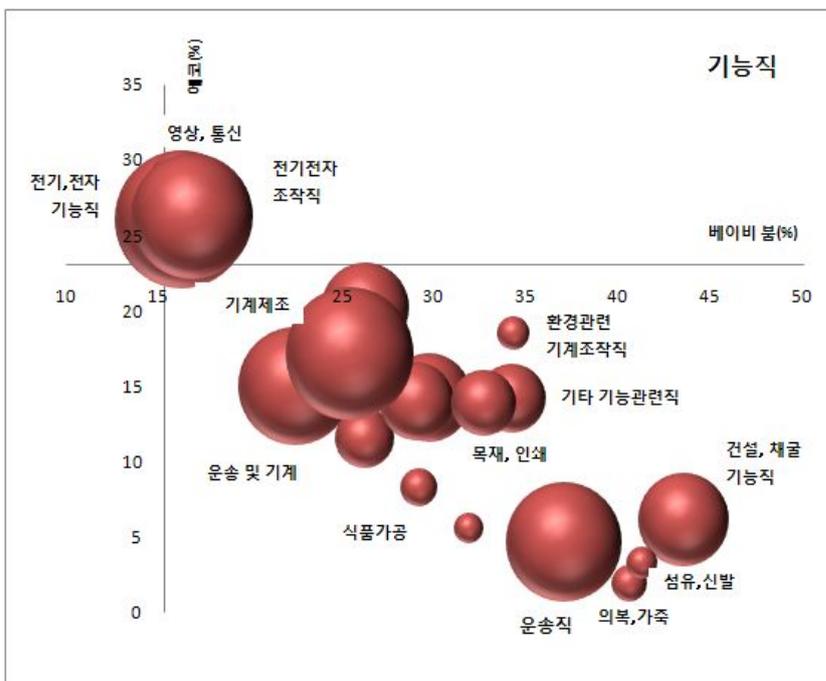
2. 거품의 크기는 해당 산업별 예코세대의 취업자 수임

[그림 4-48] 예코세대의 직종별 취업자 규모 및 직종 내 비중 : 전문직·사무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135천 명), ‘금융·보험 사무직’(3107천 명),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93천 명), ‘과학전문가’(27천 명), ‘법률 및 감사 사무직’(26천 명) 등이다. 한편 우측상단(예코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모두 높은 직종)과 좌측하단(예코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모두 낮은 직종)에 위치한 직종은 발견되지 않는다. 우측하단에 위치한 직종들은 예코세대의 비중은 낮은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은 높은 직종들이다. 이 영역에 속하는 직종은 ‘경영·금융 전문가’,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법률 및 행정 전문가’, ‘생산관리직’, ‘전문서비스 관리직’ 등으로 임금 부문의 상층부 관리직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센서스 자료의 직업구조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으로 올수록 전문직 영역이 증대되어 전체 직업구조의 20% 가량이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박시내, 2009). 신생된 직업들은 신기술과 관련된 첨단 분야의 전문직,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직 부문들로 이러한 영역은 주로 교육수준이 높고, 신기술 습득에 용이한 젊은층에게 유리한 직

종들이다. 반면 임금 부문의 법률, 행정 부문은 기술 변화에 둔감하며, 조직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직종들로 주로 40대 중반 이후의 장년층이 점유하고 있다. [그림 4-48]은 이러한 직업의 연령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4-49]는 기능직의 세부 직종별 세대 비중이다. 그림에서 거품의 크기는 에코세대의 취업자 수를 의미하는데 기능직 중 에코세대의 규모가 큰 직종은 ‘전기 및 전자관련 기능직’(81천 명, 25.98%), ‘전기 및 전자관련 기계 조작직’(67천 명, 26.17%)이며, 대부분의 제조업에 에코세대의 비중이 평균 이하로 낮은 것에 반해 전기전자 관련직에는 에코세대의 비중이 높다. 한편 [그림 4-49]에서 대부분의 기능직 세부 직종들이 우측하단에 밀집해 있다. 이 영역은 에코세대의 비중은 평균보다 낮은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은 평균보다 높은 직종들이 위치하는데,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운송 및 기계관련 기능직’,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섬유·의복 및 가죽관련 기능직’,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등 대부분의 기능직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다.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0.3

주 : 1. X축은 각 직종 내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며, Y축은 각 직종 내 에코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임

2. 거품의 크기는 해당 산업별 에코세대의 취업자 수임

[그림 4-49] 에코세대의 직종별 취업자 규모 및 직종 내 비중 : 기능직

2. 노동생명표

가. 작성방식

생명표(Life Table)란 사망확률에 기초하여 개인의 기대여명(life expectancy)을 산출한 표이다. 생명표를 통해 현재의 사망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각 연령계층이 몇 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기대여명에 현재의 연령을 더하여 개인의 평균 수명을 산출할 수 있다. 생명표 작성방식을 개인의 근로생애에 적용하면 노동기대여명(work-life expectancy)을 산출할 수 있으며, 생명표에서의 사망은 곧 노동생애에서 은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생명표 작성을 통한 취업자의 은퇴연령의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는 가장 최근의 생명표인 2008년도 완전생명표 자료와 200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노동기대여명 및 부문별 은퇴연령을 추산하는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부문별 은퇴연령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노동생명표는 1950년 미국의 노동통계국(BLS :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S. Wolfbein과 H. Wool에 의해 최초로 작성되었다(황수경, 2003; 장지연, 2002; 박원란, 2001). 노동생명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생명표상의 정지인구, 생존자수 및 연령별 취업확률이 필요한데, 정지인구와 생존자수는 생명표의 자료를 이용하고, 취업확률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작성될 수 있다.

노동생명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표 작성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생명표는 연령계층별 사망률을 통해 연령별 사망확률을 산출하게 되는데, ‘연령별 사망자수(nd_x)’는 x 연령에서 $x+n$ 연령까지 사망할 사람의 수, x 연령 생존자수(l_x)에 연령별 사망확률(nq_x)을 곱한 것과 같다.

$$nd_x = l_x - l_{x+n} = l_x \cdot nq_x$$

‘연령별 사망확률(nq_x)’은 어떤 연령계층 x 에 달한 사람이 $n+x$ 세가 되기 직전까지 사망할 확률로 사망자수를 생존인구로 나눈 것과 같다.

$$nq_x = \frac{nd_x}{l_x} = \frac{l_x - l_{x+n}}{l_x}$$

‘연령별 생존자수(l_x)’는

$$l_x = \frac{nd_x}{nq_x}$$

‘연령계급별 정지인구(${}_nL_x$)’는 x 연령에서 $x+n$ 연령에 도달하는 기간 동안에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생존 년수의 합계로 x 연령의 생존인구와 $x+n$ 연령의 생존인구의 산술평균 값에 계급간격 값 n 을 곱하여 산출한다.

$${}_nL_x = n \cdot \left(\frac{l_x + l_{x+n}}{2} \right)$$

연령계층 이후의 정지인구의 합인 T_x 는 특정연령의 생존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살 것으로 기대되는 생존년수의 합계이다.

$$T_x = \sum_x^{\infty} {}_nL_x$$

이상의 노동력생명표에서 산출한 수치와 경제활동인구의 조사 결과를 통해 노동력 생명표를 작성하게 된다.

생명표상의 ‘정지인구(${}_nL_x$)’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령별 취업확률(${}_nW_x$)’을 곱하여 ‘노동력 정지인구(${}_nL_{wx}$)’를 산출한다.

‘연령별 취업확률(${}_nW_x$)’은 연령계급별 취업인구 / 연령계급별 총인구로 산출되며,

‘노동력 정지인구(${}_nL_{wx}$)’는 연령계급별 ‘정지인구(${}_nL_x$)’에 연령별 ‘취업확률(${}_nW_x$)’을 곱하여 산출한다.

$${}_nL_{wx} = {}_nL_x \times {}_nW_x$$

‘연령계급 이후의 총 노동력 정지인구(T_{wx})’는 해당 연령 이상의 노동력 정지인구 (${}_nL_{wx}$)를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T_{wx} = \sum_x^{\infty} {}_nL_{wx}$$

이렇게 산출된 연령계급 이후의 총 노동력 정지인구(T_{wx})를 생존인구(l_x)로 나누어 노동기대여명(e_{wx})을 산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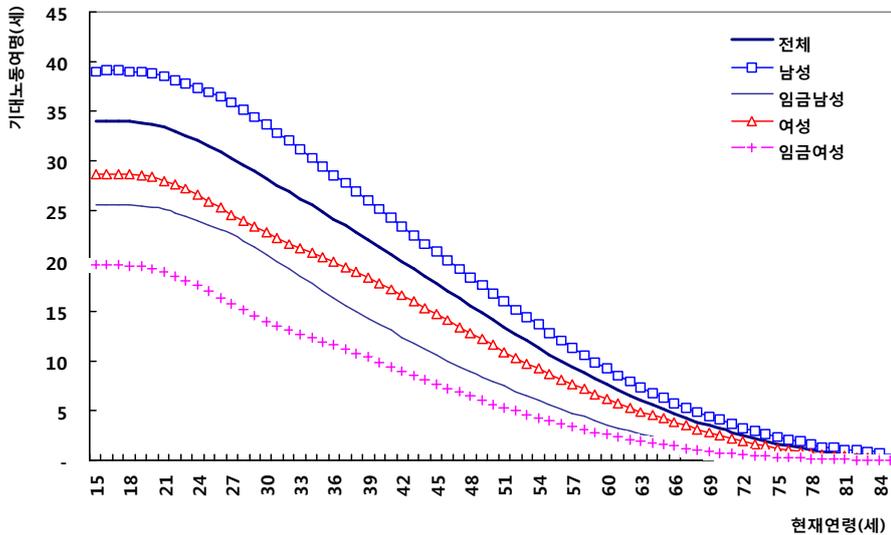
$$\text{기대여명: } e_x = \frac{T_x}{l_x}$$

$$\text{노동기대여명: } e_{wx} = \frac{T_{wx}}{l_x}$$



나. 부문별 은퇴연령

[그림 4-50]과 <표 4-40>은 2008년 생명표와 경제활동인구자료의 취업확률을 이용하여 산출한 노동기대여명이다⁴³⁾. 노동기대여명은 전체와 남성과 여성 및 전체 취업자와 임금부문의 기대노동여명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그림 4-50]의 연령별 주요 집단의 노동기대여명의 추이를 살펴보면 노동시장 진입이 충분히 이뤄지기 전인 청년층의 경우 현재의 취업확률로 노동기대여명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노동기대여명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거의 감소하지 않는다. 그러나 20대 중반 이후 노동기대여명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여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기대여명은 매우 짧다. 주요 연령별 노동기대여명을 짚어보면 25세는 31.48년, 35세는 24.94년, 45세는 17.73년, 55세는 10.62년으로, 이는 현재 25세 취업자는 향후 31.48년 동안 노동시장에 취업해 있을 것이며, 35세는 24.94세, 45세는 17.73년, 55세는 10.62년 동안 취업상태를 유지할 것임을 의미한다.



자료 : 생명표(2008년), 경제활동인구조사(2009년)

[그림 4-50] 부문별 노동기대여명

43) 1. 부문별 노동기대여명이다. 생명표가 '0'세부터 작성되는 것과는 달리 노동생명표는 노동력 조사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15세 이상'부터 작성 된다. 청년층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이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나, 미래의 고용률을 가정하여 잠재노동력 인구를 산출하지 않고, 현재의 취업확률에 기반하여 기대노동수명만 산출하였다. 또한 기존의 노동생명표에서 노동확률로서 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사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취업자의 은퇴연령의 추정을 분석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확률로 고용률 지표를 활용하였다.

2. 본 연구의 노동기대여명 추정치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본 결과(황수경, 2005; 장지연,호정화, 2002; 박원란, 2001), 구체적인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경향성은 유사하다.

〈표 4-40〉 주요연령별 노동기대여명

	전체	임금	남성		여성	
			취업자	임금	취업자	임금
15세	33.98	22.72	39.06	25.65	28.79	19.58
20세	33.65	22.4	38.81	25.41	28.37	19.19
25세	31.48	20.39	36.9	23.66	25.98	16.96
30세	28.29	17.4	33.71	20.68	22.81	13.98
35세	24.94	14.49	29.49	16.98	20.39	11.91
40세	21.45	11.76	25.2	13.61	17.75	9.88
45세	17.73	9.14	20.89	10.58	14.66	7.69
50세	14.06	6.76	16.72	7.88	11.53	5.64
55세	10.62	4.73	12.77	5.56	8.64	3.92
60세	7.56	3.06	9.18	3.56	6.18	2.59
65세	5.08	1.82	6.23	2.08	4.18	1.6
70세	3.17	0.93	4.07	1.09	2.53	0.8
75세	1.65	0.4	2.33	0.5	1.24	0.33
80세	0.75	0.17	1.28	0.26	0.49	0.12
85세 이상	0.04	0.01	0.11	0.02	0.02	0
연령대별 평균 노동기대여명						
20대	31.58	20.47	36.95	23.7	26.12	17.08
30대	25.25	14.8	29.91	17.4	20.58	12.11
40대	18.1	9.43	21.34	10.92	14.96	7.91
50대	11.02	4.98	13.22	5.84	9.01	4.15
60대	5.4	1.98	6.63	2.29	4.41	1.7

자료 : 생명표(2008년), 경제활동인구조사(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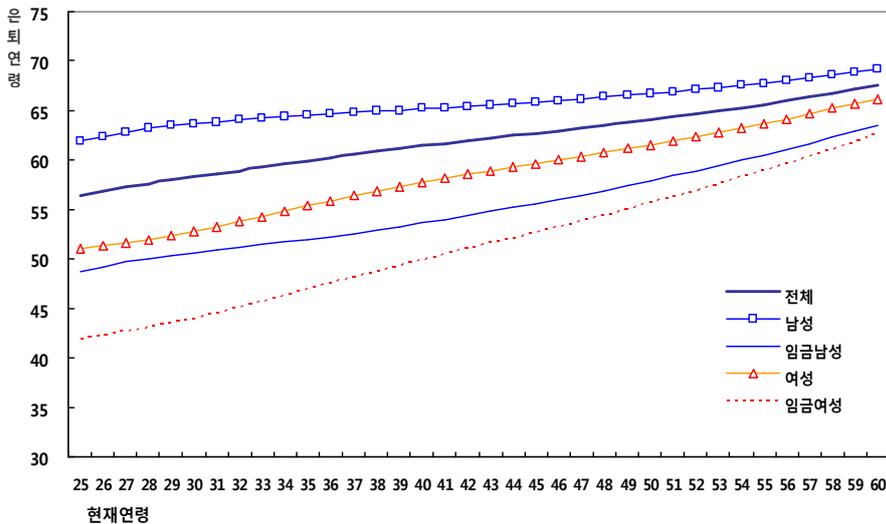
한편 노동기대여명은 성 및 취업형태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노동기대여명은 25세 20.39년, 35세 14.49년, 45세 9.14년, 55세 4.73년, 65세 1.82년으로 전체 취업자보다 짧다. 또한 남성취업자의 기대노동여명은 25세 36.9년, 35세 29.49년, 45세 20.89년, 55세 12.77년인 반면 여성취업자는 25세 25.98년, 35세 20.39년, 45세 14.66년, 55세 8.64년으로 여성 취업자의 기대노동여명은 남성보다 짧게 나타난다. 임금부문에만 한정하여 다시 검토해보면, 남성 임금근로자의 노동기대여명은 25세 23.66년, 35세 16.98년, 45세 10.58년인 반면 여성은 25세 16.96년, 35세 11.91년, 45세 7.69년으로 남성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더 오랜 기간 잔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각 세별로 작성된 노동생명표를 통해 20대~60대의 평균 노동기대여명을 산출하였다. 현재 20대 취업자는 향후 31.58년간 노동시장에 잔존할 것으로 전망되며, 30대는 25.25년, 40대는 18.1년, 50대는 11.02년 60대는 5.4년 취업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대별 평균 노동기대여명은 성별 및 취업형태별로 다르게 추정되는데, 각 세별 기대노



동여명과 동일하게 여성보다는 남성이, 임금부문보다는 비임금 부문의 기대노동여명이 더 길다.

[그림 4-51]과 <표 4-41>은 노동기대여명을 통해 산출한 부문별 은퇴예상연령이다. 현재 30세의 취업자는 58.29세에 노동시장은 은퇴할 것으로 기대되며, 40세 취업자는 61.45세, 50세 취업자는 64.06세에 은퇴할 것으로 추정 된다⁴⁴⁾. 임금근로자의 경우 은퇴 예상연령이 짧게 추정되는데, 30세 취업자의 은퇴예상연령은 47.4세, 40세는 51.76세, 50세는 56.76세, 60세는 63.06세로 나타난다. 여성의 은퇴시점은 남성보다 빠르며, 특히 임금근로자일수록 여성의 은퇴시점은 이른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은퇴예상연령은 30세 43.98세, 40세 49.88세, 50세 55.64세로 20, 30대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 함몰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후 연령구간에서 은퇴연령은 크게 증가한다. 또한 임금근로자의 경우 제도적 정년제 및 비임금 부문으로의 이동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은퇴연령이 상대적으로 낮다.



자료 : 생명표(2008년), 경제활동인구조사(2009년)

[그림 4-51] 부문별 은퇴예상연령

44)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은퇴시점이 늦어지는 것은 생명표의 계산방식이 노동시장의 이탈위험을 겪고 난 생존자에 대한 기대노동여명을 현재의 연령에 더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즉 젊은층의 은퇴연령에는 중간에 노동시장을 이탈할 위험도가 반영된 것이다.

〈표 4-41〉 주요연령별 은퇴예상연령

	전체	임금	남성		여성	
			취업자	임금	취업자	임금
15세	49.98	37.72	54.06	40.65	43.79	34.58
20세	53.65	42.4	58.81	45.41	48.37	39.19
25세	56.48	45.39	61.9	48.66	50.98	41.96
30세	58.29	47.4	63.71	50.68	52.81	43.98
35세	59.94	49.49	64.49	51.98	55.39	46.91
40세	61.45	51.76	65.2	53.61	57.75	49.88
45세	62.73	54.14	65.89	55.58	59.66	52.69
50세	64.06	56.76	66.72	57.88	61.53	55.64
55세	65.62	59.73	67.77	60.56	63.64	58.92
60세	67.56	63.06	69.18	63.56	66.18	62.59
65세	70.08	66.82	71.23	67.08	69.18	66.6
70세	73.17	70.93	74.07	71.09	72.53	70.8
75세	76.65	75.4	77.33	75.5	76.24	75.33
80세	80.75	80.17	81.28	80.26	80.49	80.12
85세 이상	85.04	85.01	85.11	85.02	85.02	85.0

자료 : 생명표(2008년), 경제활동인구조사(2009년)

〈표 4-42〉는 노동생명표 방식으로 작성된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기대여명과 은퇴예상 연령이다. 현재 55세 취업자의 은퇴예상 연령은 65.62세로 향후 10.62년간 취업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50세 취업자는 64.06세에 47세 취업자는 63.25세에 각각 은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베이비붐 임금근로자의 노동기대여명은 전체 취업자보다 짧은데, 55세 남성임금근로자는 60.56세, 여성임금근로자는 58.92세에 노동시장은 은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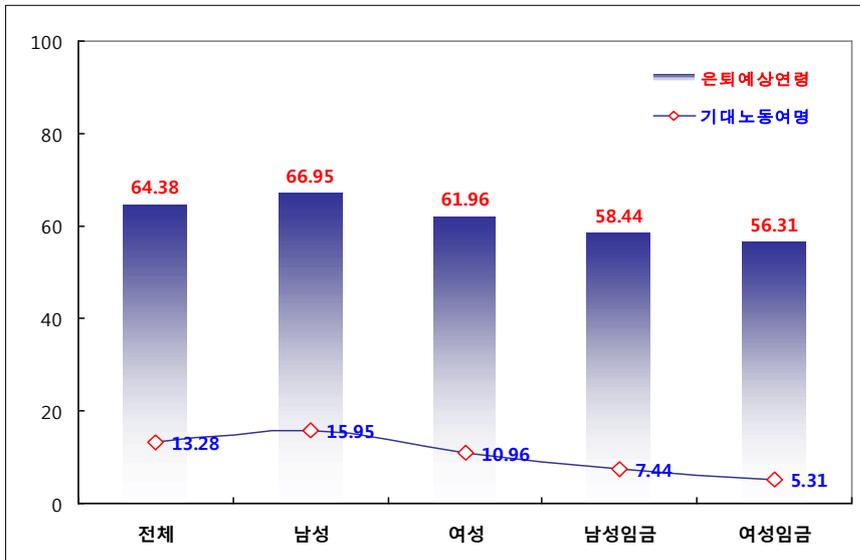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노동기대여명은 13.28년으로 각 세별 차이는 있지만, 현재의 취업확률 가정하에 향후 13여 년간을 노동시장에 잔존하며, 평균 64.38세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로 노동기대여명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베이비붐 임금근로자의 노동기대여명은 6.37년이며, 남성취업자는 15.95년, 여성취업자는 10.96년, 남성임금은 7.44년, 여성임금은 5.31년으로 남성의 노동기대여명이 여성보다 길고, 임금부문의 노동기대여명은 비임금 근로자보다 짧다⁴⁵⁾.

45) 아래의 표는 베이비붐 세대의 기대수명과 노동기대수명을 비교한 것이다. 각 세별 차이는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기대수명은 31.2년으로 남성 28.0년, 여성 33.9년으로 나타난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향후 31.2년(남성 28년, 여성 33.9년) 더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기대수명과 비교했을 때 이들의 노동시장 잔존기간은 어떠한가? 현재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추계된 노동기대수명에 의하면 이들의 평균 노동기대수명은 13.3년(남성 16.0년, 여성 11.0년)으로 이는 이들이 향후 30여 년의 생존기간 중 13여 년간을 경제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의미한다.

〈표 4-42〉 베이비붐 세대의 기대노동여명과 은퇴예상연령

	기대노동여명					
	전체	임금	남성		여성	
			취업자	임금	취업자	임금
47세	16.25	8.14	19.21	9.43	13.38	6.82
48세	15.5	7.65	18.37	8.89	12.74	6.4
49세	14.78	7.2	17.53	8.37	12.15	6.01
50세	14.06	6.76	16.72	7.88	11.53	5.64
51세	13.34	6.34	15.92	7.42	10.92	5.28
52세	12.64	5.91	15.13	6.92	10.33	4.92
53세	11.95	5.51	14.33	6.47	9.75	4.56
54세	11.29	5.12	13.56	6.00	9.21	4.25
55세	10.62	4.73	12.77	5.56	8.64	3.92
(평균)기대 노동여명	13.28	6.37	15.95	7.44	10.96	5.31
	은퇴예상연령					
	전체	임금	남성		여성	
			취업자	임금	취업자	임금
47세	63.25	55.14	66.21	56.43	60.38	53.82
48세	63.5	55.65	66.37	56.89	60.74	54.4
49세	63.78	56.2	66.53	57.37	61.15	55.01
50세	64.06	56.76	66.72	57.88	61.53	55.64
51세	64.34	57.34	66.92	58.42	61.92	56.28
52세	64.64	57.91	67.13	58.92	62.33	56.92
53세	64.95	58.51	67.33	59.47	62.75	57.56
54세	65.29	59.12	67.56	60.0	63.21	58.25
55세	65.62	59.73	67.77	60.56	63.64	58.92
(평균)은퇴 예상연령	64.38	57.37	66.95	58.44	61.96	56.31

	기대수명			노동기대수명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47	34.8	31.5	37.7	16.3	19.2	13.4
48	33.9	30.6	36.7	15.5	18.4	12.7
49	33.0	29.8	35.8	14.8	17.5	12.2
50	32.1	28.9	34.8	14.1	16.7	11.5
51	31.2	28.0	33.9	13.3	15.9	10.9
52	30.3	27.2	32.9	12.6	15.1	10.3
53	29.4	26.3	32.0	12.0	14.3	9.8
54	28.5	25.5	31.1	11.3	13.6	9.2
55	27.6	24.6	30.1	10.6	12.8	8.6
평균	31.2	28.0	33.9	13.3	16.0	11.0



[그림 4-52]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기대여명과 은퇴예상연령

다음으로 직종별 노동기대여명과 은퇴예상연령을 추산하여 보았다(<표 4-43>). 작성 방법은 기존의 노동생명표 작성방식과 동일하되, 취업확률 대신 해당직종 취업확률(전체 취업자 대비)을 곱하여 직종별 노동기대여명을 산출하였다⁴⁶⁾. 작성결과 노동기대여명은 직종별로 달리 나타난다. 예견되는 바와 같이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큰 전문직 및 사무직은 기대노동여명이 짧은 반면 기능직과 농어업직의 기대노동여명은 길고, 서비스·판매직은 그 중간수준이다. 50세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는 향후 2.45년 취업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무직은 1년, 서비스·판매직은 5.21년, 기능직은 12.5년, 농어업직은 10.89년간 노동시장에 잔존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기대여명을 통해 직종별 취업자의 은퇴예상연령을 추정할 결과, 준전문직 이상은 53.32세, 사무직은 51.93세, 서비스·판매직은 63.11세, 농어업직은 61.85세로 나타난다.

46) 작성방법은 연령별 정지인구에 해당직종의 취업확률을 곱하여 해당직종의 노동력 정지인구 및 총노동력 정지인구를 산출하고, 이를 생존자수로 나누었다.

〈표 4-43〉 직종별 노동기대여명과 은퇴예상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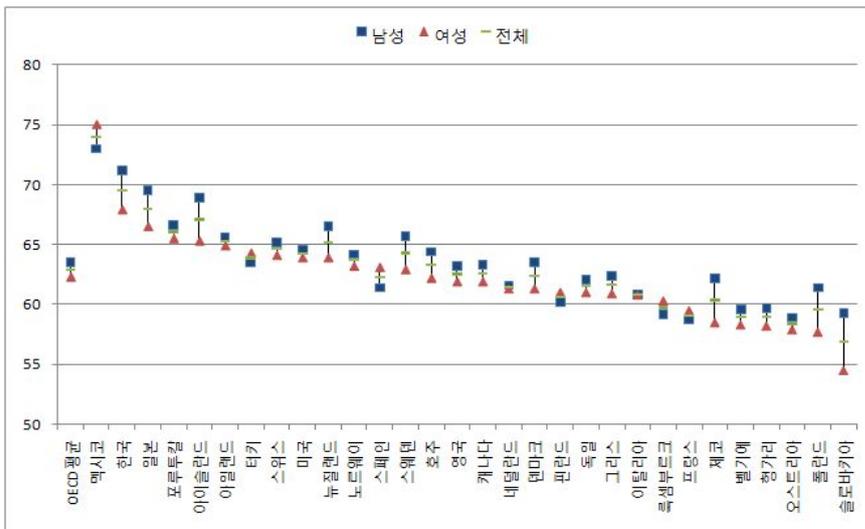
연령	노동기대여명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직	농어업직
45세	3.34	1.53	6.5	14.29	10.96
46세	3.14	1.4	6.26	13.94	10.95
47세	2.98	1.28	6.01	13.57	10.93
48세	2.79	1.17	5.74	13.24	10.92
49세	2.62	1.09	5.47	12.87	10.91
50세	2.45	1.00	5.21	12.5	10.89
51세	2.29	0.92	4.97	12.12	10.86
52세	2.14	0.84	4.7	11.74	10.82
53세	2.00	0.77	4.42	11.38	10.79
54세	1.87	0.7	4.16	10.98	10.77
55세	1.75	0.63	3.9	10.58	10.73
60세	1.18	0.41	2.9	8.4	10.39
65세	0.83	0.28	1.98	6.23	9.8
연령	은퇴예상연령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직	농어업직
45세	48.34	46.53	51.5	59.29	55.96
46세	49.14	47.4	52.26	59.94	56.95
47세	49.98	48.28	53.01	60.57	57.93
48세	50.79	49.17	53.74	61.24	58.92
49세	51.62	50.09	54.47	61.87	59.91
50세	52.45	51.0	55.21	62.5	60.89
51세	53.29	51.92	55.97	63.12	61.86
52세	54.14	52.84	56.7	63.74	62.82
53세	55.0	53.77	57.42	64.38	63.79
54세	55.87	54.7	58.16	64.98	64.77
55세	56.75	55.63	58.9	65.58	65.73
60세	61.18	60.41	62.9	68.4	70.39
65세	65.83	65.28	66.98	71.23	74.8

자료 : 생명표(2008년), 경제활동인구조사(2009년)

다. OECD 국가의 은퇴연령

2.에서는 노동생명표 작성법을 통해 부문별 노동기대여명과 은퇴예상연령을 추산하여 보았다. 해외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50세 이상 남성고령자의 고용률은 80%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70%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 특히 한국 고령자의 가구소득의 원천별 구성은 여전히 근로소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고령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이후에도 완전히 노동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OECD 주요 국가들이 1970년대 이후 은퇴연령이 급격히 감소하였던 것에 반해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은퇴연령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림 4-53]과 [그림 4-54]는 2002~2007년에 40세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조사된 OECD 국가들의 노동시장의 은퇴연령이다⁴⁷⁾. 이 조사에서 은퇴연령은 ‘실질 은퇴연령(effective retirement age)’과 ‘공식 은퇴연령(official retirement age)’의 두 가지 차원으로 측정되었는데, 전자는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게 된 연령을 말하며, 후자는 정년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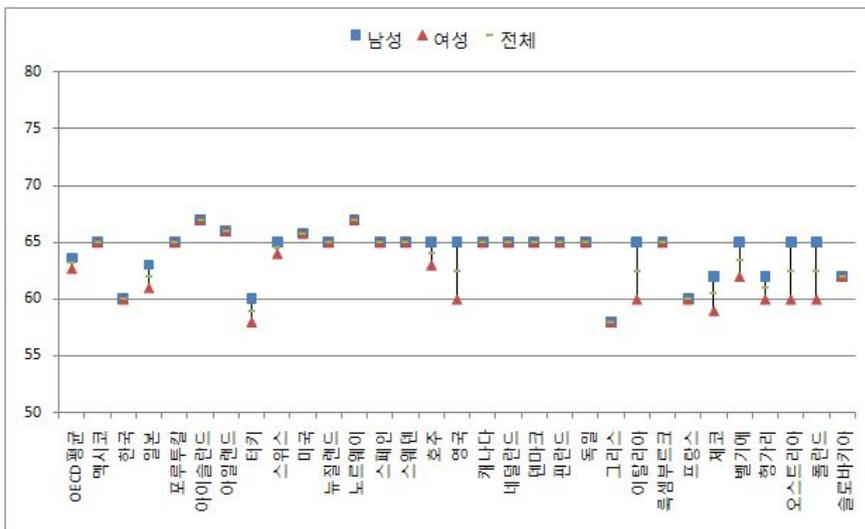
주 : 2002~2007년 기간 중 40세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조사된 실질은퇴연령(5년 평균)임.
 자료 : Society at a Glance 2009 : OECD Social Indicators

[그림 4-53] OECD 국가의 실질 은퇴연령(2002~2007년)

47) OECD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OECD 회원국(30개국) 40세 이상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실제 평균 은퇴연령이 얼마인지를 조사하였다(Society at a Glance 2009 : OECD Social Indicators).

직 연령으로 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연령을 의미한다. [그림 4-53]은 OECD 국가들의 실질 은퇴연령을 성별로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 의하면 멕시코의 실질 은퇴연령은 남성 73.3세, 여성 75.0세로 조사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한국은 남성 71.2세, 여성 67.9세, 일본은 남성 69.5세, 여성 66.5세로 여타 국가 중 은퇴연령이 매우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한편 미국과 영국의 실질 은퇴연령은 남성은 각각 64.6세, 63.2세, 여성은 각각 63.9세, 61.9세로 조사된 국가들 중 실질 은퇴연령이 OECD 평균수준(남성 63.5세, 여성 62.3세)에 근접한 국가로 분류된다. 반면 실질 은퇴연령이 낮은 국가군은 벨기에, 헝가리,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등으로 특히 슬로바키아의 실질 은퇴연령은 남성 59.3세, 여성 54.5세로 조사된 국가 중 실질은퇴가 가장 빠른 시점에서 이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4-54]은 OECD 국가의 공식 은퇴연령이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조사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식적인 은퇴는 남녀 공히 65세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반면 65세 이전에 공식 은퇴가 이뤄지는 국가들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한국은 60세, 일본은 62세, 터키는 59세, 그리스는 58세에 고령자의 공식적인 은퇴가 이뤄진다. 공식 은퇴연령에는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양분된다. 멕시코와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은 남성과 여성의 공식 은퇴연령이 동일하다. 반면 일본, 터키, 스위스, 호주, 영국, 이탈리아, 체코, 벨기에,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의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공식 은



주 : 2002~2007년 기간 중 40세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조사된 실질 은퇴연령(5년 평균)임
 자료 : Society at a Glance 2009 : OECD Social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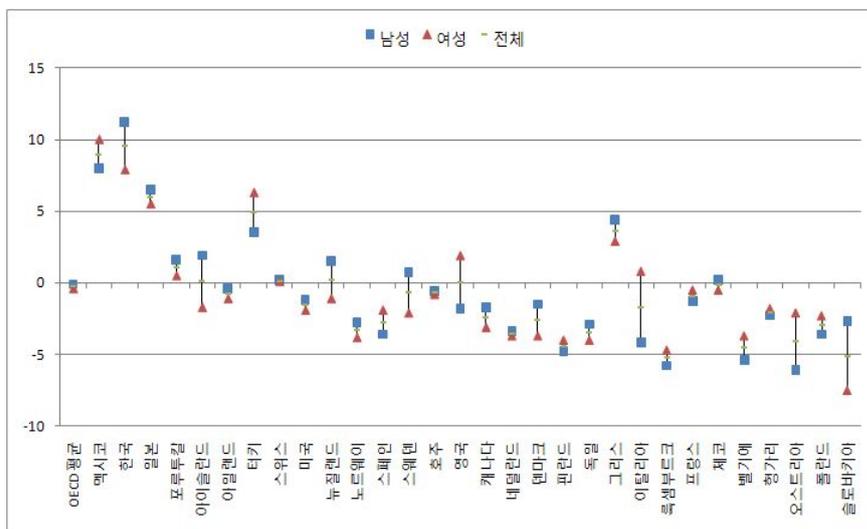
[그림 4-54] OECD 국가의 공식은퇴연령(2002~2007년)



퇴연령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남성의 공식 은퇴연령이 여성보다 늦은 시점에서 이뤄진다. 공식 은퇴연령은 제도적인 정년제가 시행되는 연령으로 보통 이 시기에 연금수급이 가능하지만,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모든 국가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

고령자의 은퇴시기의 결정은 소득대체율(replacement rates by earnings)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급액의 비율을 말하는데, OECD 자료에 따르면(OECD Pension at a Glance 2009 : Retirement-Income System In OECD Countries), 고령자의 평균소득 중 소득대체율이 큰 국가는 아이슬란드(90.2%), 네덜란드(88.3%), 룩셈부르크(88.1%) 등이며, 한국과 일본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42.1%, 33.9%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일본, 멕시코 등)의 낮은 소득대체율은 고령근로자가 공식 은퇴 이후 늦은 시점까지 노동시장을 완전히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다음의 [그림 4-55]는 OECD 국가들의 실질 은퇴연령과 공식 은퇴연령과의 차이를 도시한 것이다. 각 국가별 실질 은퇴연령과 공식 은퇴연령의 차이는 두 연령 간 격차가 음(-)인 국가와 양(+)인 국가로 구분된다. 전자는 노동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은퇴가 제도적 정년의 시점보다 이른 시점에서 진행되는 경우이며, 후자는 공식적인 정년 시점보다 실질 은퇴가 늦은 시점에서 진행되는 경우이다. 한국과 일본 및 멕시코, 터키, 그리스 등은 후자에 속하는데, 이들 국가의 실질 은퇴연령은 공식 은퇴연령보다 훨씬 높아 정년 이후



주 : 2002~2007년 기간 중 40세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조사된 실질은퇴연령(5년 평균)임.

자료 : Society at a Glance 2009 : OECD Social Indicators

[그림 4-55] OECD 국가의 실질 및 공식은퇴연령 간 차이(2002~2007년)

늦은 기간까지 노동시장에 잔존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들 국가의 실질 은퇴연령과 공식 은퇴연령의 격차는 한국 11.2년, 일본 6.5년, 멕시코 8.0년, 터키 3.5년으로 한국의 고령근로자는 정년 이후 무려 11.2년을 노동시장에 잔존한다. 반면 한국, 일본, 멕시코 등을 제외한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령자의 실질은퇴는 공식은퇴 이전에 이뤄지는데, 특히 오스트리아(-6.1년), 룩셈부르크(-5.8년), 벨기에(-5.4년), 핀란드(-4.8년), 스페인(-3.6년) 등의 국가의 고령자들은 공식 은퇴지점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서 노동시장을 은퇴한다.

2.에서는 노동생명표 작성방식을 이용하여 한국 고령자의 기대노동여명과 은퇴예상연령을 추정하고, OECD 국가들의 은퇴연령 조사 자료(Society at a Glance 2009 : OECD Social Indicators)에서 나타난 한국과 기타 국가들 간의 은퇴연령을 비교하여 보았다. 한국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최근으로 올수록 전체 인구 중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 되었다. 특히 노동생명표를 통해 작성된 은퇴예상 연령은 현재의 연령구간별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대노동수명의 시계열적 추이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고령자들이 더 길게 노동시장에 잔존하는 것이 관찰된다. 완전생명표(2008년)와 경제활동인구조사(2009년)에 의한 노동생명표 추계에 의하면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향후 13.28년간 노동시장에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성은 15.95년, 여성은 10.96년으로 나타난다. 한편 OECD 국가들의 은퇴연령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40세 이상 한국 중·고령자의 공식 은퇴연령이 60세인데 반해 실질 은퇴연령은 69.6세로 공식적 은퇴 이후 평균 9.6년(남성 11.2년, 여성 7.9년)간 노동시장에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결과나 함의하는 바는 한국 고령자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근로소득 의존도 및 낮은 소득대체율, 특유의 문화적 성향(일 중심 문화)을 감안했을 때, 베이비붐 세대가 공식적인 은퇴 이후 꽤 오랜 기간(10년 이상) 노동시장에 잔존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은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노동력 공급 전망

가. 인구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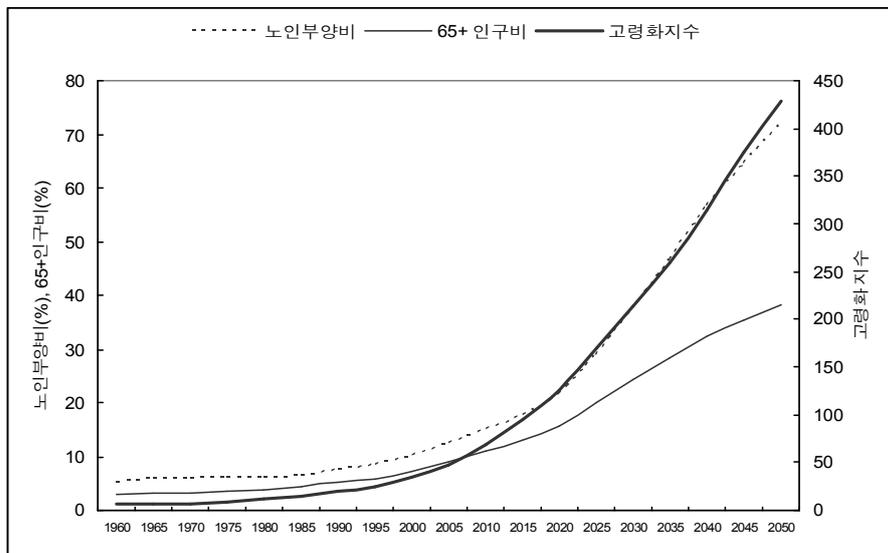
제3절에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1960~2050년)」 자료를 통해 인구고령화 추이 및 생산가능 인구 추이를 간략히 검토하고, 향후 10년, 20년 후 노동력 구조를 전망하고자 한다. 인구고령화는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정의된다. UN은 인구구조에서 고령인구의 비중이 4% 미만인 경우 ‘유년인구국’(幼年人口國), 4%-7%인 경우 ‘성년인구국’(成年人口國), 7% 이상인 경우 ‘노년인구국’(老年人口國)으로 구분하고 있다. 노인인구는 통상적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를 뜻하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전



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 14% 미만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를 ‘고령 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부른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어서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고령사회 인구구조의 중요한 특징은 중위연령의 상승, 생산활동가능 인구의 감소, 노인부양비의 상승, 노령화 지수의 급증,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의 급증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 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고령화 지표로서 흔히 사용되는 것은 65세 이상 인구비중, 고령화지수(Aging Index), 노인부양비(Old Age Dependency Ratio)이다.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며, 고령화지수는 15세 미만의 유년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출된다. 한편 노인부양비는 생산활동가능인구(15세-64세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생산 가능인구 1인이 몇 명의 노인의 부양해야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림 4-56]은 65세 이상 인구비중, 고령화지수, 노인부양비의 고령화 지표이다. 고령화 사회와 고령사회를 규정하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1,960년 2.9%였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1,980년에는 3.8%, 1990년 5.1%였다가 2000년 7.2%로 노인인구 7% 이상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또한 앞으로의 인구전망에 따르면 2010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중



자료 : 「장래인구추계(2010)」

[그림 4-56] 고령화 지표(1960~2050년)

이 11.0%, 2015년에는 12.9%를 기록할 것이며,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14.3%로 14%를 넘어서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050년까지의 전망치를 살펴보면 노인인구의 비중은 고령사회 진입 후 급속히 증가하여 2025년에는 약 20%, 2035년에는 약 30%, 2050년에는 약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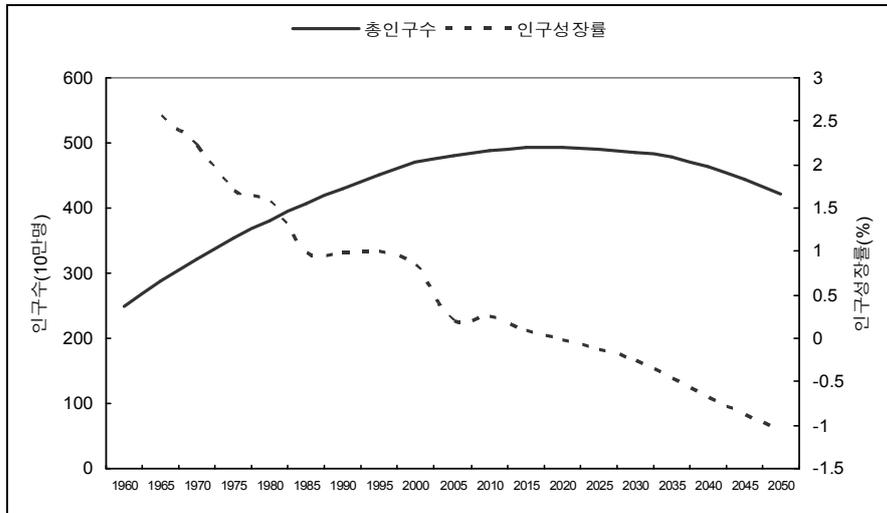
고령화지수(Aging Index)는 1960년 6.9%였던 것이 1970년 7.2%, 1980년 11.2%, 1990년 20.0%에서 2000년 34.3%로 1990년대까지 완만한 증가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 수치가 급속히 상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010년의 고령화지수는 67.7%이며, 2020년에는 125.9%, 2030년 213.8%, 2050년의 고령화지수는 429.3%로 전망된다. 고령화지수가 2000년대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여성의 결혼기피와 만혼, 가임여성의 출산기피 현상으로 15세 미만의 유년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속히 상승하기 때문이다.

노인부양비(Old Age Dependency Ratio)는 생산가능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생산활동인구 1인이 몇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1960년 노인부양비는 5.3%, 1975년 6.0%였던 것이 2000년에는 10.1%, 2020년에는 약 20%, 2030년에는 약 40%, 2050년에는 약 70%로 전망된다. 이 지표를 해석하면 1960년 생산가능 인구 20인이 노인인구 1인을 부양해야 했다면, 200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10인이 노인 1인을 부양하며, 202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5인이 노인인구 1인을, 203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2.5인이 노인인구 1인을, 2050년에 이르러서는 3인의 생산가능 인구가 2인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즉 2050년에 이르러서는 노인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노인 수보다 많은 수의 생산가능 인구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림 4-57]은 1960~2050년까지의 총인구의 변화와 인구성장률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⁴⁸⁾. 한국의 총 인구는 1960년 약 2천5백만 명이었으나 1970년에는 3천만 명을 넘어서 1985년에는 약 4천만 명, 1995년에는 4천5백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의 전망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천만 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이나, 이후 총인구는 점진적인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총인구가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인구성장률은 196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960년대 인구성장률은 2%대에서 점차 감소하며, 1970년대에 들어서는 1%대를 보인다. 이후 년도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인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에는 0%, 2020년에는 -0.02%, 2030년에는 -0.25%, 2050년에는 -1.07%로 2019년 이후 인구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서게 된다.

48) 인구성장률(Population Increase or Growth Rate)은 다음의 공식으로 산출된다.

$$\frac{\text{인구 1000명당 총 증가(출생-사망+이민) 인구수}}{\text{해당년도 연앙인구}} \times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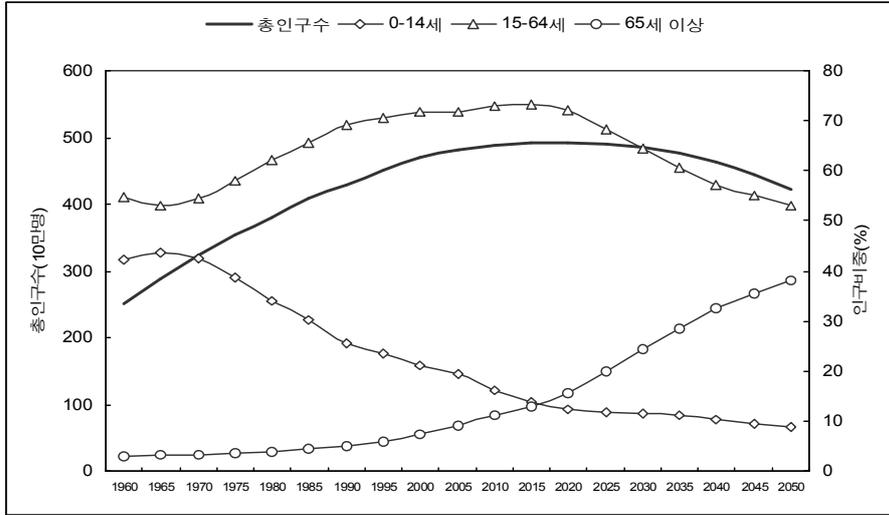


자료 : 「장래인구추계(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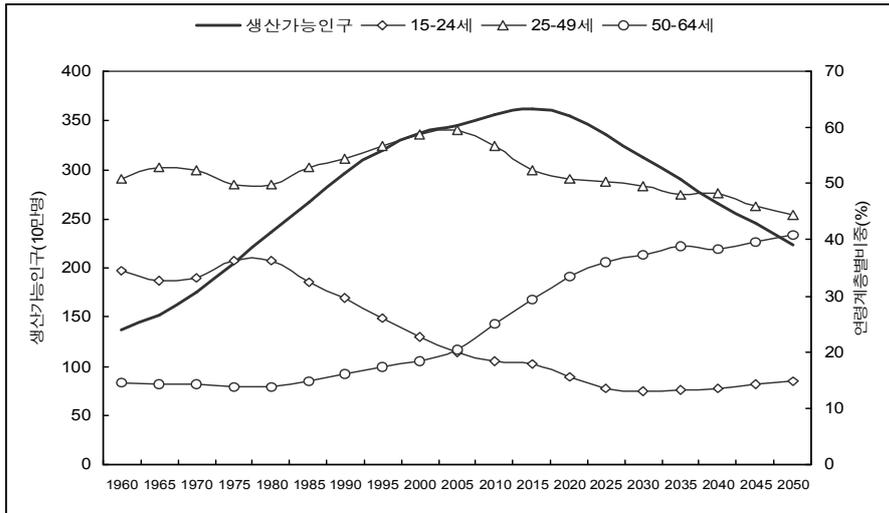
[그림 4-57] 인구구조의 추이와 전망(1960~2050년)

그렇다면 총인구의 연령구성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총인구를 연령집단별로 나누어 인구비중의 증감을 그래프로 도시하였다([그림 4-58]). 0-14세 인구는 유년인구로 법적으로 생산 활동이 불가능한 연령집단이다. 15-64세는 생산 활동 가능인구로 대부분의 생산 활동이 이 연령계층에서 이뤄진다. 65세 이상 인구는 노인인구로 분류되며 부분적인 생산 활동이 가능하지만 정책 편의상 유년인구와 함께 부양인구집단으로 분류된다.

0-14세의 유년인구집단의 비중은 1960년 42.3%, 1965년 43.8%였던 것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0년 34%, 1990년 25.6%, 2000년 21.1%, 2010년 16.2%가 된다. 이후 2040년 이후에는 0-14세 인구의 비중이 10%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소년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출산률 하락과 젊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에 따른 출산기피와 만혼 등의 현상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경제활동의 법적 지위가 주어지는 15-64세 인구는 정책 편의상 생산활동가능인구로 분류된다. 유소년인구는 감소하지만,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1960년 54.8%, 1980년 62.2%, 2000년 71.7%, 2010년 72.9%로 2015년경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후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감소하여 2030년 64.4%, 2040년 57.2%, 2050년 53.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1960년 3% 미만이었으나, 이후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 7.2%, 2010년 11.0%, 2030년 24.3%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40% 가까이 이르게 된다.



[그림 4-58] 인구의 연령구성의 추이와 전망(1960~2050년)



자료 : 「장래인구추계(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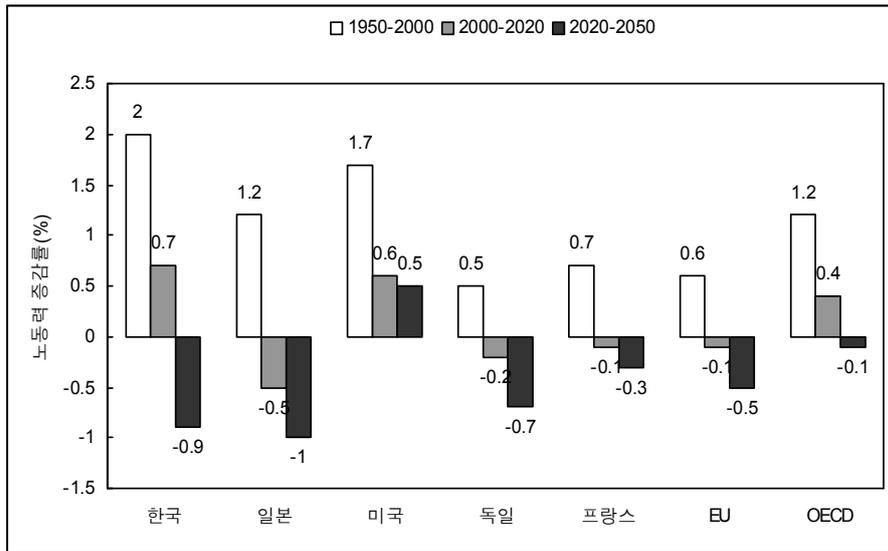
[그림 4-59] 생산가능인구수와 연령구성의 추이와 전망(1960~2050년)



[그림 4-59]는 생산 활동 가능 인구수의 추이와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를 연령 계층별로 나누어 각각의 비중의 변화를 그래프로 도시한 것이다. 생산 가능 인구는 1960년 대략 천3백여만 명이었으며, 이후 인구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 2천4백여만 명, 1990년에는 3천만 명, 2010년에는 3천5백여만 명에 이르게 된다. 생산가능인구수는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추세가 되어 2030년에는 3천여만 명, 2040년에는 2천5백여만 명, 2050년에는 2천여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시장에서 15-24세 인구는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해당하는 청년층인구이며, 25-49세는 가장 경제활동이 왕성한 기간노동력(primary worker)으로, 50-64세 인구는 고령노동인구로 분류된다. 15-24세 청년인구의 비중은 1960년 34.6%, 1970년 33.3%, 1980년 36.3%였으나 이후 생산가능인구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여 1990년 29.6%, 2000년 22.8%, 2010년 18.3%, 2030년에는 13.1%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간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25-49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50.8%였던 것이 이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여 1990년 54.4%, 2000년 58.8%, 2005년 59.6%까지 증가하나 이후 감소추세가 되어 2020년에는 50.9%, 2030년 49.5%, 2050년 44.4%가 된다. 반면 50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1960년 14.5%로 이후 1980년까지 그 비중이 감소하지만, 이후 그 비중이 증가하여 1990년 16.1%, 2000년 18.4%에 이르다가 2010년에는 25%, 2030년에는 37.4%, 2050년에는 40.9%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명 중 4명이 50-64세의 고령인구로 채워질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연령구성의 추이와 전망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중 청년인구의 비중과 25-49세 인구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50-64세)인구의 비중은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노동력 인구의 고령화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의해 초래되는 현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겪어온 과정이다. OECD는 OECD 각국의 향후 50년간 노동력 증감률의 변화를 [그림 4-60]과 같이 예측하였다. 한국은 1950~2000년 기간 중 노동력 증가율 2%로 OECD 각국 중 노동력의 성장이 가장 활발하고 빠르게 이뤄졌다. 또한 2000~2020년에는 0.7%의 증가율을 보여 적어도 2020년까지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인구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전된 일본은 2000~2020년에 -0.5%, 독일은 -0.2%, 프랑스는 -0.1%의 성장률로 이 기간 중 이미 노동력 감소현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020년 이전까지 활발한 노동력 성장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2020-2050년의 노동력 성장률은 -0.9%로 일본(-1.0%) 다음으로 노동력 성장이 급격히 둔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망에 따르면 적어도 2020년까지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은 보이지 않지만, 2020년대 이후에는 노동력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어 뚜렷한 정책적인 변화와 노력이 있지 않는 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 2000~2050년 노동력 성장을 전망하기 위하여 연령집단을 5년 단위로 나누고,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이 2000년 수준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한 것임
 자료 : 한국의 고령화와 고용정책(2005) 한국노동연구원

[그림 4-60] OECD 국가의 노동력 증감률(1950~2050년)

나. 노동력 추계

장래인구추계에 나타나는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이후 감소하며, 생산가능 인구(15세 이상)는 이보다 이른 시기인 2015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노동력 고령화가 초래되는데, OECD가 한국의 2000년의 경제활동참여율을 기준으로 노동력 규모를 전망한 결과, 노동력 감소 현상은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2.에서는 노동력 공급을 전망한 선행 연구(안주엽, 2005; 장지연, 2007)를 토대로 인구추계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노동공급 추이를 전망하고, 이것이 갖는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노동력 공급을 전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15세 이상 민간인구(civilian population)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 이 전망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료는 인구총조사에 기초한 「장래인구추계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이다. 그러나 이 두 조사 자료는 조사대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 인구)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전 연령대에서 다소 간의 인구차이가 발생하는데, 특히 남성 18세~24세 연령구간에서 두 자료 간 차이가 크다. 이는 두 조사의 조사대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데, 인구총조사에는 군인인구가 포함된 반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군인인구는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



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의 전망을 위해서는 인구추계자료에 대한 적절한 보정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성 청년층(18~24세) 생산가능인구수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인구수가 일치하도록 인구분포의 비율을 적용하여 생산가능인구를 보정하였다⁴⁹⁾. 그런 다음 각 시기별 생산가능인구 추계치에 연령별 취업확률을 곱하여 취업인구 전망치를 작성하였는데, 표에 제시된 전망 시기는 2010년에서 2050년까지로 한정하였다⁵⁰⁾.

<표 4-44>와 [그림 4-61]은 인구추계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추계된 취업인구 전망(2010~2050년)이다. 추계된 바에 따르면 2010년 전체 취업인구는 2,335만 명, 2015년에는 2,391만 명, 2020년에는 2,413만 명, 2025년 2,377만 명, 2030년 2,282만 명, 2035년 2,159만 명, 2040년 2,020만 명, 2045년 1,876만 명, 2050년 1,736만 명으로 취업인구는 2020년까지 소폭 증가하나, 2020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에는 2,282만 명, 2040년 2,020만 명, 2050년에는 1,73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인구 전망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10년 1,371만 명, 2020년 1,431만 명, 2030년 1,377만 명, 2050년 1,056만 명이며, 여성은 2010년 963만 명, 2020년 982만 명, 2030년 905만 명, 2050년 680만 명으로 남녀 모두 2020년 이후 노동력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추계된 노동력 인구의 시기별 규모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0년에 비해 2020에 15~49세 연령구간의 취업자 규모는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 연령구간의 취업자 규모는 증가하는 것이 관찰된다. 2020년 대비 2030년 연령구간별 취업자 수는 15~54세 연령구간은 감소하는 반면 55세 이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30년 대비 2050년 연령구간별 취업자 수는 69세 이하에서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70세 이상 고령취업자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44>와 [그림 4-61]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노동력 규모의 감소는 2020년 이후 진행될 것이며, 연령대별 노동력 규모의 증감 추이가 달리 나타난다는 점이다. 노동력 구조의 고령화로 인하여 청·장년층 취업자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층 취업자는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49) 여자의 경우 인구추계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간의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남성 청년층(18~24세)에 대해서만 보정절차를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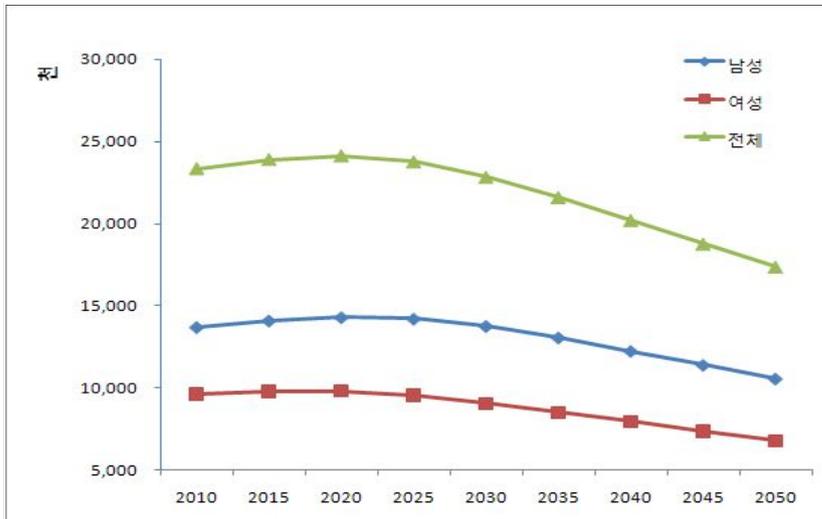
50) 인구추계는 2050년까지 작성되어 있다.

〈표 4-44〉 취업인구 전망(2010~2050년) : 전체

(단위: 천 명)

	취업자수				시기별 증감		
	2010	2020	2030	2050	2020-2010	2030-2020	2050-2030
전체	23,348	24,132	22,824	17,359	783	-1,308	-5,465
15~19세	180	146	111	89	-34	-35	-22
20~24세	1,104	1,113	745	620	9	-367	-126
25~29세	2,505	2,253	1,625	1,182	-253	-627	-444
30~34세	2,696	2,185	2,187	1,282	-511	1	-904
35~39세	3,113	2,693	2,455	1,430	-420	-238	-1,025
40~44세	3,236	2,920	2,370	1,601	-316	-550	-769
45~49세	3,242	3,237	2,806	1,836	-6	-431	-969
50~54세	2,875	3,011	2,731	2,235	136	-280	-496
55~59세	1,827	2,634	2,648	2,127	807	13	-521
60~64세	1,136	1,932	2,038	1,529	795	107	-509
65~69세	695	1,010	1,469	1,312	315	459	-157
70~74세	470	597	1,039	1,040	127	443	419
75~79세	202	275	417	657	73	143	239
80~84세	55	100	136	286	45	36	150
85+	13	28	46	133	15	19	87

주 : 인구추계자료와 경제활동인구자료를 통해서 작성됨



[그림 4-61] 취업인구 전망(2010~2050년) : 전체 및 성별



<표 4-45>는 성별 취업인구의 전망이다. 전체 노동력 규모의 감소는 남녀 모두 동일하게 관찰되는데, 연령구간별 노동력 인구의 증감 패턴에는 성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다. 남성의 경우 15~54세 연령구간의 노동력 규모는 2010~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55세 이상 고령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2050년 이르면 전체 인구 수 감소로 인해 모든 연령구간에서 취업자 규모는 감소한다. 여성의 경우 15~49세 연령구간의 노동력 규모는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50~59세 연령구간은 2010년에 비해 2020년에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한다. 한편 60세 이상 고령 여성 취업자 규모는 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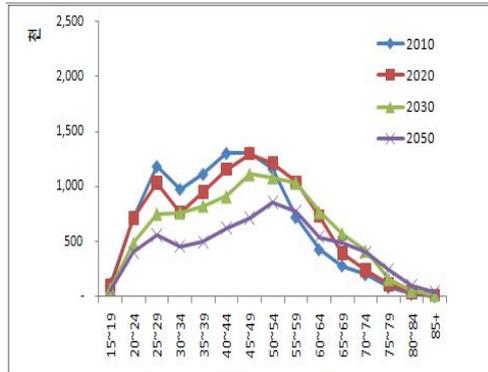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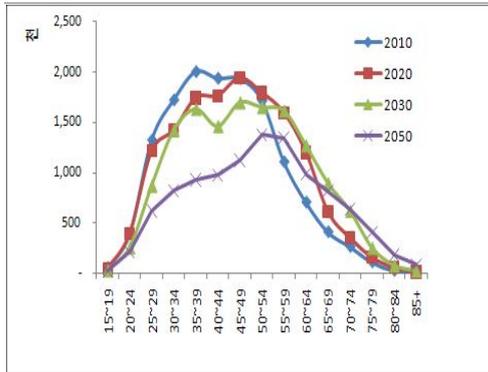
[그림 4-62], [그림 4-63]은 연령구간별 취업인구 추계치이다. 2010년의 노동력 규모 곡선이 가장 상단에 위치하는 반면 2050년 노동력 규모 곡선은 가장 하단에 위치한다. 이는 향후 노동력 규모가 감소한다는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전체적인 노동력 곡선의 최고점이 좌측으로 밀리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는 그만큼 향후 고령취업인구가 증가할 것

<표 4-45> 취업인구 전망(2010~2050년) : 성별

(단위: 천 명)

	남성				여성			
	2010	2020	2030	2050	2010	2020	2030	2050
전체	13,711	14,311	13,774	10,558	9,638	9,822	9,050	6,801
15~19세	57	45	34	27	123	101	77	62
20~24세	391	398	260	214	712	715	485	405
25~29세	1,322	1,216	869	619	1,183	1,036	756	563
30~34세	1,720	1,419	1,420	822	976	766	767	460
35~39세	2,000	1,740	1,628	930	1,113	953	827	500
40~44세	1,934	1,763	1,459	976	1,301	1,157	912	625
45~49세	1,932	1,938	1,693	1,123	1,310	1,299	1,112	714
50~54세	1,714	1,793	1,646	1,378	1,160	1,218	1,084	857
55~59세	1,106	1,594	1,612	1,347	721	1,041	1,036	780
60~64세	706	1,202	1,269	986	430	730	769	543
65~69세	412	613	895	817	283	397	574	495
70~74세	267	354	621	638	203	242	418	402
75~79세	113	162	255	411	89	112	162	246
80~84세	29	58	83	182	26	42	53	105
85+	7	16	29	89	6	11	17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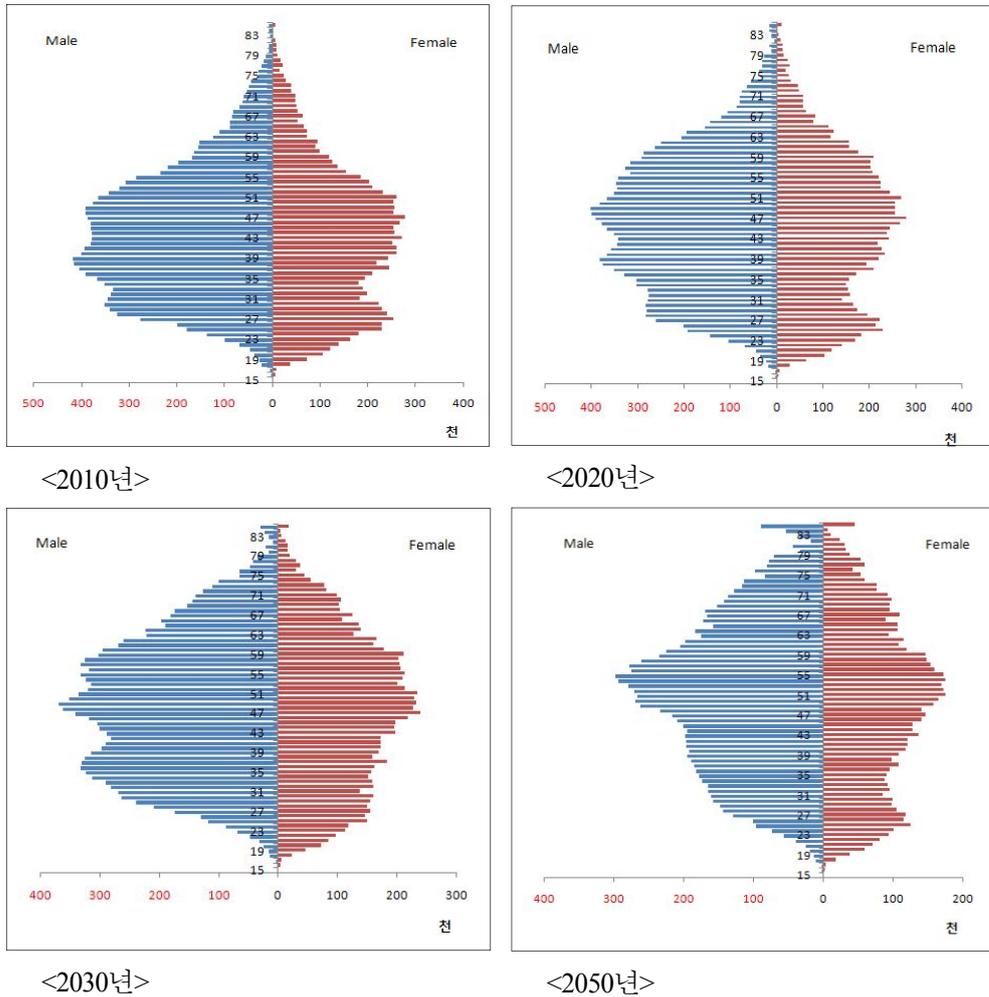
주 : 인구추계자료와 경제활동인구자료를 통해서 작성됨



[그림 4-62] 연령구간별 취업인구 전망 : 남성 [그림 4-63] 연령구간별 취업인구 전망 : 여성

임을 의미한다. 성별 연령구간별 취업인구 추계치를 살펴보면 남성은 전체와 유사한 패턴을 떠나 여성은 30대 초반경 함몰지점이 발견된다. 다만 2030년에는 함몰지점이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이 시기에 30대 초중반 여성의 인구 규모 자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커 이 시기 여성의 낮은 취업확률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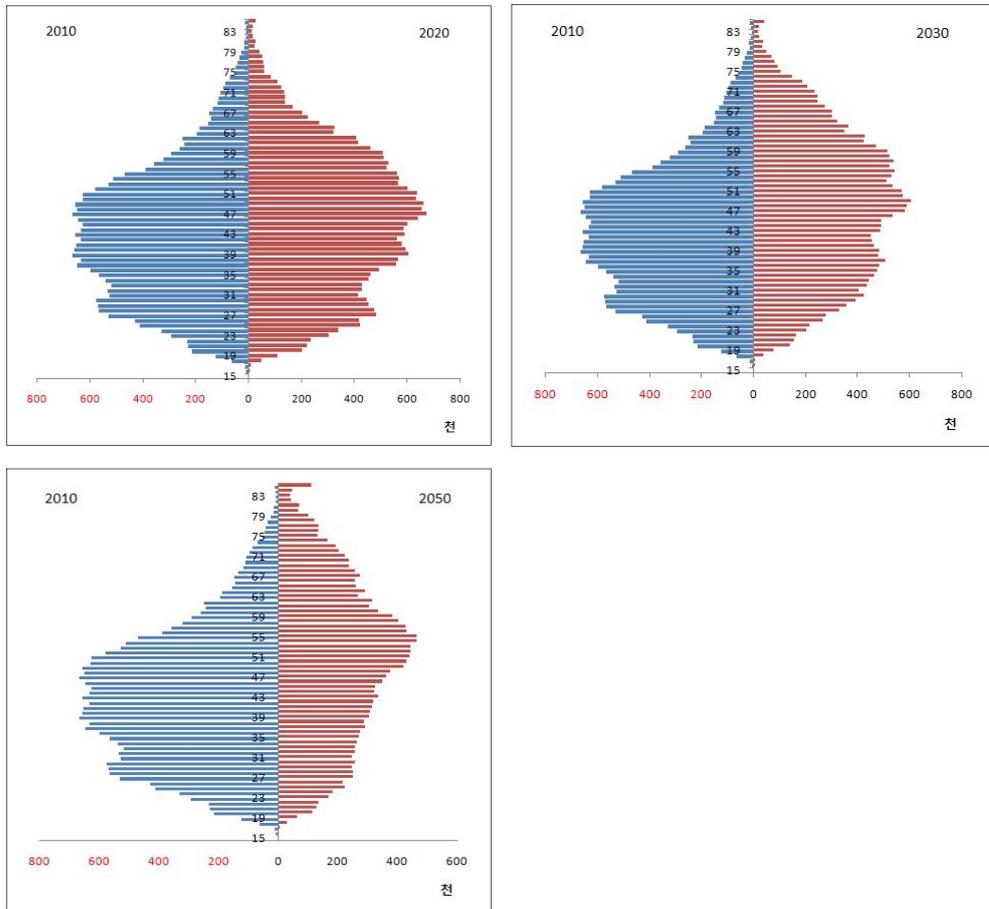
[그림 4-64]는 각 시기별 성별 노동력 구조 피라미드이다. 이 그림을 통해 시기별 노동력 규모 및 베이비붐 세대 및 에코세대의 노동력 규모를 추산할 수 있다. 본고의 노동력 추계에 의하면 2010년 베이비붐 세대 노동력 규모는 531만 명(22.7%), 에코세대는 361만 명(15.5%)이며, 2020년에는 베이비붐 세대 375만 명(15.5%), 에코세대 388만 명(16.1%), 2030년에는 베이비붐 세대 199만 명(8.71%), 에코세대(17.3%)로 전체 노동력 규모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에코세대의 비중은 증가한다. 노동력 전망은 현재의 취업확률을 기초로 추계되었기 때문에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노동력 구조 또한 고령화된다. 따라서 향후 10년 후인 2020년에도 베이비붐 세대 중 약 375만 명은 여전히 노동시장에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되는 고용률은 약 52.7% 수준이다. 각 시기별 성별 노동력 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남녀의 노동력 규모가 각각 1,371만 명(남성), 964만 명(여성), 2020년에는 1,431만 명(남성), 982만 명(여성), 2030년에는 1,377만 명(남성), 905만 명(여성), 2050년에는 1,056만 명(남성), 680만 명(여성)으로 2020년 이후 급격한 노동력 규모 감소가 예상된다.



제4장

주 : 장래인구추계와 경제활동인구자료를 통해 전망된 추계치임
 [그림 4-64] 노동력 구조 전망(2010~2050년) : 성별

[그림 4-65]는 시기별 노동력 추계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의 좌측은 현재(2010년)의 노동력 구조이며, 우측은 각각 2020년, 2030년, 2050년의 예상되는 노동력 추계결과이다. 이 그림을 통해서 각각의 시기의 예상되는 노동력 규모와 현재의 노동력 규모와의 비교가 가능하다. 한국의 인구구조에는 세 개의 봉우리(베이비붐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 에코세대)가 발견되는데, 2010년의 노동력 구조 역시 이러한 패턴이 반영된다. 2020년의 노동력 추계 결과를 보면 이 시기 베이비붐 세대는 어느 정도 노동시장에서 퇴장이 이뤄지기 때문에 인구급증의 봉우리는 관찰되지 않으며, 완만한 곡선 형태를 보



주 : 장래인구추계 경제활동인구자료를 통해 전망된 추계치 임

[그림 4-65] 노동력 구조 전망(2010~2050) : 시기별

인다. 반면 2차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세대는 기간 노동력으로 이 연령대의 규모가 가장 두터울 것으로 추계된다. [그림 4-65] 에서 좌우가 가장 대비되는 그림은 2010년과 2050년을 대비시킨 마지막 그림이다. 이 피라미드에 의하면 2050년에는 40,50대 연령이 가장 두터운 노동력 구조이다. 즉 이시기에 주력 노동력이 40,50대 취업자에 의해 구성된다는 의미인데, 향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을 감안한다면 고령인력 및 여성인력의 활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4. 소득분석

가. 소득과 소비: 생애주기 가설

앞서 1~3절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효과를 주로 고용측면에서 조망하여 보았다. 4절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통해 은퇴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인구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시화되면서 문제시 되는 것은 고령가구의 근로소득의 감소이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우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으로 근로소득의 상실은 개인과 가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절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과 소비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함수의 추정을 통해 소득의 은퇴효과 및 소비함수 추정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노후소득의 원천은 근로소득, 자산소득(재산소득, 예금, 사적연금 등), 사적이전(자녀지원 등), 공적이전(공적연금, 생활보호 등) 등으로 구분되는데, 퇴직 시점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 소득 감소 현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4-46〉 소득의 정의

통계청		LIS(또는 OECD)					
소 득	경 상 소 득	근로소득	compensation of employees	1차 소득 (primary income)	시장소득 (market income: MI)	총소득 (gross income: GI)	가처분 소득 (disposable income: DI)
		사업 및 부업소득	gross self-employment income				
		재산소득	realized property income				
		이 전 소 득	사 적	occupational pensions + other cash income			
	공 적		social insurance cash transfers + social assistance				
지 출	비 소 비 지 출	공적연금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사회보험	(사회보장부담금 : 공적연금, 건강·고용보험 등)				
		조 세	direct taxes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기타 비경상지출					

자료 : 여유진 외(2005)



소비 수준이 높아진 베이비붐 세대들이 소유한 자산의 불균형(낮은 금융자산과 높은 실물자산) 상태에서 자산소득 만으로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1980년 후반 이후 고도 성장기에 소득이 급격히 증대되었으나, 소비수준 역시 높아지면서 부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대부분이 부동산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주택가격 하락 현상이 심화되면 자산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박덕배, 2009).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대비 보유자산이 적어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2006년 기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대부분 포함된 40~49세 가구주의 평균 순자산은 약 3억 260만원이며, 부동산은 2억 2,597만원, 저축액은 6,744만 원, 자동차 등 기타자산이 919만 원 정도이며 부채는 4,943만 원 정도이다. 6,748만원의 퇴직금으로 부채를 탕감한다고 볼 때, 금융자산은 약 8,549만 원대로 은퇴 전 가구당 평균 연봉 4,462만 원의 1.9 배에 불과하다. 또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가치 하락이 우려된다. 통계청은 일본의 경우, 35~45세 인구 감소와 단카이 세대 은퇴가 시작된 1990년부터,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35~54세 인구가 감소한 2007년부터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통계청은 한국의 경우 주택을 주로 구입하는 35~54세 인구가 감소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는 2011년 이후에 주택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전망하였다. 따라서 임금소득이 감소하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부동산 가격 하락세까지 겹치게 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철선, 2009).

〈표 4-47〉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현황 : 2006년

(단위 : 만원, %)

구 분	40~44세		45~49세		40~49세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자산	29,298.8	100.0	31,261.1	100.0	30,260.2	100.0
저축액	6,768.5	23.1	6,719.0	21.5	6,744.3	22.3
부동산	21,630.4	73.8	23,603.4	75.5	22,597.1	74.7
기타(자동차 등)	899.8	3.1	938.8	3.0	918.9	3.0
부채	5,267.5	18.0	4,605.9	14.7	4,943.4	16.3

자료 : 통계청, 가구주 연령계층별 자산현황, 2009

출처 : 이철선(2009)

인구의 연령구성 변화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이론적 기초가 되는 것이 생애 주기 가설이다. 모딜리아니(F. Modigliani) 등이 1950~1970년대에 창안, 정교화한 이 가설은 개인의 연령에 따른 소비 및 저축 패턴은 물론 경제 전체의 연령대별 인구구성 변화로 인한 저축률 및 투자율 변화까지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실증 분석 결과는 연구자에 따라 크게 엇갈리기도 하지만, 대체로 생애 주기 가설이 다양한 경제 주체의 소비 및 저축 패턴을 분석하고 규명하는데 유효한 분석틀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라이프 사이클 가설을 모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세대 g 에 속한 가구가 가구원의 은퇴할 연령 N 까지 일정한 소득 y_g 를 취득하고, T 년 동안 생존하며,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자율과 시간선호율은 0이며, 최적소비는 $C = Hg / T$ 로 일정하다고 하면, 은퇴할 때까지 연령 a 인 개인의 부는 다음과 같이 증가한다.

$$W_{a,g} = \frac{a}{N} \left(1 - \frac{N}{T}\right) H_g \quad \text{for } a = 0, \dots, N \quad (4-1)$$

그리고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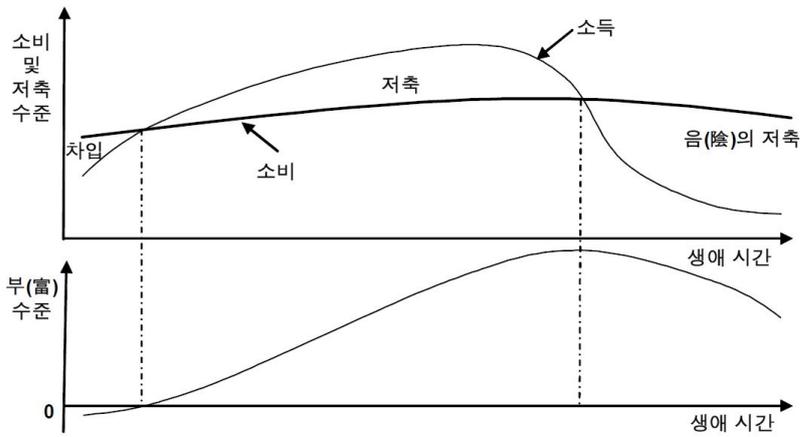
$$W_{a,g} = \left(1 - \frac{N+a}{T}\right) H_g \quad \text{for } a = 0, \dots, (T-N) \quad (4-2)$$

이 연령-부의 축적과정은 낙타등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생애에 걸친 자원과 독립적이다.

$$W_{a,g} = f(a) H_g \quad (4-3)$$

여기서 $f(a)$ 는 연령에 대해서 오목함수이다. 식 (4-3)은 부의 축적과정(profile)의 형태가 자원에 상관없이 연령에만 의존하며, 생애 자원은 연령에 상관없이 축적과정의 위치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 소득이 유일한 수입원이며 금리는 0%라고 가정.

출처 : 이철용(2006)

[그림 4-66] 생애주기 가설에 따른 합리적 개인의 소비와 저축, 부의 시간경로

나. 소득분석 및 소비함수 추정

안도-모딜리아니(Ando-Modigliani)의 생애주기 가설은 개인의 일생동안에 걸친 소비와 저축의 패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소비는 일생동안 안정적 추세를 보이는데 비해 소득은 청년기와 노년기에 매우 낮고, 장년기에는 높으므로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음(-)의 저축이 장년기에는 양(+)-의 저축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는 개인들은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효용증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비함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C_t = aY_t + bA_t \tag{4-4}$$

단, Y_t 는 t 기의 노동소득, A_t 는 t 기의 자산소득
 a와 b는 각각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한계소비 성향

단기에는 자산소득이 A_t 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단기 소비함수는 소비 축을 통과하는 우상향의 직선이고, 장기에는 자산소득이 노동 소득에 비례해서 증가하므로 장기 소비함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를 띤다.



‘생애주기 가설’이 이처럼 소비함수의 경험적인 사실들을 만족스럽게 설명해 주는 것은 물론 단기 소득뿐 아니라 미래에 기대되는 소득과 자산도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준다. 이 가설에서는 첫째, 소비의 결정요인으로 다 기간 소비자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단기 소득 개념이 아닌 장기 소득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소득이 장기 평균소득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세율의 변화보다 지속적인 조세율의 변화가 소비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자산 소득이 소비수준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일생에 걸친 소비 형태는 소득 형태보다 안정적이다. 다섯째, 저축은 소득이 낮은 초기에는 아주 작거나 심지어 음(-)이고 소득이 최고가 되는 장년에는 최고가 된다. 여섯째, 소비가 자산 소득 크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금융정책은 민간의 자산변화를 통하여 소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이론에 의하면 국민저축은 한 나라의 연령별 인구분포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생애주기 가설에 의하면 한 경제 전체의 저축률은 인구의 연령구조와 세대 간 소득성장률의 함수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생애주기 가설이 주로 저축률의 장기적 결정에 대한 이론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은 ‘항상 소득가설’이다. 항상 소득가설은 기간 소비자선택모형을 이용한 미시 경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최적행위로부터 합리적인 소비함수를 도출한다. 이 가설에서는 실제소득을 항상 소득과 임시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항상 소득(permanent income)이란 앞으로 평생 동안 벌어들일 것으로 예견되는 평균가처분소득이라 할 수 있고, 임시소득(transitory income)은 미리 예견할 수 없는 일시적인 가처분 소득이다. 물론 실제소득을 항상 소득과 임시소득으로 분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항상 소득이 소비함수의 경험적인 사실들을 만족스럽게 설명한다.

이와 같은 생애주기 가설과 항상 소득 저축률의 결정에 대하여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두 이론 모두 개별소비자의 최적소비행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생애주기 가설은 경제 내의 개인들 간의 차이점, 특히 생애주기상의 위치에 따른 차이점을 중요시하므로 인구의 연령구조가 저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강조하는 반면, 항상 소득 가설은 일반적으로 경제 내의 소비를 한 대표적인 개인의 소비로 나타냄으로써 개인들 간의 차이를 무시한다. 한편 생애주기가설은 저축률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는 반면, 항상 소득은 단기적으로 저축률의 변동이 소득 성장률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다(고희채, 2005).

소비생활은 경제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경제주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실현 과정이 바로 소비생활이기 때문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든 민간소비가 국민소득의 약 2/3를 차지할 정도로 다른 부분보다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면에서도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거시 시계열을 이용하여 소비지

출의 추세나 변동을 살펴보는 것이 나라경제 전체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시계열을 이용하여 소비함수를 추정하고, 추세 혹은 변동요인 등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가계의 소비지출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자료를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패널자료는 시계열과 횡단면의 특성을 모두 갖는 유용한 특성이 있다.

한편으로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자료를 이용할 때 한계소비성향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시계열 자료에서 구한 MPC(한계소비성향)가 횡단면 자료에서 추정된 MPC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Bunting(1989)은 이러한 현상을 ‘소비함수의 역설(consumption function Paradox)’이라고 명명하였다. Moulaert and De-Canniere(1988)는 벨기에의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사이에 MPC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살펴보았으나, 소비함수의 역설을 설명하지는 못하였다(안병철, 2001).

가구의 소비행태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서 조건이라고 하면 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변수뿐 아니라 그렇지 못한 특성까지 포괄한다. 가령 가구주의 연령이나 주거지역의 차이 등의 요인에 따라 소비지출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다,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지위의 변화, 소득 수준의 증가 혹은 가족 구성원의 증가 등의 요인에 따라 소비지출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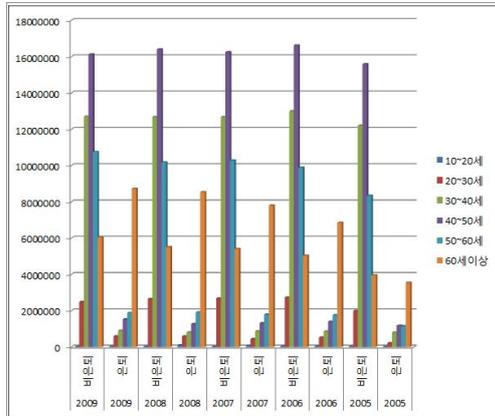
그렇다면 소득에서 은퇴효과는 어떠하며, 소비는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에 어떻게 반응 하는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2003~2009년) 자료를 통해 기초통계량을 검토하고, 소득에 대한 은퇴효과 및 소비함수를 추정해 보았다. 우선 가구주를 10세 단위로 구분하여 연령별 가구주 취업자 규모를 파악하였다. <표 4-48>에 의하면 60세 이상 중 미취업자의 비중이 2005년 47%에서 2009년 59%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48> 연령별 취업자 규모(2005년,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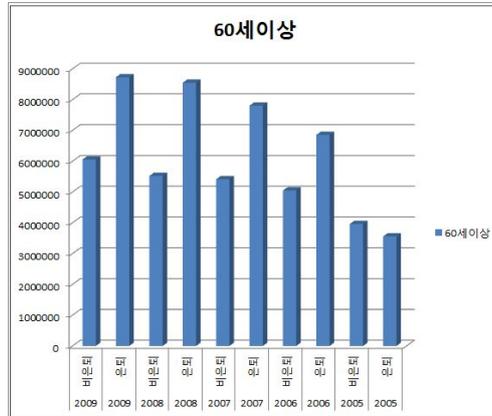
(명, %)

2005년	40~50세	50~60세	60세 이상
취업자	15,590(92.9)	8,645(88.2)	3,959(52.7)
미취업자	1,187(7.1)	1,160(11.8)	3,556(47.3)
계	16,777(100)	9,805(100)	7,515(100)
2009년	40~50세	50~60세	60세 이상
취업자	16,130(91.3)	10,760(85.1)	6,056(41.0)
미취업자	1,534(8.7)	1,887(14.9)	8,727(59.0)
계	17,664(100)	12,647(100)	14,783(100)

주 : 가구주의 취업여부임



자료 : 「가계동향조사(2005~2009년)」 원자료
 [그림 4-67] 연령별 은퇴자 규모



자료 : 「가계동향조사(2005~2009년)」 원자료
 [그림 4-68] 60세 이상 은퇴자 규모



[그림 4-67]은 연령별 은퇴자 규모⁵¹⁾이고, [그림 4-68]은 60세 이상 은퇴자 규모이다. [그림 4-37]을 보면 2006년 이후 은퇴자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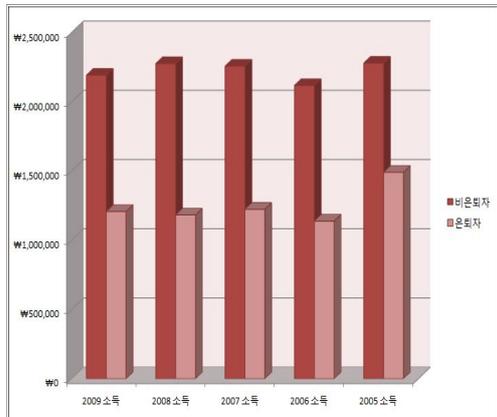
<표 4-49>은 연도별 60세 이상 은퇴자 및 비은퇴자의 평균 소득과 차이를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60세 이상 은퇴자의 소득은 2005년 149만 원, 2006년 114만 원, 2007년 122만 원, 2009년 121만 원으로 2005년에 비해 2006년 이후 60세 이상 은퇴자의 가구소득은 매우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은퇴자와 비은퇴자의 소득 차이를 살펴보면 2005년 79만 원, 2007년 103만 원, 2009년 98만 원으로 2005년에 비해 평균 소득의 격차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4-49> 연도별 60세 이상 은퇴자, 비은퇴자의 소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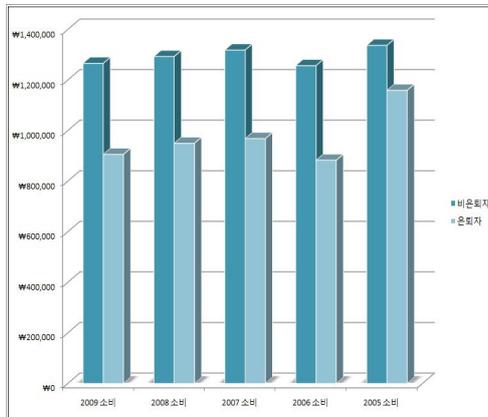
(단위: 만 원)

연도	비은퇴자(A)	은퇴자(B)	소득 차이(A-B)
2009 소득	219	121	98
2008 소득	227	118	109
2007 소득	226	122	103
2006 소득	212	114	98
2005 소득	228	149	79

51) 가계동향자료 분석에서 은퇴자는 60세 이상 가구주이면서 미취업자로 한정하였다.



자료 : 「가계동향조사(2005~2009년)」 원자료
[그림 4-69] 연도별 소득



자료 : 「가계동향조사(2005~2009년)」 원자료
[그림 4-70] 연도별 소비

<표 4-50> 연도별 60세 이상 은퇴자, 비은퇴자의 소비 분석

(단위 : 만 원)

연도	비은퇴자(A)	은퇴자(B)	A-B
2009 소비	127	91	36
2008 소비	129	95	34
2007 소비	132	97	35
2006 소비	126	88	37
2005 소비	134	115	18

<표 4-50>은 연도별 60세 이상 은퇴자 및 비은퇴자의 평균 소비와 차이를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60세 이상 은퇴자의 소비는 2005년 115만 원, 2006년 88만 원, 2007년 97만 원, 2009년 91만 원으로 2005년에 비해 2006년 이후 60세 이상 은퇴자의 가구소비는 매우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은퇴자와 비은퇴자의 소비 차이를 살펴보면 2005년 18만 원, 2007년 35만 원, 2009년 36만 원으로 2005년에 비해 평균 소비의 격차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소득을 종속변수로 하고, 소득에 대한 설명변인으로 소비, 취업여부를 더미변수화한 선형회귀함수 추정을 통해 소득에 대한 은퇴효과를 추정하여 보았다⁵²⁾. 이

52) 이 모형에서 60세 이상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취업여부가 곧 은퇴여부를 의미한다.

모형의 수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text{소득}_i = \beta_0 \text{소비}_i + \beta_1 \text{취업여부}_i + \varepsilon_i \quad (4-5)$$

<표 4-51>은 가계동향조사의 연도별 60세 이상의 취업, 미취업자의 은퇴효과 선형 회귀분석 결과로 모수의 추정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수의 값은 취업여부는 -, 소비는 +로, 소득은 취업여부와는 부적관계를 갖는 반면, 소비와는 정적관계를 갖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업여부의 모수 추정값의 변화이다. 취업여부가 고령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계수값의 변화를 보면 2005년 이후 최근으로 올수록 소득에 미치는 은퇴효과가 커져왔음을 알 수 있다. 즉 고령자의 은퇴여부는 고령가구주 가구의 총소득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 영향력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 심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제4장



<표 4-51> 연도별 60세 이상 취업자, 미취업자의 은퇴효과 추정

연도	절편	취업여부 모수 추정값	소비의 모수 추정값
2009	2,108,088	-748,030***	0.6563***
2008	1,978,898	-801,594***	0.8489***
2007	1,885,486	-738,375***	0.8414***
2006	1,552,384	-624,713***	0.9460***
2005	1,750,617	-634,017***	0.8690***

주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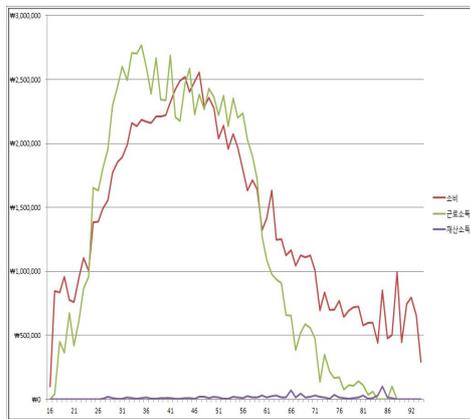
소비함수의 추정을 위해서는 한 가구의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을 시간대별로 추적하여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야 한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소비함수의 추정은 다음과 같다.

$$C_t = aY_t + bA_t \quad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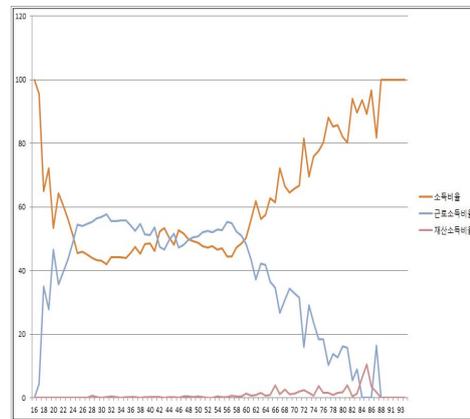
단, Y_t 는 t 기의 노동소득, A_t 는 t 기의 자산소득
a와 b는 각각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한계소비 성향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서는 가구에 따른 패널화가 되어 있지 않아 시간대별 추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분석에서는 횡단면 자료를 연도별로 60세 이상의 미취업자를 은퇴자로 가정하여 모형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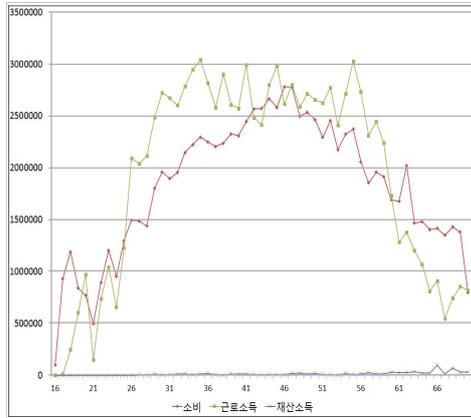
우선 근로소득과 재산 소득이 소득에 미치는 규모를 분석해보았다. [그림 4-71]은 2009년 가계동향자료에서 나타나는 소비와 근로소득, 재산소득을 각 세별로 그린 그래프이다. 25세 이전에는 소비가 근로소득보다 크게 나타나다가 25세 이후가 되면 근로소득의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면서 60세 이후가 되면 근로소득은 감소하며 소비의 비중이 커진다. 재산 소득의 비율은 26세 이후부터 근소하게 증가한다. [그림 4-72]는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변화의 비율을 '100'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그래프이다. 연령별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교차되는 지점에 대해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그림 4-73]과 [그림 4-74]는 소비와 근로, 재산소득을 남녀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이다.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소비와 근로소득 간의 증가와 감소가 완만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소비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반면 근로소득은 여성이 가사 및 육아로 인해 사회에서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시점인 33살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상으로는 연령이 33세에서 34세로 바뀌면서 근로소득이 평균 204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한다. 또한 전반적으로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보다 근로소득의 평균이 연령대별로 격차가 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소비에 대비한 근로소득의 보전이 큰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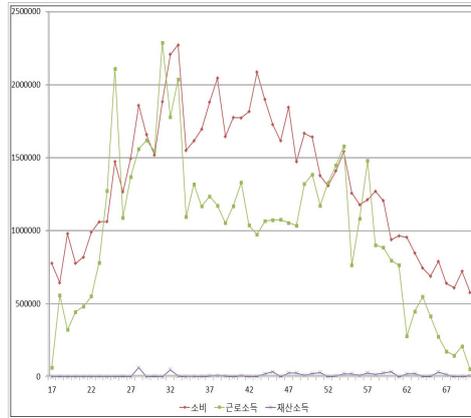
자료 : 「가계동향조사(2009년)」 원자료
[그림 4-71] 소비와 근로 및 재산 소득



자료 : 「가계동향조사(2009년)」 원자료
[그림 4-72] 근로 및 재산 소득의 비중



자료 : 「가계동향조사(2009년)」 원자료
 [그림 4-73] 소비와 근로 및 재산 소득(남자)



자료 : 「가계동향조사(2009년)」 원자료
 [그림 4-74] 소비와 근로 및 재산 소득(여자)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소비함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자료는 가계동향조사(2009년)의 소득 항목 중 재산소득, 근로소득을 사용하였다. 소비함수의 추정은 소비의 결정이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한계소비성향에 따라 결정된다는 데에 기초하며, 수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text{소비}_i = \beta_0 \text{근로소득}_i + \beta_1 \text{재산소득}_i + \varepsilon_i \quad (4-7)$$

<표 4-52>는 위 모형의 추정결과이다. 모든 연령별 모형에서 모수의 추정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소득항목별 계수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표 4-52> 연령 집단별 소비와 근로소득 및 재산소득 추정 I

구분	소비의 절편	근로소득	재산소득
33세 이하	1,225,055	0.24***	0.45**
34~45세	1,761,666	0.21***	0.55***
베이비붐	1,636,137	0.27***	0.33**
55~59세	1,237,754	0.25***	0.53**
60세 이상	824,535	0.38***	0.46***

주 : ***p < .001, **<.01

60세 이상이 가장 높으며, 재산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작게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가구의 소비수준이 근로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가구주 가구일수록 근로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모형은 가구원수, 가구주 학력 등이 통제되지 않은 모형으로 통제변인을 포함한 추가적인 모형의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의 모형(4.8)은 소득(근로소득 및 재산소득) 및 소비에 로그값을 취하고, 가구원수, 가구주 학력, 입주형태를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여 소비함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통제변인(가구원수, 가구주 학력, 입주형태)의 투입으로 전반적으로 계수 추정값이 작아진 것이 확인된다. 우선 근로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근로소득의 계수값이 유의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소득 계수값이 모든 연령집단 중 가장 커 소비에 미치는 소득수준의 영향력이 타 연령집단에 비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재산소득의 영향력은 가구주 45세 이하 연령집단에게만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log(\text{소비}_i) = \beta_0 \log(\text{근로소득}_i) + \beta_1 \log(\text{재산소득}_i) + \beta_2 \text{가구원수}_i + \beta_3 \text{가구주학력}_i + \beta_4 \text{입주형태}_i + \varepsilon_i \quad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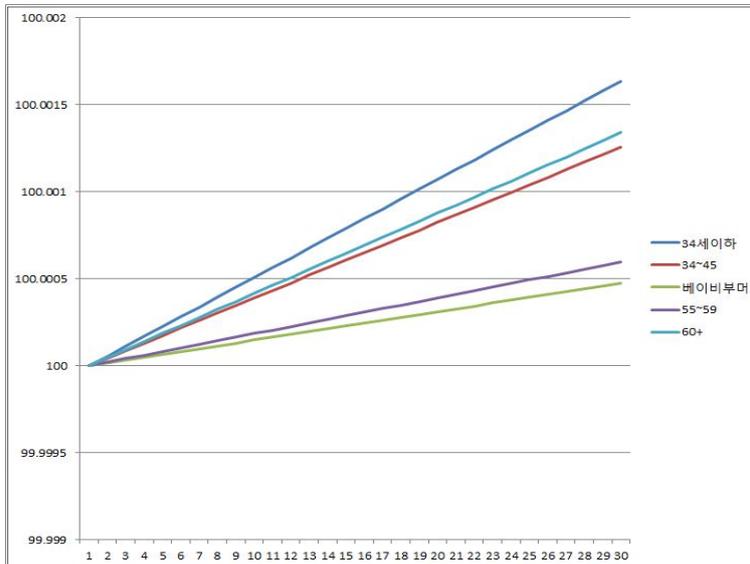
〈표 4-53〉 연령 집단별 소비와 근로소득 및 재산소득 추정 II

구분	소비의 절편	근로소득	재산소득	가구원수	가구주학력	입주형태
33세 이하	11.069	0.193**	0.0266**	0.068**	0.166**	0.094
34~45세	11.429	0.176**	0.016**	0.118**	0.068**	0.087**
베이비붐	9.756	0.279**	0.015	0.177**	0.139**	-0.058
55~59세	10.148	0.192**	0.007	0.331**	0.170	0.499**
60세 이상	11.123	0.143**	0.009	0.263**	0.232**	0.177

주 : ***p < .001, **<.01

[그림 4-75]는 추정값을 통해 임의의 시점별로 재구성한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동일한 절편을 가정했을 때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한 단계 증가할 때 소비의 증가가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소비가 동일한 절편을 가진다고 가정했을 때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한 단계 증가할 때 소비함수의 증가가 가장 더디게 나왔으며 “34세 이하”의 소비함수가 가장 크게 추정되었음

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증가율이 바로 이후 세대인 55~59세보다 더 낮



주 : 비율로 재구성함

[그림 4-75] 연령 계급별 소비함수 추정 값

게 추정된 것은 급격한 은퇴로 인해 소비가 일시적으로 감소된 것이 아닌가 짐작해본다. 60세 이상의 소비가 34~45세의 소비보다 높게 추정된 것은 그만큼 소비해야 할 부분이 34~45세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제5절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통계청의 인구, 고용, 소득 분야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및 특성을 제시하고, 향후 이들의 은퇴가 노동시장과 소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의 개념정의 및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서구사회의 경우 세대문제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연구가 오랜 기간 축적되어 왔으나,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급격한 사회변동 시기의 세대담론 논쟁과 언론 보도와 같은 피상적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세대 문제를 학문적으로 최초로 체계화 시킨 학자는 만하임

(Mannheim, 1952)이다. 그가 밝힌 세대개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만하임은 동일시기 출생자라는 생물학적 조건은 세대 형성의 기본요인이며,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동일시기 출생이라는 ‘생물학적 세대’는 세대 성립의 기본요건이 되며, 동일시기 출생자들이 동질적인 문화·역사적 경험을 통해 공동체로서 강한 연대감을 형성하였을 때 비로소 사회변동 세력인 ‘실제세대’로 발전하게 된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세대’와 ‘코호트’, ‘연령집단’ 등의 개념은 혼재되어 사용된다. ‘코호트(cohort)’란 동일시기 출생자로 정의되며, 주로 동년배 집단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한편 ‘연령집단(age group)’은 특정 생애 주기단계에 있는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연령계층(age strata)’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렇듯 세대는 코호트나 연령집단과는 다른 개념이며, 동일세대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 역사적 동질성 및 사회변동 세력으로서의 일체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같은 논의를 따르자면 한국사회에서는 419세대나 386세대 등이 만하임의 세대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변동요인으로서의 사회·역사적 세대가 아닌 인구학적 세대이다. 2010년 인구추계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구조에는 세 개의 봉우리(베이비붐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 에코세대)가 발견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출생 시기를 각각 1955~1963년, 1969~1975년, 1978~1985년으로 정의하고, 연구전반의 주요 분석집단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와 관련된 해외 통계청의 공표 사례 및 연구경향을 검토하였다. 전후 다산(多産)시기 출생자를 의미하는 베이비붐 현상은 비단 한국의 사례가 아닌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 전쟁을 겪은 해외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46~1964년 출생자로 인구규모는 77,980만 명(26.0%)으로 전체 인구의 1/4 수준이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1947~1949년 출생자로 정의되며, 인구규모는 67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3% 수준이며, 이 시기 합계출산율(TFR)은 무려 4.0에 이른다. 미국 센서스국은 2006년도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베이비붐 세대의 주요 특성을 공표하였다. 또한 미국에서의 베이비붐 세대에 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개진되었다. 이 연구들의 관심 또한 다양한데, 이들의 소비 및 문화 패턴, 노동시장 진입과 은퇴의 영향력, 연금 등 자원배분과 관련된 세대 간 형평성 연구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연구가 논의되었다. 한편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조망(眺望)받게 된 것은 이들이 기업의 정년(만60세)을 맞아 퇴직하게 되면서 숙련노동자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이며, 일본 노동후생성은 각종 자료를 통해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특성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인구, 고용, 소득 관련 원자료를 통해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을 제시하였다. 인구추계자료에 따르면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는 713만 명(남성 359만 명, 여성 3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한다. 고령화 지수의 증감 추이에서 세 인

구집단(베이비붐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 에코세대)의 고령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들 인구집단이 65세이 이르는 시점인 2020년, 2030년, 2044년에 노인부양비는 급격하게 증가한다. 인구총조사 자료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지역별 분포를 파악한 결과 울산, 인천, 부산 등 광역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개인 특성을 간략하게 검토한 바, 이들의 평균 초혼연령은 25.7세이고, 평균자녀수는 2.0명이며,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자는 28.5%, 2세대의 비중은 73.9%로 나타난다(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률은 전체 74.6%, 남성 88.5%, 여성 60.3%로 베이비붐 세대의 4명 중 3명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의 취업형태 구성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7:3 수준이지만, 상용직은 전체 취업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에코세대는 상용직의 비중이 전체 취업자 중 64%에 이르며,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0% 이하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 베이비붐 세대의 직·산업 분포를 대분류 수준에서 검토한 결과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건설업이며,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직종은 의회임원 및 고위임직원, 서비스 판매직, 기능원 및 장치·기계조작 조립원으로 나타난다. 한편 에코세대는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부문에 높은 비중을 보인다(고용).

가계동향조사(2009년) 자료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 및 소비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53'만 원으로 나타나며, 소득구성 항목 중 근로소득의 비중(65.33%)이 가장 높다. 한편 소비구성은 교육비의 비중(11.84%)이 가장 높는데, 이는 이들의 자녀세대의 대학재학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항목별 구성은 소비지출 76.2%, 비소비 지출은 23.8%로 소비항목별 구성에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넷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효과를 고용과 소득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노동력의 연령별 구조를 살펴본 결과, 인구구조와 마찬가지로 세 개의 봉우리가 발견된다. 또한 노동력 구조의 시계열 패턴을 검토한 결과, 서로 다른 시점 간 노동력 구조의 형태는 거의 유사한 형태로 상향 이동하여 노동력 규모의 결정에 '인구요인'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노동력 규모에서 세대별 인구가 차지하는 규모 및 비중은 베이비붐 세대는 540여만 명(23%)이며, 에코세대는 340여만 명(14%)인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력 구조는 부문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대체로 중·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은 업종들이다. 세대 간 일자리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직·산업 분류를 통해 세대별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직·산업은 주로 화이트 칼라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관리직 영역 및 제조업의 탈기술 부문, 육상운송업, 일부 서비스업 부문으로 이원화되어 분포됨



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에코세대는 관리직의 비중은 적으나, 전문직 영역의 신산업 부문, 교육서비스업, 친기술 서비스업 부문 등에 높은 비중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가계동향조사 자료(2005~2009년)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 및 고령은퇴자의 소득 및 소비합수 추정을 하였다. 분석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은퇴자들의 소득과 소비 수준은 감소한 한편 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은퇴효과는 커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고령자들이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반추해봤을 때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소득에 대한 은퇴효과가 최근으로 올수록 심화되어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다면 현재 베이비붐 세대는 어느 시점까지 노동시장에 잔존할 것이며, 향후 노동력 공급 전망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이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노동생명표’를 작성하여, 이들의 예상 은퇴시점을 제시하고, 향후 노동력 공급 추이를 전망하여 보았다. 생명표(2008년)과 경제활동인구조사(2009년) 자료를 통해 노동생명표를 작성한 결과, 한국 베이비붐 세대(47~55세)는 향후 평균 13.3년간 노동시장에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평균 은퇴예상 연령은 64.4세로 나타난다. 기대노동여명과 은퇴예상 연령은 부문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의 은퇴시점은 67세, 여성은 62세, 임금남성은 58.4세, 임금여성은 56.3세에 노동시장을 은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구추계자료(2010~2050년)와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자료를 통해 향후 노동력 공급 추이를 전망하여 보았다. 전망 결과 한국의 노동력 규모는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지만, 이후 노동력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시기별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력 규모는 2010년 531만 명(22.7%), 2020년 375만 명(15.5%), 2030년 199만 명(8.7%)로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노동력 규모 역시 고령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정책적 제언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인구고령화는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어왔다. 인구고령화는 사회경제 다방면에 걸쳐 큰 파급효과를 갖는데,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은퇴 또한 인구고령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본 연구는 특히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인구구조에는 세 개의 인구급증 봉우리(베이비붐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 에코세대)가 존재하며, 이들 세 세대 간 간극이 크지 않음에 유념해야 한다. 즉 노동시장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문제가 된다면, 이들의 은퇴 이후 또 다른 인구거대 집단의 퇴직에 바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은 향후 장기간(2010~2030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의 총인구는 2020년 이후,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015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성, 연령별 취업확률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노동력 규모는 2020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구고령화로 인한 총량적 수준의 노동력 부족현상은 당면한 과제는 아니며, 2020년 이후를 대비한 거시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향후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서는 여성노동력, 고령노동력,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출산률을 제고(提高)하고 친고령·친여성적인 일자리 문화를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으로 우선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일부 산업 분야에서의 숙련노동자의 부족현상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바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조직 상층부의 관리직, 건설업, 육상운송업, 섬유, 의복, 가죽가방 제조업 등으로 나타난다. 일본에서 단카이 세대의 은퇴로 일부 제조업 부문에서 숙련인력의 부족이 문제시되었는데, 한국에서도 일부 제조업 부문에서 숙련근로자의 부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관련하여 세대 간 일자리 경합(競合)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세대에 주목한 것은 이 두 세대가 부모-자녀 세대이면서 전자는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앞둔 반면 후자는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하였거나 혹은 진입을 앞둔 집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의 관계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관해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세대의 일자리 지점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에코세대가 주로 임금부문의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자영업의 비중이 높고 상용직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두 세대 간 직·산업 분포 양상에 현격한 차이가 발견되는데, 이는 이들 두 세대 간 인적자본 수준이 상이하며, 노동시장이 이미 연령분절적인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우리나라 고령근로자의 은퇴연령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생명표를 작성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예상연령을 추정하여보았다. 그 결과 이들은 향후 10여 년간 노동시장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성·연령별 취업확률에 기초했을 때 2020년에도 약 375만 명이 노동시장에 잔존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은퇴’라는 개념은 안정적인 임금근로 후 은퇴하여 연금생활을 하는 일부 중산층 계급에 한정된 것으로 개념으로 늦은 나이까지 근로소득을 위해 노동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 실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고령취업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퇴직 후 경험하는 일자리들은 보통 이전 직장에 비해 임금이나 고용안정성 면에서 지위가 매우 하락한 일자리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인구감소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예견되는 바, 향후 고용시장 정책은 고령인력의 활용 및 재취업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태현 외(2007), 『한국고령화 진행과정의 중장기 예측』 노동부 정책용역보고서
- 김경아·김혜주(2009), 「라이프사이클 하에서의 자산과 소득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고미네 다카오(2008), 『인구감소·저출산 사회의 미래』
- 고희채(2005),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유동성제약과 저축률 연구」, 사회연구 통권 제9호 (2005. 4) pp.101-124
- 남상호(2007),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시사점」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경제학회
- 남상호(2008), 「가계자산 분배와 불평등도의 요인별 분해: 노동패널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 장지연 외(2009), 『중·고령자 근로생애사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장지연 외(2008), 『중·고령자 노동시장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장지연·호정화(2002), 「취업자 평균 은퇴연령의 변화와 인구특성별 차이」 『노동정책연구』 제2권 제2호, pp. 1~21
- 황수경(2005), 「노동생명표 작성법을 이용한 은퇴연령의 추정」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 이철선(2009),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현대경제연구원
- 이철용 외(2006),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LG경제연구원
- 이정우·이성림(2002), 「한국 가계자산 불평등의 최근 추이」 『노동정책연구』 1(2)(pp. 39~51)
- 여유진 외(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경애·최기홍(2006), 「증감노동생명표에 의한 노동기대여명의 측정과 전망」 한국인구학 제29권 제3호
- 박덕배(2005), 「베이비붐 세대(1995~63), 노후대책 막막하다」, 현대경제연구원
- 박원관(2001), 「생명표에 의한 한국 남성의 노동기간 변화」 『통계분석연구』 제6권 제1호
- 안병철(2001),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지역별 소비함수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21집 제1권 통권 제38호
- 안종범·전승훈(2004), 「은퇴결과 은퇴 전후의 소비의 상호작용」 『노동경제논집』 제27권 (3), pp.1~23
- 석상훈·장선구(2009), 「은퇴 전후의 소득 및 소비 비교: 성장곡선모형을 통한 분석」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 김경아(2007), 「국내 가계의 자산선택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 반정호(2007),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불평등 구조분석」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 안주엽(2005),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05~2020)』 한국노동연구원
- 안주엽(200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02~2010)』 한국노동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2007),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과 시사점」 『SERI 경제 포커스』
- 김명중(2005),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제노동동향』



- Vol3, No.9 한국노동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2009), 「VIP report: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 방안」 09-25
최성철(2007), 「베이비붐 세대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영민(2006),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학적 특성」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2009),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이철용·윤상하(2006),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LG경제연구원

2. 국외문헌

- Ahlburg, Dennis A. 1986. "A Relative Cohort Size Forecasting Model of Canadian Total Live Birth", *Social Biology* 33: pp. 51~56
- Bengston, V. L. 1993. "Is the Contract Across Generation' Changing?"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Obligations and Expectations Across Age Group", in Vern L. Bengstone and W. Achenbaum ed. *The Changing Contract Across Generations*: pp. 3~23. N. Y: Aldine De Gruyter.
- Berger, Mack C. 1981. "The Effect of the Baby Boom on the Earnings Growth of Young Males", Conference Paper No. 9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oaz, David. 1986. "Left, Right and Baby boom", *CATO Institute*
- Bouvier, Leon F. 1991. "The Baby Boom-Entering Midlife", *Population Bulletin* 46(3)
- Easterlin, Richard A. 1961. "The American Baby-Boom in Historical Perspective", *American Economic Review* 51: pp. 869~911
- Easterlin, Richard A. 1973. "Relative Economic Status and the American Fertility Swing", In *Family Economic Behavior*, ed. E. B. Sheldon, Philadelphia: Lippincott
- Easterlin, Richard A. 1993. "Will the Baby Boomers Be Less Well off than Their Parents? Income, Wealth, and Family Circumstances Over the life Cycle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 No. 3
- Freeman, Robert B. 1979. "The Effect of Demographic Factors on Age-Earning Profil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pp. 289~318
- Frey, William H. 2000. "America's Demography in the New Century: Aging Baby Boomers and New Immigrants as Major Players", *Milken Institute*
- Kecskemeti, P. ed. 1952. *Essay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by Mannheim, Karl*. N. Y.: Oxford Univ Press.
- Mannheim, K. 1997. "The Problem of Generation." *Studying Aging and Social Change :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Hardy, M. A. ed. London
- Horiuchi, Shiro. 1995. "The Cohort Approach to Population Growth: A Retrospective Decomposition of Growth Rate for Sweden", *Population Studies*, 49(1995), pp. 147~163
- Kahlert, Maureen B. 2001. "The Baby Boomer Generation - Impact on Public Libraries", 66th IFLA Council and General Conference

- Kotlikoff, Laurence J. 2004. "The Coming Generational Storm"
- Mannheim, Karl. 1928. "The Problem of Generation", in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urphy, James F. 1997. "Baby Boom Memories", *Tresanton Publishing*
- Pampel. 1993. "Relative Cohort Size and Fertility: The Socio-Political Context of the Easterin Effec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8: pp. 496~514
- Poulos, Stacy. 1997. "The Aging Baby Boom: Implications for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s", *U. S. Department of Labor*
- Pilcher, J. 1994. "Mannheim's Sociology of Generations: An Undervalued Legacy." in P. Rock. ed.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45: pp 481~499.
- Russel, L. B. 1982, "The Baby Boom Generation and the Economy", Washington, D.C. : The Brooking, Ins
- Ryder, Norman B. 1968. "Cohort Analysis"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David L. Sills, New York: MacMillan and Fress Press.
- Ryder, Norman B. 1965. "The Cohort in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pp. 843~861
- Ryder, Norman B. 1997.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Studying Aging and Social Change :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Hardy, M. A. ed. London
- Spitzer, Alan. B. 1973. "The Historical Problem of Generation" *American Historical Review*. 78: pp 1353~1385
- U. S Department of labor. 1997. "The Aging Baby Boom Implication for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s"

<http://www.census.gov/population/www/socdemo/age/>

<http://www.census.gov/acs/www/index.html>

<http://www.stat.go.jp/english/data/kokusei/2000/kihon1/00/00.htm>



〈부 록〉

〈부표 4-1〉 지역별 베이비붐 세대의 주요 특성치

	총인구수 (천명)	여성 인구 비	혼인 상태	교육 수준	평균 자녀 수	종교	5년전 거주 지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서울시	1,479	52.0	85.2	37.4	1.9명	63.5	경기 도	46.7	54.3
부산시	582	52.0	85.1	26.7	1.94명	26.8	경남	52.3	65.1
대구시	388	50.7	86.4	28.4	1.98명	30.7	경북	51.4	62.8
인천시	414	48.9	85.1	22.9	1.91명	66.4	경기 도	54.7	69.7
광주시	199	50.2	87.7	35.3	2.18명	62.4	전남	65.0	65.3
대전시	218	50.3	87.0	34.8	2.02명	52.8	충남	58.9	64.3
울산시	175	48.4	89.6	22.1	1.97명	25.6	부산	58.7	70.3
경기도	1,589	47.9	87.3	30.6	1.91명	60.6	서울	56.1	64.6
강원도	224	49.2	85.7	21.0	2.1명	48.1	서울	42.9	66.2
충 북	212	48.3	86.4	21.8	2.1명	45.7	경기 도	45.6	69.5
충 남	256	48.0	87.4	20.0	2.15명	51.7	경기 도	40.5	69.9
전 북	245	50.3	86.4	24.4	2.25명	66.4	서울	51.9	70.5
전 남	245	49.0	87.2	19.3	2.38명	58.9	광주	37.6	70.2
경 북	368	49.4	86.8	20.3	2.08명	30.4	대구	41.2	73.2
경 남	462	48.7	86.7	21.9	2.04명	23.5	부산	49.2	69.7
제주도	73	48.7	83.8	26.7	2.26명	33.4	서울	20.3	62.1

* 자료 : 인구총조사 10% 표본 자료(2005년)

** 혼인상태 : 기혼유배우 비중,
 교육수준 : 전문대졸 이상 비중,
 종교 : 기독교(천주교+개신교) 비중,
 5년 전 거주지 : 타 시도 중 최빈지,
 주택유형 : 아파트 비중,
 점유형태: 자가 비중

